

2008년 지역경제연구 자료집

지 역 경 제 연 구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목 차

제 1차 연구회	1
1. 충남 FDI의 현황과 정책과제	3
2. 충청지역의 산업연관분석	67
제 2차 연구회	129
1. 지역주택가격의 파급효과분석 : GVAR모형의 활용	131
2. 최근 일본지역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159
제 3차 연구회	191
1. 참여정부 지역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	193
2.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227
제 4차 연구회	287
1.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평가	289
2.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327
지역경제연구회 운영현황 및 성과	351



제 1차 연구회

1. 충남 FDI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 봉 환, 김 홍 기

2. 충청지역의 산업연관 분석

박 창 귀

충남 FDI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 봉 한 (공 주 대 학 교)

김 홍 기 (한 남 대 학 교)

목 차

I. 서론	11
II. 선행연구	13
III.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14
1. 국내의 FDI 동향	14
2. 충남의 FDI 동향	17
IV.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형태	23
1. 전국의 경우	23
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25
V.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36
1.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36
2.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39

V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47
VII.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 과제	52
1. 충남의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52
2.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53
VIII. 결론	59
참고문헌	64

표 목 차

<표 3-1> 시도별 외국인투자 금액의 추이	17
<표 3-2> 충남의 연도별 투자현황	18
<표 3-3>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6년 말 기준	20
<표 3-4> 2006년 충남의 유형별 투자현황	21
<표 3-5> 충남의 국가별 투자현황	21
<표 3-6> 2006년 충남의 업종별 투자실적	21
<표 3-7> 충남의 규모별 투자실적	22
<표 4-1>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등록 연도 추이: 시군별	26
<표 4-2>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	27
<표 4-3>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I	28
<표 4-4>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30
<표 4-5> 수도권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31
<표 4-6>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34
<표 4-7>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35
<표 5-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37
<표 5-2>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추이	37
<표 5-3>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투자비중 추이	38
<표 5-4> 1사당 평균 고용인원 변동 추이	38
<표 5-5>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 추이	39

<표 5-6> 충남 외투기업의 특성	40
<표 5-7>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41
<표 5-8>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수익성	41
<표 5-9>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안정성	42
<표 5-10>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성장성	42
<표 5-11>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과 투자효율	43
<표 5-12>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43
<표 5-13> 충남 내국기업과 외투기업의 차이성 검정결과: -검정	44
<표 5-14> 2006년 충남 업종별 투자실적	45
<표 5-15> 2006년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46
<표 6-1> 응답자 특성	48
<표 6-2> 분야별 개선 요구 사항	51
<표 7-1>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역	56

그림 목 차

<그림 3-1> 외국인 투자유입액 추이	14
<그림 3-2> 국별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00-2004년중)	15
<그림 3-3>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시도별 현황	19
<그림 4-1> 충남,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등록 추이	32
<그림 6-1>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	49
<그림 6-2> 경영환경 만족도 평가	49
<그림 6-3> 분야별 중요도 평가	50
<그림 6-4> 향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50
<그림 7-1> 황해경제자유구역	54

I. 서 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수출촉진 및 수입 대체를 통하여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대외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1998년 9월 17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절차 개선과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수요자 중심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Invest KOREA로 확대 재편(’03.12.5)하고,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지역산업발전과 연계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 파견 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포괄한다.

그러나 최근 FDI의 역작용을 지적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와 외자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련업계의 체계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외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희(2004)는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해 세부실행전략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외환위기 해소 및 구조조정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외자유치의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즉, 자본·인력 및 기술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철수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우려마저 낳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지역 또한 장기적으로는 무원칙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신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장점인 대규모 기업의 존재 등을 적극 활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을 개괄하고, 기존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최근 연구는 최근에는 거의 없고, 김억현(1999)이 본 연구자가 찾은 유일한 선행연구이다. 김억현(1999)은 분석기간이 1990년대 후반으로 최근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시사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억현(1999)의 경우는 계량분석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1990년대 후반에 충남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충남이 아닌 전국이나 여타 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남광희·윤성훈(2006), 김군수(2006), 울산발전연구원(2001), 경남발전연구원(2000), 및 이석희(2004) 등이 있다. 김군수(2006)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해서 해외첨단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효과분석을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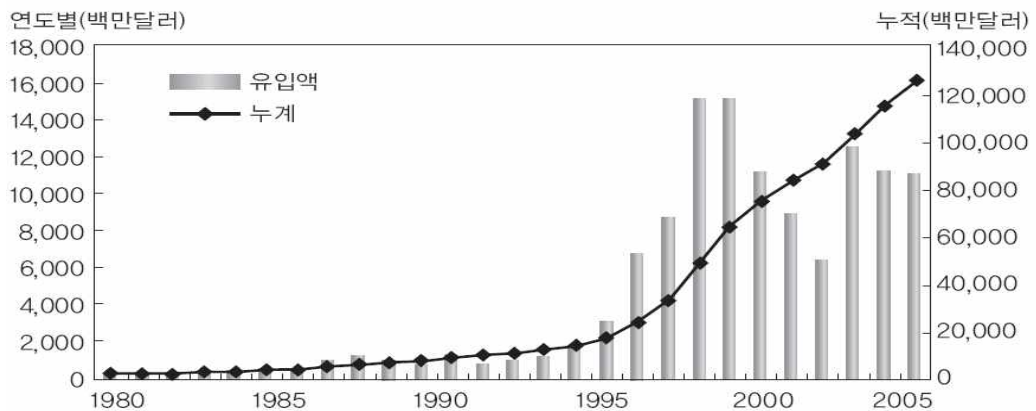
이러한 파급효과분석을 기초로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발전연구원(2001)은 울산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모형으로 추정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분석한 후 울산의 공업입지적 특성과 투자 유치 환경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외국투자유치 방안을 도출하였다. 경남발전연구원(2000)은 외국의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경남유치 방안을 연구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북잉글랜드 지방의 사례를 연구하여 경남에 외국의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석희(2004)도 경제 효과분석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영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Ⅲ.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1. 국내의 FDI 동향

FDI 유입액(산업자원부 신고액 기준)은 1980년대에 연평균 5.5억 달러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 89억 달러, 1999년에는 15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1-2002년 중에는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다가 2003년도에는 65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04년 중에는 조세감면 축소 계획 등의 영향으로 128억 달러 크게 증가한 후 2006년에는 11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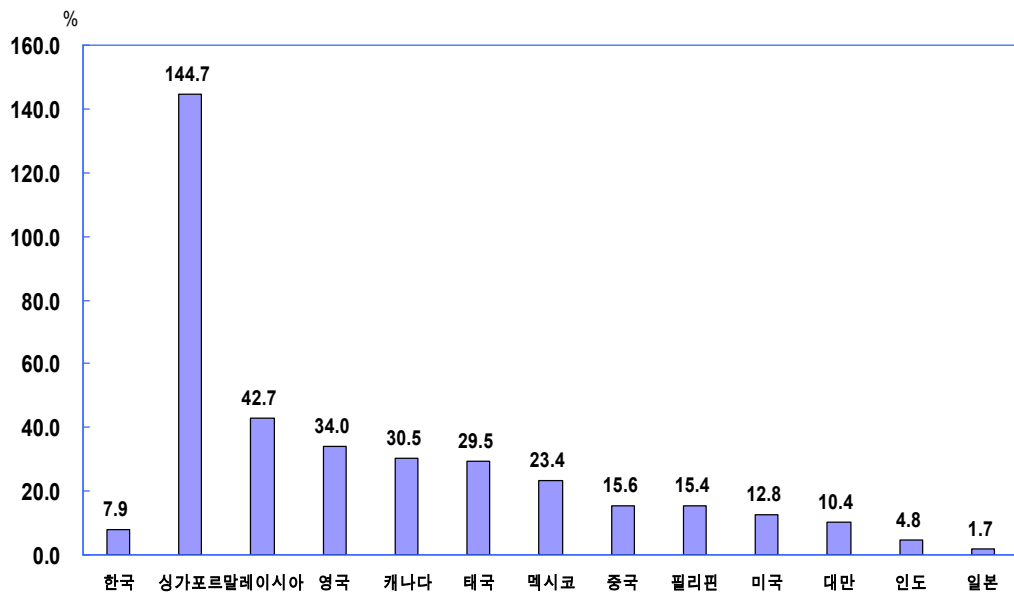
〈그림 3-1〉 외국인 투자유입액 추이



주: 신고액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절대적으로 열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2000-2004년중, 7.9%)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2%대에서 2005년 8.0%로 높아졌으나 전세계, 개도국 및 동남아 등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2〉 국별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00-2004년중)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FDI inward stock/GDP)

2006년 누계기준으로 전체 FDI 유입액이 1,267억 달러인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8억 달러로서 42.5%를 차지하였고, 서비스업은 666억 달러로 52.6%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왔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8%, 2004년 48.6%, 2006년 37.8%를 차지하였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년 64.1%, 2004년 48.0%, 2006년 58.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집중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2001-2006년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 12.0%, 화공 6.0%, 운송용 기계 4.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제조업종 내에서 과거와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유입실적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동기간 중 서비스업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금융·보험(23.4%)이다. 2004년까지 누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도·소매업종은 동기간중 8.7% 차지하는데 그쳐 비중이 두 번째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심의 EU에서 주로 유입되었다. 2006년 누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366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전체 유입액의 28.9%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각각 전체 유입액의 15.4%인 195억 달러와 10.9%인 13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미국은 주로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및 문화·오락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한 반면 네덜란드는 식품, 의약, 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유입 순위는 과거 누계 기준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투자실적을 보면, 인수합병을 위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형 투자보다 신설형(Greenfield) 투자인 공장설립 혹은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즉 1998년 이전까지 M&A형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신설형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시 M&A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신설형 투자 비중은 51.8%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이후 1억달러 미만의 중소기업모 투자비중이 상승하였다. 1억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비중이 2002년 중 전체의 65.4%에서 2005년 중 52.5%로 낮아지고 1억달러 미만 투자비중은 47.5%로 상승하여 투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율 상승 추세이다. 2005년 들어 회수규모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37%로 상승하였다. 2000-2004년 중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20% 내외였으나 2005년에는 37.0%로 크게 상승한 결과 순투자(도착액-회수액) 기준 세계 순위는 2004년 16위에서 2005년 27위로 크게 하락하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충남의 FDI 동향

지역별 외국인 투자금액은 서울, 경기 및 인천의 수도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90년대 34.5%와 12.9%에서 2000년대에 42.7%와 14.%%를 기록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1970 - 2006년 동안 약 10배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표 3-1〉 시도별 외국인투자 금액의 추이

(단위 : 천달러, %)

구분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6	순 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이후
전국	1,419,915 (100.0)	5,501,389 (100.0)	41,959,260 (100.0)	71,367,833 (100.0)	-	-	-	-
충남	2,528 (0.2)	115,864 (2.1)	2,299,026 (5.5)	4,341,795 (6.1)	13	10	5	3
서울	396,696 (27.9)	1,912,171 (34.8)	14,459,316 (34.5)	30,498,020 (42.7)	1	1	1	1
부산	14,968 (1.1)	424,454 (7.7)	911,949 (2.2)	1,792,928 (2.5)	8	4	14	9
대구	2,847 (0.2)	84,333 (1.5)	181,234 (0.4)	350,787 (0.5)	12	13	16	16
인천	29,476 (2.1)	157,715 (2.9)	1,180,932 (2.8)	3,834,657 (2.8)	6	9	10	4
광주	-	109,301 (2.0)	799,914 (1.9)	959,580 (1.3)	15	11	15	11
대전	-	60,479 (1.1)	1,382,006 (3.3)	630,666 (0.9)	15	15	8	14
울산	65,545 (4.6)	305,443 (5.6)	1,278,834 (3.0)	757,427 (1.1)	4	5	9	13
경기	73,319 (5.2)	769,818 (14.0)	5,403,120 (12.9)	10,367,073 (14.5)	3	2	2	2
강원	105 (0.0)	28,673 (0.5)	980,070 (2.3)	1,891,691 (2.7)	14	16	13	8
충북	11,741 (0.8)	211,973 (3.9)	1,064,196 (2.5)	2,009,376 (2.8)	10	7	12	7
전북	12,524 (0.9)	92,421 (1.7)	1,687,105 (4.0)	534,764 (0.7)	9	12	7	15
전남	29,476 (2.1)	190,767 (3.5)	1,072,088 (2.6)	1,310,404 (1.8)	6	8	11	10
경북	42,424 (3.0)	240,471 (4.4)	3,483,669 (8.3)	2,231,496 (3.1)	5	6	3	6
경남	171,756 (12.1)	433,768 (7.9)	2,732,549 (6.5)	851,356 (1.2)	2	3	4	12
제주	3,972 (0.3)	64,422 (1.2)	2,245,510 (5.4)	3,394,560 (4.8)	11	14	6	5
미정	562,238 (39.6)	299,316 (5.4)	797,742 (1.9)	5,611,033 (7.9)	-	-	-	-

주: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조택희 · 전일명(2006)

특히 1980년대 26.7%의 비중을 보이던 서울이 2000년대에는 55.1%의 비중을 보여 외국인 투자건수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은 1970년대 14억 달러에서 2000년대 713억 달러로 51배 증가하였는데, 투자건수는 10.6배 증가하여 건당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국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투자금액으로 1980년대에 1.1억 달러로 전국의 2.1%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2.2억 달러로 전국의 5.5%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4.3억 달러로 전국적 비중이 6.1%로 상승하였다. 투자금액의 순위도 1970년도에 13위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에 5위 그리고 2000년도에는 3위로 상승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투자건수로는 90년대에 3위를 기록하였다가 2000년대에 7위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충남의 건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충남의 최근 5년간 투자유치건수 및 금액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00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총42건으로 안면도 개발을 포함하여 12억 달러(신고기준)의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Greenfield 중심 투자유치전략과 IT, 자동차부품 제조업종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규모 첨단제조업인 S-LCD 유치와, 덴소풍성, 네스디스플레이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2005년도는 투자건수가 급속히 신장되었으나 유치금액은 3억달러로 급감하였다. 2006년도는 유치건수는 37을 기록하였으나 유치금액이 1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표 3-2〉 충남의 연도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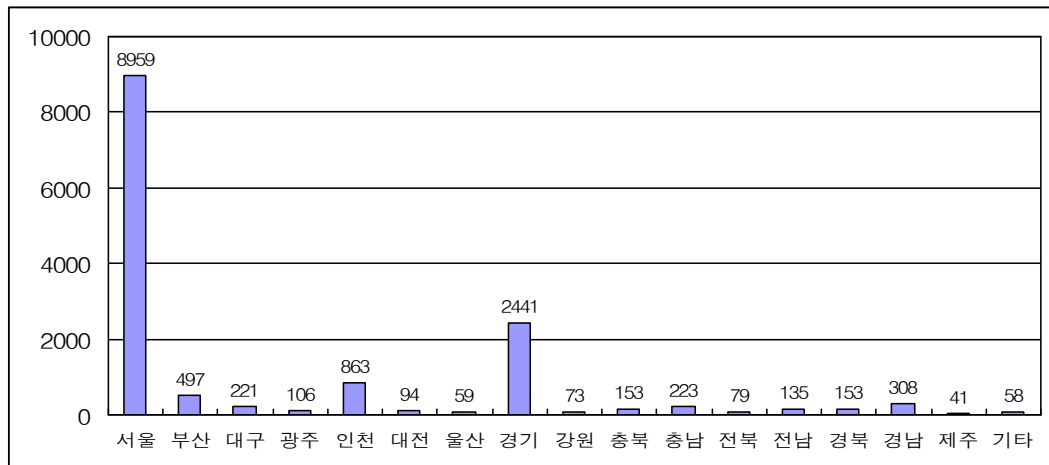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 달러)

지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충남	건수	38	41	26	42	70	37
	유치실적	491	581	701	1,200	329	1,331
서울	건수		1,339	1,488	1,483	1,620	
	유치실적		2,266	3,933	5,580	6,853	
경기	건수	486	318	375	434	457	
	유치실적	2,087	823	470	1,362	1,033	
전국	건수	11,286	9,093	2,564	3,073	3,667	3,111
	유치실적	3,344	2,409	6,469	12,786	11,563	11,236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말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14,46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의 순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서 수도권에 외자기업의 85%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23개로서 전국의 1.5%를 차지하였다.

〈그림 3-3〉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시도별 현황



자료: 산업자원부

그리고 산업별 분류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3.6%와 75%로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86.6%이고 제조업 비중이 12.3%로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73.5%와 25.2%를 차지하여 충남의 경우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6년 말 기준

(단위: 업체수, %)

구분	충남		서울		경기		총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농축수산업 및 광업	0	0.0	14	0.2	9	0.4	54	0.4
제조업	164	73.5	1,103	12.3	961	39.4	3,416	23.6
전기 가스 수도 건설	3	1.3	79	0.9	20	0.8	148	1.0
서비스업	56	25.2	7,762	86.6	1,451	59.4	10,844	75.0
총계	223	100.0	8,958	100.0	2,441	100.0	14,462	100.0

자료: 산업자원부

2006년의 경우 유형별로는 증자가 신규보다 건수나 금액에 있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가별로 일본이 건수와 금액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금액으로는 네덜란드가, 건수로는 중국의 투자가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기타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홍콩, 호주 등에서 크고 작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사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의 경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금액상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고, 석유화학과 기계, 자동차 등에서도 많은 FDI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만 달러 이상이 20건이나 되어, 충남의 FDI는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4〉 2006년 충남의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 천\$)

유형	합계		신규		증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37	1,331,304	11	70,268	26	1,261,036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5〉 충남의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천\$)

연도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기타	합 계
2003	건수	7	8	3	-	-	-	3	-	9	30
	금액	91,125	15,477	387,521	-	-	-	186	-	207,367	701,646
2004	건수	13	12	1	-	-	-	1	-	15	42
	금액	83,111	967,371	3,000	-	-	-	43	-	147,200	1,200,725
2005	건수	13	24	4	1	-	-	-	-	28	70
	금액	105,550	44,167	66,821	76,500	-	-	-	-	36,006	329,044
2006	건수	4	13	-	2	1	1	6	2	8	37
	금액	2,239	1,053,451	-	231,065	2,350	2,000	405	3,650	36,144	1,331,304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6〉 2006년 충남의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 : 천\$)

구분	합계	자동차	전기전자	특수가스	기계	음식숙박	석유화학	기타
계	37	3	5	1	5	2	4	17
	1,331,304	31,452	968,944	5,482	11,194	113	303,739	10,380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7〉 충남의 규모별 투자실적

(단위 : 건)

연도	10만달러 미만	10만달러~ 50만달러	50만달러 이상~ 100만 달러	100만달러 이상~ 500만 달러	500만달러 이상	합계
2003	12	6	3	5	4	30
2004	8	7	1	12	14	42
2005	28	13	5	15	9	70
2006	7	9	1	9	11	37

자료: 충남도정백서

IV.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형태

1. 전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대표적 연구로는 차미숙·정윤희(2002)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이용해서 충남소재 외자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차미숙·정윤희(2002)이 발견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등 중심도시 및 대도시의 선호경향이 크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지분포의 격차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부지역과 일부업종의 집적강화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기계, 전자부품 및 화합물 등의 업종에서 집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동종·관련업체 집적지역과 유사하다. 셋째, 제조업 FDI기업의 계획입지 내 선호경향 뚜렷하다. 제조업 FDI기업의 1/4인 23.5%(613개소)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입지 내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 분포(13.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차미숙·정윤희(2002)은 설문조사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기업의 입지행태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외투기업이 “단계적·점진적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밟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입지

특성의 또 다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가 주요 입지결정요인으로 포착되었다. 제조업 FDI기업들의 입지결정에는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단계적 및 점진적인 입지이동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FDI기업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에 따른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을 위해 중심도시 및 대도시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다가, 생산활동 확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지방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계획입지로 이동하는 단계적, 점진적인 입지이동경향을 보인다. 셋째,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account management) 추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미숙·정윤희(2002)은 외국인직접투자 제조기업의 지역연계 실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지역내 원부자재 및 물자구매비율이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지역내(해당시도) 구매비율이 15.2%에 불과하며, 해외(수입)조달비율은 33.6%로 지역내 연계보다 해외와의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활동 의사결정에 해외 모기업과의 협의 및 합의절차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도권내 사업지원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2/3이상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 금융 및 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를 수도권의 전문서비스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지역내 생산직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의 평균고용규모가 117명으로 국내 제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편이며, 지방 FDI기업이 수도권 FDI기업에 비해 약 1.8배의 고용규모를 보였다. FDI기업들은 생산직 인력의 대부분을 해당 시·도나 시·군 내에서 수시 조달하며, 전문직·관리직은 전국적 수준에서 공채 등에 의해 충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기술이전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 가운데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며, 기술이전활동에 있어서도 생산공정개선, 기존제품 개량수준이 대부분으로 핵심기술 등의 이전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행태를 보였다. 다섯째, 국내 FDI 기업들은 지역연계의 가설적 형태에 있어서 발전적 모형(developmental model) 보다는 의존적인 모형(dependency model)의 지역연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²⁾. FDI기업의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 수는 224개로 조사되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87개였던 외투기업수가 7년 동안에 138개 증가하였다. 충남 외투기업의 입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24개 외투기업 중 천안에 47%인 106개가 소재하고 있고, 아산시에는 16.7%가 소재하고 있어 천안시와 아산시에 63.4%가 집적되어 있다. 이는 1999년 말 기준의 73.5% 보다는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2004년을 제외하고는 천안시가 외투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24개로 업체수는 3위를 차지하였지만 주로 도소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10개 미만의 외투기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에는 외투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Turok(1993)은 외투기업과 지역내 업체간의 관계유형에 따라 발전모형과 의존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발전모형(development model)은 외투기업과 지역내 업체간에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력적·기술적인 형태로서,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긴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화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의존모형(dependency model)에서 외투기업은 비용최소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여 지역기업과의 하청관계 등 외투기업과 지역기업간에 불평등 교역관계를 주로 형성한다. 단기계약위주로 지역기업과 약한 유연성 정도를 지니며, 수직적인 통제에 의해 지역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4-1〉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등록 연도 추이: 시군별

시군	1999년 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년 업체수
천안시	46	7	6	9	9	3	11	9	6	106
예산군	2	1	0	1	0	0	1	1	1	7
홍성군	1	0	1	0	0	0	1	0	0	3
아산시	18	1	0	1	4	3	4	1	4	36
공주시	2	0	1	0	1	15	3	0	2	24
논산시	0	0	0	0	0	2	0	0	0	2
당진군	3	0	2	1	2	2	0	0	2	12
부여군	0	0	1	0	1	0	0	1	0	3
서산시	3	1	0	0	1	1	0	1	0	7
보령시	3	1	0	0	0	0	0	1	0	5
연기군	6	1	2	0	2	0	0	1	2	14
금산군	2	0	0	0	0	0	0	0	0	2
청양군	1	0	0	0	0	0	0	0	0	1
태안군	0	0	0	0	0	0	1	1	0	2
서천군	0	0	0	0	0	0	0	0	0	0
계	87	12	13	12	20	26	21	16	17	224

자료: 산업자원부

둘째, 충남소재 외투기업의 업종별분포를 보면 도소매업(41개), 화학제품(36개), 전기전자(35개), 수송장비(30개) 및 일반기계(24개)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인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및 일반기계의 집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시에 화학제품(14개), 전기전자(21개), 수송장비(14개) 및 일반기계(20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아산시에도 화학제품(9개), 전기전자(6개) 및 수송장비(7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주시에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이 16개가 위치하고 있다.

〈표 4-2〉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

산 업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군	부여군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0
광산물	0	0	0	0	0	0	0	0
음식료품	2	1	0	3	0	0	0	0
섬유 및 가죽제품	0	0	0	1	0	0	0	0
목재 및 종이제품	1	0	0	0	0	0	0	0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0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0	0	0	0	0
화학제품	14	4	1	9	2	0	0	0
비금속광물제품	2	0	0	1	0	1	1	1
제1차금속	1	0	0	1	0	0	3	0
금속제품	2	0	0	1	0	0	0	0
일반기계	20	0	0	2	1	1	0	0
전기전자기기	21	0	0	6	2	0	1	0
정밀기기	1	0	0	0	1	0	0	0
수송장비	14	2	0	7	0	0	3	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3	0	2	2	0	0	0	0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0	0	0	1	0
건설	1	0	0	0	0	0	0	0
도소매	16	0	0	1	16	0	2	2
음식점 및 숙박	2	0	0	0	1	0	0	0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0	0	0	1	0	0	0	0
금융 및 보험	1	0	0	0	1	0	0	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	0	0	0	0	0	0	0
교육 및 보건	1	0	0	1	0	0	0	0
기타	2	0	0	0	0	0	1	0
합계	106	7	3	36	24	2	12	3

자료: 산업자원부

〈표 4-3〉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I

산 업	서산시	보령시	연기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계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광산물	0	0	0	0	0	0	0
음식료품	0	0	1	0	0	0	7
섬유 및 가죽제품	0	1	0	0	0	0	2
목재 및 종이제품	0	0	0	1	0	0	2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석유 및 석탄제품	1	0	0	0	0	0	1
화학제품	3	1	0	1	1	0	36
비금속광물제품	0	1	1	0	0	0	8
제1차금속	0	0	0	0	0	0	5
금속제품	0	1	0	0	0	0	4
일반기계	0	0	0	0	0	0	24
전기전자기기	0	0	5	0	0	0	35
정밀기기	0	0	1	0	0	0	3
수송장비	1	0	3	0	0	0	3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	0	0	0	0	0	7
전력, 가스 및 수도	1	0	0	0	0	0	2
건설	0	0	0	0	0	0	1
도소매	0	1	1	0	0	2	41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3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0	0	0	0	0	0	1
금융 및 보험	0	0	1	0	0	0	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	0	0	0	0	0	3
교육 및 보건	0	0	0	0	0	0	2
기타	0	0	1	0	0	0	4
합계	7	5	14	2	1	2	224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의 경우 제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많은 업종의 순위가 전기전자(296), 화학제품(189), 일반기계(146) 및 섬유 및 가죽제품(115)이다. 경기도의 경우 제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많은 업종의 순위가 전기전자(296), 일반기계(191), 화학제품(125) 및 수송장비(70)이다. 서울과 경기도와 비교해서 충청도의 경우 화학제품과 수송장비의 비중이 높고, 전기전자의 비중은 유사하며 일반기계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청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4→41)하였고, 전기전자(12→35) 및 수송장비(14→30)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2005-2007년 중에, 수송장비는 2002-2004년 중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표 4-4〉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0	0	0
광산물	0	0	0	0	0	0	0	0	0	0
음식료품	4	0	1	0	0	0	0	2	0	7
섬유 및 가죽제품	1	0	0	0	0	0	0	1	0	2
목재 및 종이제품	2	0	0	0	0	0	0	0	0	2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0	0	0
석유, 석탄제품	1	0	0	0	0	0	0	0	0	1
화학제품	19	2	1	1	4	1	2	2	4	36
비금속광물제품	4	1	0	0	0	1	1	1	0	8
제1차금속	2	0	0	0	2	0	0	0	1	5
금속제품	2	0	1	1	0	0	0	0	0	4
일반기계	14	2	0	0	1	4	1	1	1	24
전기전자기기	12	3	2	1	2	2	5	3	5	35
정밀기기	2	0	1	0	0	0	0	0	0	3
수송장비	14	1	1	3	4	3	1	2	1	3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	0	1	2	0	0	1	1	1	7
전력, 가스 및 수도	1	0	0	0	0	1	0	0	0	2
건설	0	0	0	1	0	0	0	0	0	1
도소매	4	2	3	2	6	14	5	2	3	41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1	1	1	0	0	3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1	0	0	0	0	0	0	0	0	1
금융 및 보험	2	0	0	0	0	0	1	0	0	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0	0	0	0	0	0	0	0	0
교육 및 보건	0	0	0	0	0	0	2	0	0	2
기타	1	1	1	1	0	0	1	1	1	7
합계	87	12	12	12	20	27	21	16	17	224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852→5,091)하였고, 전기전자(108→296) 및 섬유·가죽(50→115)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103→1,116)하였고, 전기전자(93→296) 및 수송장비(31→70)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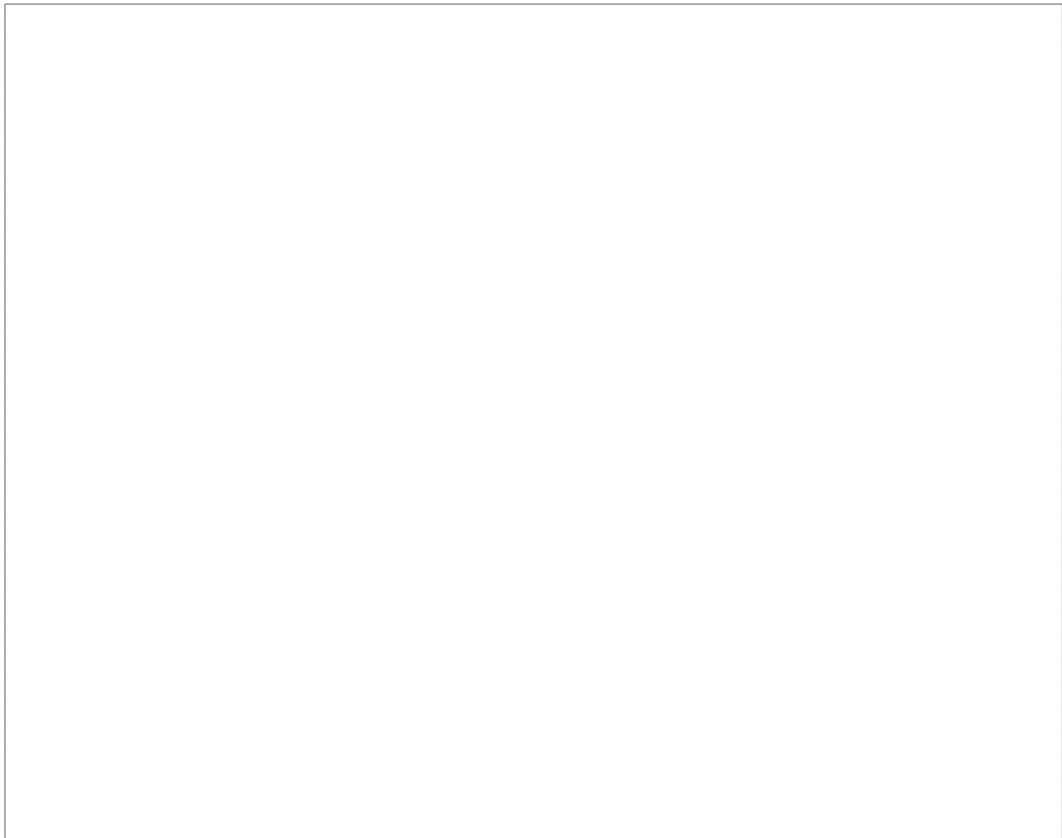
〈표 4-5〉 수도권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4	0	2	0	3	0	0	3	2	14
광산물	2	1	0	0	0	1	1	1	1	7
음식료품	51	11	4	4	6	8	8	4	2	98
섬유 및 가죽제품	72	13	14	6	7	9	13	8	5	147
목재 및 종이제품	17	3	1	0	3	1	5	4	1	35
인쇄, 출판 및 복제	15	9	5	1	4	9	2	3	4	52
석유, 석탄제품	9	2	0	0	2	1	0	0	0	14
화학제품	185	26	13	21	14	16	26	24	10	335
비금속광물제품	28	4	3	6	0	4	4	5	4	58
제1차금속	23	2	1	0	2	9	5	2	3	47
금속제품	50	5	7	1	2	5	6	5	6	87
일반기계	204	35	22	19	22	27	31	27	18	405
전기전자기기	229	73	47	35	40	68	61	52	49	654
정밀기기	71	10	7	11	9	6	12	12	5	143
수송장비	55	11	6	8	12	12	10	8	10	13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43	10	9	5	2	3	6	5	6	89
전력, 가스 및 수도	1	1	1	1	1	1	0	2	1	9
건설	24	7	4	6	9	10	10	12	10	92
도소매	976	829	626	416	578	784	1143	708	718	6778
음식점 및 숙박	70	31	37	33	41	52	48	49	55	416
운수 및 보관	103	23	16	20	22	27	29	36	24	300
통신 및 방송	15	9	6	4	5	4	6	2	6	57
금융 및 보험	72	35	53	62	38	46	45	44	35	43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	15	16	13	16	19	30	29	27	184
교육 및 보건	17	4	11	6	5	6	14	11	9	83
기타	365	195	150	106	102	158	180	194	146	1596
합계	2720	1364	1061	784	945	1286	1695	1250	1157	12262

자료 : 산업자원부

넷째,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 외투기업의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충남도가 외투기업유치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투기업의 등록 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4-1>에서 충남도,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외투기업의 등록추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의 그림이고, 행별로 위에서 차례로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및 수송장비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충남도와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간에 뚜렷한 부(-)의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³⁾

〈그림 4-1〉 충남,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등록 추이



3) 충남도와 수도권 외투기업의 등록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화학제품만 -0.37이고 일반기계는 0.46, 전기전자는 0.35 및 수송장비는 0.39의 양의 값을 보였다.

패널회귀식을 이용해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하는 가의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충남도의 제조업 14개 업종의 외투기업 등록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도권의 14개 업종의 외투기업 등록수와 충남의 GRDP를 설명변수로 하는 다음의 패널회귀식을 고려한다.

$$NF_{it}^{CN} = \beta_0 + \beta_{1i} NF_{it}^{CAP} + \beta_2 \Delta \log(GRDP_t^{CN}) + \epsilon_{it}$$

여기서 NF_{it}^{CN} 은 t 년도에 i 업종에 대한 충남도의 외투기업 등록수이고, NF_{it}^{CAP} 은 t 년도에 i 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이며, $GRDP_t^{CN}$ 은 t 년도의 충남도의 실질 GRDP이다. 추정기간은 2000-2006년이고 업종은 14개의 제조업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β_1 의 추정치가 유의적으로 음수이면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추정법으로 위의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첫째는 β_1 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같다는 제약하에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β_1 의 추정치가 0.0442이고 p -값이 0.000이어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표 4-6〉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수도권 외투기업 등록수	0.0442	0.000
충남의 GRDP 증가율	2.1528	0.588
음식료품	-0.0218	
섬유 및 가죽제품	-0.3939	
목재 및 종이제품	-0.2546	
인쇄, 출판 및 복제	-0.3279	
석유, 석탄제품	-0.1996	
화학제품	0.5282	
비금속광물제품	0.1182	
제1차금속	-0.0658	
금속제품	-0.1116	
일반기계	-0.0832	
전기전자기기	-0.0355	
정밀기기	-0.3802	
수송장비	1.0699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1578	
상수	0.0829	0.809
R^2	0.3672	

둘째는 β_1 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상이하다는 제약하에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β_1 의 추정치가 유의적인 업종은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및 수송 장비업인데 모두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표 4-7〉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충남의 GRDP 증가율	3.5935	0.084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음식료품	-0.0242	0.675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섬유 및 가죽제품	-0.0130	0.672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목재 및 종이제품	-0.0788	0.465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인쇄, 출판 및 복제	-0.0402	0.479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석유, 석탄제품	-0.1540	0.568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화학제품	0.0732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비금속광물제품	0.0821	0.298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제1차금속	-0.0181	0.811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금속제품	0.0006	0.992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일반기계	0.0418	0.001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전기전자기기	0.0430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정밀기기	-0.0170	0.609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수송장비	0.1967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712	0.157
R^2	0.600	

V.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먼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절대적으로 열위의 상태이다. 2005년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잔액(UNCTAD통계 기준)은 632.0억달러로서 태국(565.4억달러), 말레이시아(477.7억달러), 대만(419.3억달러)보다는 크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절대규모면에서 열위에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작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인 영국 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5-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의 점유율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 출	11.6	79.5	36.1	35.9	24.4	2.6
고 용	8.5	49.2	20.4	30.8	16.6	-
부가가치	11.1	86.7	26.8	35.8	-	-

자료 : 산업자원부(2004)

〈표 5-2〉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FDI flows/총고정자본형성		
	2003	2004	2005
세 계	7.3	7.7	9.4
선 진 국	6.4	6.3	8.0
(영 국)	5.8	16.2	45.0
(프 랑 스)	12.5	8.0	15.5
(미 국)	2.6	5.5	4.0
개 도 국	9.3	10.7	12.8
(홍 콩)	40.6	96.4	97.0
(싱가포르)	46.5	58.0	78.9
(말레이시아)	10.8	19.1	15.2
(중 국)	8.6	8.0	9.2
(태 국)	5.7	3.4	7.2
(한 국)	2.1	3.8	3.1
(대 만)	0.8	2.8	2.3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셋째, 소재부품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2005년 중 각각 약 18%에 그쳐 2001-2005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선진국 및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사업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표 5-3〉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투자비중 추이

(단위 : %)

기타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소재부품산업	13.2	13.6	19.6	33.6	18.3	19.7
지식기반 제조업	24.7	23.0	15.1	31.4	18.3	22.5

자료 : 한국은행(2007)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국내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2002년 370명에서 2005년 412명으로 증가하였다. 100인 이상 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700명대 수준을 유지(국내기업은 285명 내외 수준) 하였다).

〈표 5-4〉 1사당 평균 고용인원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370	395	401	412
(제조업)	358	375	378	397
(서비스업)	401	438	451	448
100인이상 외국인투자기업1)	707	717	698	706
100인이상 국내기업2)	284	282	285	-

주: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수/100인이상 사업체수,

2) 국내기업의 경우 통계청의 종사자수/100인 이상 사업체수 로 계산

자료 : 한국은행(2007)

- 4) 한국은행(2007)은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신용평가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양자가 일치된 기업을 추출(1,177개)하여 동 자료를 토대로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의 경우는 분석대상인 2002-2005년중 고용인원이 있는 기업(922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국내기업보다 더 높고 수익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성장성면에서도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기업 유형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증가율	외국인투자기업	11.8	10.1	18.3	8.8
	국내기업	7.3	4.0	13.3	4.3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6.4	7.0	7.0	6.1
	국내기업	5.7	6.4	6.8	5.9
매출액 경상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5.3	5.4	7.9	6.7
	국내기업	4.3	4.8	7.0	6.2

주 : 1)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목록과 한국신용평가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양자가 일치된 기업을 추출(1,177개)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상인 연간매출액 25억원 이상인 4,738업체

자료 : 한국은행(2007)

2.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미시적 자료의 활용

충남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자원부의 2006년 외국투자기업현황에서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의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 기업 중 (주)한국신용평가의 「Kis-Line」에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104개의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서 충남도 소재 국내 제조업체로서 「Kis-Line」에 기업정보가 수록된 836개의 기업의 데이터도 사용하였다. 104개의 충남 소재 외투기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 5-6>에 요약되어 있다.

〈표 5-6〉 충남 외투기업의 특성

구 분		업체 수	평균
설립연도	1989년 이전	41	-
	1990-1999년	45	
	2000년 이후	18	
외국인 지분율	20% 미만	15	59.7%
	21 - 49%	34	
	50 - 89%	18	
	90 - 100%	38	
외국인 투자액	40만 달러 미만	21	330.5만 달러
	41만 -200만 달러 미만	20	
	201만 -1000만 달러 미만	32	
	1000만 달러 이상	31	
업 종	제조업	97	-
	비제조업	7	

설립연도는 주로 1999년 이전이고 2000년 이후는 18개 업체이다. 외국인 지분률은 평균 59.7%인데 50% 이상인 기업의 수가 56개이다. 외국인 투자액은 평균 330만 달러이고 천만 달러가 넘는 업체도 31개이다.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이다.

충남소재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기초정보가 <표 5-7>에서 <표 5-13>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표의 기술적 통계치를 통해서 보면 충남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량과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사당 평균고용인원은 2000-2006년 중 국내기업에 비해 대략 100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한국은행(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수익성이 외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투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서 외투기업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고용량 (명)	외투기업	286.0	275.3	252.4	269.7	262.8	275.0	290.5
	국내기업	170.0	165.0	174.4	175.3	176.8	177.3	194.1
매출액 (억원)	외투기업	1,666.1	1,589.0	1,324.9	1,324.3	1,668.6	2,085.7	2,543.4
	국내기업	546.3	549.3	547.2	574.1	675.0	794.2	913.9
수출 (억원)	외투기업	960.4	886.5	851.4	1,079.8	1,291.2	1,329.0	1,522.2
	국내기업	290.2	317.2	396.6	447.0	579.7	675.2	757.9

〈표 5-8〉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수익성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총자본경상 이익률	외투기업	7.0	7.4	7.3	7.5	9.7	8.9	7.1
	국내기업	6.7	5.7	5.4	5.8	6.0	4.9	3.8
자기자본순 이익률	외투기업	16.4	11.6	17.6	11.2	15.7	11.7	9.4
	국내기업	15.4	14.7	5.3	12.0	12.0	9.7	5.7
매출액경상 이익률	외투기업	3.0	0.3	3.1	-32.5	4.5	1.1	-2.3
	국내기업	0.8	-32.8	-7.1	-57.5	-4.0	-3.0	-2.3
매출액영업 이익률	외투기업	4.8	2.2	4.6	-23.7	5.6	3.2	2.4
	국내기업	4.4	-24.0	-3.4	-15.1	-2.4	-1.0	-0.6

〈표 5-9〉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안정성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자기자본 비율	외투기업	40.9	42.1	47.0	47.8	49.8	51.7	53.1
	국내기업	37.5	39.2	40.4	41.3	41.7	42.8	43.2
부채비율	외투기업	201.1	2378.4	172.5	178.0	165.5	176.9	141.3
	국내기업	273.2	610.6	379.0	513.4	341.9	339.8	256.5

넷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로 성장성을 판단할 때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에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투자효율성에서도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섯째,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률은 높고 사내유보율은 낮아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10〉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성장성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총자산 증가율	외투기업	30.7	16.4	28.3	20.8	25.2	22.5	13.4
	국내기업	57.0	242.0	29.1	37.5	23.7	19.3	20.0
매출액 증가율	외투기업	76.4	52.0	107.9	45.5	182.4	89.8	15.6
	국내기업	113.3	176.7	76.9	50.6	232.8	54.1	28.7
유형자산 증가율	외투기업	80.8	58.2	1034.2	26.6	79.6	29.3	6.2
	국내기업	202.5	333.0	272.4	257.5	67.7	25.7	133.7

〈표 5-11〉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과 투자효율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부가가치율	외투기업	25.0	36.3	28.2	23.4	29.6	22.6	26.3
	국내기업	25.6	8.5	24.7	19.6	23.8	23.4	23.6
총자본투자 효율	외투기업	30.1	31.9	31.1	32.3	37.6	34.4	32.1
	국내기업	35.0	33.6	33.8	33.8	34.2	32.0	28.8
설비투자 효율	외투기업	107.8	148.5	107.2	104.2	137.7	133.1	149.4
	국내기업	130.4	174.1	191.0	147.4	139.2	135.9	144.4

〈표 5-12〉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구분	기업유형	00	01	02	03	04	05	06
배당율	외투기업	683.2	45.6	148.2	159.6	161.0	113.0	91.0
	국내기업	209.2	75.3	56.8	67.6	71.1	45.6	40.6
배당성향	외투기업	36.8	39.8	41.1	53.1	54.3	43.0	45.3
	국내기업	34.8	75.6	33.8	40.5	41.8	48.1	49.0
사내 유보율	외투기업	87.1	85.7	88.4	84.5	83.6	88.8	88.9
	국내기업	93.1	92.6	94.1	93.4	93.6	94.6	93.6

〈표 5-13〉 충남 내국기업과 외투기업의 차이성 검정결과: *t*-검정

구분	2003	2004	2005
고용량	2.4349* (0.01)	2.8372* (0.00)	2.5707* (0.01)
매출액	2.4915* (0.01)	2.5306* (0.01)	2.6558* (0.00)
수출	1.2534 (0.21)	1.0936 (0.27)	1.0901 (0.27)
부가가치	1.7545 (0.08)	0.3210 (0.74)	0.1330 (0.89)
총자본경상이익률	2.5283* (0.01)	2.7552* (0.00)	2.1627 (0.03)
자기자본순이익률	0.7917 (0.42)	0.5522 (0.58)	1.0588 (0.29)
매출액경상이익률	0.8074 (0.41)	0.5148 (0.60)	-0.0012 (0.99)
매출액영업이익률	0.7826 (0.43)	0.6655 (0.50)	0.7307 (0.46)
자기자본비율	3.4477* (0.00)	3.8249* (0.00)	4.0882* (0.00)
부채비율	-1.3113 (0.19)	-1.0029 (0.31)	-2.8218* (0.00)
총자산증가율	0.2349 (0.81)	0.7218 (0.47)	-1.3032 (0.19)
매출액증가율	0.2096 (0.83)	0.4030 (0.68)	-0.6339 (0.52)
유형자산증가율	-0.1224 (0.90)	0.6784 (0.49)	-0.9062 (0.36)
부가가치율	1.3372 (0.18)	-0.2169 (0.82)	0.7644 (0.44)
총자본투자효율	1.2406 (0.21)	0.7733 (0.43)	1.2588 (0.20)
설비투자효율	-0.0409 (0.96)	-0.0589 (0.95)	0.0803 (0.93)
배당율	1.4393 (0.15)	2.1937 (0.02)	1.9230* (0.05)
배당성향	1.2717 (0.20)	-0.3664 (0.71)	-0.1305 (0.89)
사내유보율	-4.9249* (0.00)	-3.7193* (0.00)	-2.4113* (0.01)

주: *는 5%에서 유의적인 경우이다.

2) 산업연관표의 활용

충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도 충청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추정할 수 있다. 2006년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억 3천만 달러이고 업종별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2006년의 평균 원/달러 환율이 955.51이므로 대략 1조 2,717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2006년도에 충남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4〉 2006년 충남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 : 천 달러)

구분	합계	자동차	전기·전자	특수가스	기계	음식숙박	석유화학	기타
계	37	3	5	1	5	2	4	17
	1,331,304	31,452	968,944	5,482	11,194	113	303,739	10,380

자료: 충남도정백서(2006)

한국은행의 충청지역 산업연관표(2007)를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업종구분은 자동차는 수송장비(15)로 석유화학은 화학제품(8)으로 하였다. 2006년도 1조 2,717억원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생산은 1조 6,211억원 증가하였고, 취업자와 고용은 각각 7,240명과 6,556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⁵⁾.

업종별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9,926억원) 화학제품(3,591억원) 및 수송장비(361억원)의 순위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4,027명)와 화학제품(1,064명)이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생산유발액은 작았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취업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보건(403명), 음식점 및 숙박(287명) 및 운수 및 보관(243명)의 취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5) 취업자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고용에는 임금근로자만 포함된다.

〈표 5-15〉 2006년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번	산 업	생산유발액 (백만 원)	취업효과(명)	고용효과(명)
1	농림수산물	2,178	119	8
2	광산품	814	3	3
3	음식료품	3,707	14	11
4	섬유 및 가죽제품	2,306	19	17
5	목재 및 종이제품	5,967	21	20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32	19	14
7	석유 및 석탄제품	9,950	3	3
8	화학제품	359,199	1,064	1,050
9	비금속광물제품	9,449	39	37
10	제1차금속	17,897	33	32
11	금속제품	3,253	27	23
12	일반기계	14,800	79	74
13	전기 및 전자기기	992,674	4,027	3,973
14	정밀기기	3,030	16	15
15	수송장비	36,124	113	11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892	7	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1,786	37	37
18	건설	1,692	19	18
19	도소매	4,749	214	81
20	음식점 및 숙박	9,787	287	123
21	운수 및 보관	12,686	243	164
22	통신 및 방송	7,597	34	31
23	금융 및 보험	17,796	172	17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915	170	135
25	공공행정 및 국방	373	4	4
26	교육 및 보건	24,383	403	369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796	54	27
28	기타	28,903	0	0
	합계	1,621,135	7,240	6,556

V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KOTRA는 2006년도 외투기업의 경영애로 조사를 2006년 4월 26일- 6월 22일간 전국의 280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중 13개의 기업이 대전과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본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정확도가 높아서 본 연구에는 충남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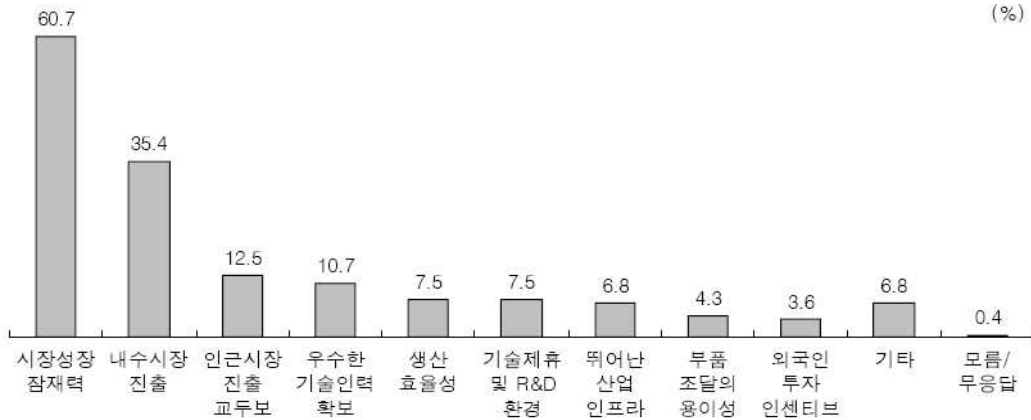
〈표 6-1〉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비중(%)
공장위치	서울	118	43.1
	대전 / 충청	13	4.7
	경기 / 인천	91	33.2
	부산 / 경남	14	5.1
	대구/울산/경북	25	9.1
	광주/전라/제주	13	4.7
업종	제조업	151	54.5
	비제조업	126	45.5
모회사 국적	미국	58	20.7
	일본	74	26.4
	유럽	103	36.8
	기타	45	16.1
투자 시점	1989년 이전	51	21.2
	1990-1999년	77	32.0
	2000-2002년	52	21.6
	2003년 이후	61	25.3

자료: KOTRA(2006)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동기는 ‘시장 성장 잠재력’(60.7%)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35.4%)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6-1〉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



자료: KOTRA(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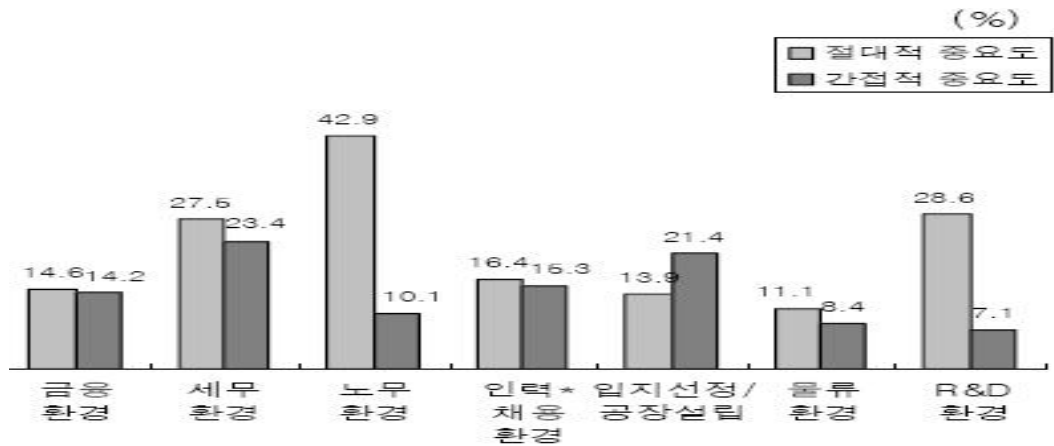
둘째, 7개의 경영환경 평가 분야에서 “물류환경”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R&D 환경’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노무환경”과 “세무환경”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외투기업은 경영환경 중 중요도의 순서를 노무 > R&D > 세무 > 인력채용 > 금융 > 입지선정/공장설립 > 물류 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경영환경 만족도 평가



자료: KOTRA(2006)

〈그림 6-3〉 분야별 중요도 평가



자료: KOTRA(2006)

셋째, 외투기업은 최초의 투자시점에 비해 개선된 항목으로는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자금조달의 편의성’등을 지적하였고, 악화된 항목으로는 ‘인건비’, ‘간접비용’ ‘물류비용’ 등을 지적하였다. 넷째, 향후 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 ‘국민의식 국제화’ ‘시장개방 확대’ 등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림 6-4〉 향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자료: KOTRA(2006)

넷째, 분야별 세부개선사항은 금융환경 분야는 '본사와의 채권 채무상계 절차 복잡', 세무환경 분야는 '불필요한 행정 중복', 노무환경 분야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 인력채용환경 분야는 '지원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지선정/공장설립환경 분야는 '각종 인프라 부족', 물류환경 분야는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그리고 R&D 환경 분야는 '지적 소유권제도 미비'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6-2〉 분야별 개선 요구 사항

분야	순위	개선항목	응답률 (%)	05년 대비 증감률(%)
금융 환경	1위	본사와의 채권 채무 상계 절차 복잡	34.3	-5.3
	2위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제도	28.9	+6.5
	3위	담보 위주 대출 관행	21.1	+1.5
세무 환경	1위	불필요한 행정 중복	37.1	+10.7
	2위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	25.7	+1.3
	3위	세법개정 정보 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족	22.9	-15.9
노무 환경	1위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	41.8	-
	2위	복잡한 임금체계	27.1	-
	3위	퇴직급 제도	23.9	-
인력채용 환경	1위	지원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51.1	-
	2위	높은 임금 수준 요구	43.2	-
	3위	지원자의 전문성 부족	36.8	-
입지선정/ 공장설립 환경	1위	각종 인프라 부족	28.2	-1.4
	2위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25.0	+7.8
	3위	담당관청 행정처리 지연	25.0	+3.0
물류 환경	1위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31.8	-11.0
	2위	노동시장 경직	28.2	+5.0
	3위	해운, 항공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19.6	-0.8
R&D 환경	1위	지적 소유권 제도 미비	35.0	-6.6
	2위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	31.4	+0.6
	3위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제도 미비	23.9	+1.9

자료 : KOTRA(2006)

VII.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과제

1. 충남의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 입지지원(전용임대단지 임대료감면, 공유재산 임대), 입지 보조금(분양가보조금, 용지매입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현금지원, 생활환경개선지원, 유공자 포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원책은 수도권 및 충북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컨설팅 비용지원, 융자지원 및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의 지원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정책과제

1)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 전략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의 성과를 활용하고 충남도의 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우위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집적효과 극대화, 기술혁신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유도할 외자를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 대상 업종과 유치대상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효과, 선진기술의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 총생산량,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용, 지역 기업에 대한 산업연관효과, 세수증대효과 및 산업구조 전환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기초로 투자 유치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업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 세부적인 지원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토지취득 지원 등에 차등지원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충남도의 강점과 외국 기업의 투자 동기를 결합시켜 유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 없이 업종을 불문한 무차별 외자유치 전략은 바람직 하지 않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장기발전과 성장잠재력 확보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중해(2004)는 산업의 발전정도와 유형에 따른 외자유치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남도에 활용할 수 있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유치 대상 Target기업 선정을 통한 기획 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Master Plan 수립, 지역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해야 한다.

2)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 유치

정부는 2007년 12월 충남(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 및 경기(평택시, 화성시 일원) 일원 5개 지구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개발방향은 크게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이다.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완성과 동북아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로 하고 있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아산 인주지구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든다. 서산 지곡지구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당진 석문·송악지구는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 산업, R&D 기능을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림 7-1〉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이유로는 첫째, 외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인센티브(지방세감면, 임대단지 조성, 토지 무상임대 등) 등이 우수하다. 둘째,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 및 경쟁력이 우수하고, 사업비 조달에 있어 민자 및 외자 조달비중이 높아 정부부담이 낮다. 셋째,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다. 이러한 선정이유는 충남의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조성비 약 7조 중 국고지원은 0.7%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5.9%이며 민자·외자 부담은 93.4%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은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를 공급해 대규모 공장설립형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업체 건립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게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지적인 의미가 없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제조업, R&D시설, 물류업 등을 합쳐 전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충남의 외국인투자지역은 2005.6월 현재 충남의 3곳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정한 좁은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집중시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이라도 원·부자재의 구매경로나 생산제품의 판매경로가 열려 전·후방 연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기술이전효과 등 소기의 목적인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1〉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역

위치	면적	지정일	FDI 규모	사업분야
천안	150	99.11.23	6	천안영상문화단지: 애니메이션
연기	58	00.02.30	66	코리아오토글라스: 자동차 안전유리
아산	112(건물)	04.12.21	923	S-LCD: LCD-TV용 패널

4) 성과지향적 외자유치 추진

성과지향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전개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개정으로 투자성과 인센티브 역할 강화해야 한다. 재정자금 지원방식 개선, 입지지원 사후정산제, 유치 활동예산 차등 지원 등을 도입해야 한다. 현금지원제 운용시 지원규모는 고용창출효과 및 낙후지역 우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충남도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업종별 대책 마련 개최, IR자료 작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중심 유치조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전문성을 갖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5)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

충남은 수도권에 비해 외국인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및 문화생활 등 외국인 정주환경에서 외국인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학교 학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상의 등이 공동 출연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등의 신속히 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 ombudsman 추진 해야 한다.

6) 기존 투자업체의 지원 강화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 외투기업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외국인투자업체 중 충남도에 잘 적응한 외투기업은 충남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여타 지역이나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충남지역에 투자할 때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의 외투업체의 추가투자보다는 신규 외투기업의 유치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기존 외투기업의 경영상태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외투기업이 추가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규외국기업의 투자와 동일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투기업 분포의 특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의 충남이전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제도의 정비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외국인 투자통계는 투자품목의 경우 대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품목에 투자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입시장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활동 과정에서 어떤품목을 추가했는지, 투자입지를 어느 곳으로 변경했는지, 지분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투자철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된다.(서울시정개발원, 2006)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초기의 투자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투자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정책 실시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투자성과로는 외투기업의 고용, 부가가치 창출, 생산,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관리는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8) 금융지원의 개선

중소 외국인 신규투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창업지원자금, 산업용지지원, 아파트형공장 용자 지원 등)와 가동중인 업체를 위한 지원제도(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와 금융조달 여건개선(신용보증지원, 보증보험 증권 발행시 연대보증제도 완화)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VIII. 결 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 및 고용기회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원의 구축차원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입감소는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FDI 총량 중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FDI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둘째, 업종별로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유입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는 M&A형 FDI의 유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설형 투자인 공장설립 혹은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1억 달러 미만의 중소규모 투자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큰 대형투자의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의 증액투자의 비중이 줄고 있다. 이는 기존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은 전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2000년대에 충남의 외국인 투자액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업종별로 충남의

경우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말 전국적으로 외투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기업 수 기준)은 23.6%와 75%를 기록하였으나, 충남의 경우에는 73.5%와 25.2%를 차지하였다. 셋째, 충남도의 2006년 경우에는 증자가 신규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6년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이 20건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남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의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청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06년도 1조 2,717억원(13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생산은 1조 6,211억원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7,240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의 유입시 취업자수가 평균적으로 약 544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9,926억원) 화학제품(3,591억원) 및 수송장비(361억원)의 순위를 보였고, 취업효과도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4,027명)와 화학제품(1,064명)이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생산유발액은 작았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취업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보건(403명), 음식점 및 숙박(287명) 및 운수 및 보관(243명)의 취업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한국신용평가의 「Kis-Line」에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104개의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기업과 836개의 국내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충남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상태를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량과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사당 평균고용인원은 2000-2006년 중 국내기업에 비해 대략 100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한국은행(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수익성은 외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투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서 외투기업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로 성장성을 판단할 때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에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투자효율성에서도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섯째,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률은 높고 사내유보율은 낮아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남 외투기업의 입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24개 외투기업 중 천안에 47%인 106개가 소재하고 있고, 아산시에는 16.7%가 소재하고 있어 천안시와 아산시에 63.4%가 집적되어 있다. 2004년을 제외하고는 천안시가 외투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10개 미만의 외투기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에는 외투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소재 외투기업의 업종별분포를 보면 도소매업(41개), 화학제품(36개), 전기전자(35개), 수송장비(30개) 및 일반기계(24개)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인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및 일반기계의 집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시에 화학제품(14개), 전기전자(21개), 수송장비(14개) 및 일반기계(20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아산시에도 화학제품(9개), 전기전자(6개) 및 수송장비(7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4→41)하였고, 전기전자(12→35) 및 수송장비(14→30)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2005-2007년 중에, 수송장비는 2002-2004년 중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넷째,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이 외투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충남도가 외투기업유치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투기업의 등록 자료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에서 분석된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의 성과를 활용하고 충남도의 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실행해야 한다. 고용창출, 선진기술의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 총생산량,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중, 지역기업에 대한 산업연관효과, 세수증대효과 및 산업구조 전환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기초로 투자유치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업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 세부적인 지원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토지취득 지원 등에 차등지원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아산·인주지구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서산·지곡지구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당진 석문·송악지구는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 기능을 물론 상업과 국제 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조성비 약 7조 중 국고지원 은 0.7%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은 5.9%, 민자·외자 부담은 93.4%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성공적 조성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지향적 외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개정으로 투자성과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자금 지원방식 개선, 입지지원 사후정산제, 유치 활동예산 차등지원 등이 도입해야 한다. 현금지원제 운용시 지원규모는 고용창출효과 및 낙후지역 우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충남도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업종별 대책 마련 개최, IR자료 작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중심 유치조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전문성을 갖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및 문화생활 등 외국인 정주환경에서 외국인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학교 학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상의 등이 공동 출연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 ombudsman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투자업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기존 외투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외투기업이 추가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규외국기업의 투자와 동일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의 충남이전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제도의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상과관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태구(2003), 『글로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경남발전연구원(2000), 「외국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경남지역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200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실태분석」

김군수(2006), 「해외첨단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김억현(1999), “충남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전략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13권 제3호.

남광희·윤성훈(2006),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실태」

산업연구원(2001), 「외국인투자의 일석오조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2005), 「2005년 제조업 외국인투자 현황」.

산업자원부(2002), 「외국인투자촉진법」, www.mocie.go.kr 자료실.

산업자원부(2004), 「FDI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산업자원부(2004),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2006), 「2005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과 2006년도 전망」.

서울시정개발원(2006),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 시정연
2006-R-30.

서중해 편(2004),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II)」, 한국개발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2001), 「울산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이병기(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이석희(2004),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이양수(2003), “부산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5권 제3호.

이양수 · 최외출(2001),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4권 제1호.

조택희 · 전일명(2006),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중복경제 파급효과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재정경제부(2006),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및 반외자 정서에 관한 연구」.

차미숙 · 정윤희(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2-21.

최용록(2000), 『해외투자론 -이론과 실무』, 박영사.

충남도정백서 각호.

한국은행(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한국은행 제주지점(2001),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방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외국문헌>

KOTRA(2003),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KOTRA(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LG연구원(2006),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Aitken, B. and A. Harrison(1999), "Do Domestic Firms Benefit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Venezuel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Batchler, J.(1996), "Policy Competi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Development Center Workshop.

Berhman, J. N.(1972), The Role of International Companies in Latin America: Autos and

- Petro-chemic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Blomström, M. and F. Sjöholm(1999), "Technology Transfer and Spillovers: Does Local Participation with Multinationals Matter," *European Economic Review*.
- Calder, C., Loayza, N. and L. Serv(2004),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feedback and macroeconomic effec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192.
- Caves, R.(1982),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ning, J. H.(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Vol. 11.
- Economic Intelligence Unit(2002), "Magnet or morass?: South Korea's prospects for foreign investment".
- IMF(1997), *Balance of Payment Manual*, 4th ed. IMF
- Moosa, I.(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 Evidence and Practice*, Palgrave.
- OECD(1961), *Code on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OECD.
- OECD(1983),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Turok, I(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 27.
- UNCTAD(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Overview*, UN.

충청지역의 산업연관 분석

박 창 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목 차

〈요 약〉	73
I. 지역산업연관표의 개요	83
II. 충청지역의 경제구조	86
1. 개 요	86
2. 산업구조	89
3. 투입 및 최종수요 구조	91
4. 타지역과의 교역구조	95
5. 취업 및 고용	103
III. 충청지역 경제의 산업연관효과	105
1.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05
2. 전·후방 연쇄효과	115
3.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119
4. 피드백 효과	123
IV. 충청지역 경제의 주요 특징	123
1. 개방형 경제구조	123
2.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미흡	126
3.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	128

표 목 차

<표 : 요약 1-1> 산업연관표(예시).....	73
<표 : 요약 4-1>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82
<표 1-1> 산업연관표(예시).....	84
<표 1-2> 지역간 산업연관표.....	85
<표 1-3> 지역내 산업연관표.....	85
<표 2-1> 산업별 산출액 구성.....	90
<표 2-2> 중간투입 구성.....	91
<표 2-3> 산업별 중간투입률 현황.....	92
<표 2-4> 부가가치율 현황.....	93
<표 2-5> 산업별 피용자보수 현황.....	93
<표 2-6> 최종수요 현황.....	94
<표 2-7> 충청권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 현황.....	95
<표 2-8> 충청권 이출액의 상품별 구성비 및 이출률 현황.....	97
<표 2-9> 충청권 공급의 지역별 구성 현황.....	98
<표 2-10> 충청권 이입액의 상품별 구성비 및 이입률 현황.....	100
<표 2-11> 충청권의 상품별 자급률.....	101
<표 2-12> 충청권의 타지역과의 교역수지 현황.....	102
<표 2-13> 산업별 취업계수.....	103
<표 2-14> 산업별 고용계수.....	104
<표 3-1>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 관련지표.....	106
<표 3-2>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07

<표 3-3>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 관련지표.....	108
<표 3-4> 충청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110
<표 3-5> 충청지역 산업의 영향력 계수1).....	112
<표 3-6> 충청지역 산업의 감응도 계수1).....	114
<표 3-7>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116
<표 3-8>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118
<표 3-9> 충청지역 산업의 피드백 효과.....	121
<표 3-10> 생산유발효과.....	122
<표 3-11> 부가가치 유발효과.....	122
<표 3-12> 취업유발효과.....	122
<표 4-1> 충청권 민간소비 자გი지역공급률.....	124
<표 4-2> 주요 소재·부품의 충남지역 조달비중1).....	127
<표 4-3> 산업별 취업구조.....	128
<표 4-4>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128

그림 목 차

<그림 : 요약 4-1> 6개 광역경제권역별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 현황.....	80
<그림 : 요약 4-2> 6대 광역 경제권역별 수요의 공급지역별 구성현황.....	81
<그림 2-1> 산업별 비중.....	89
<그림 2-2> 충청지역 이출액 지역별 구성비.....	95
<그림 2-3> 충청지역 이입액 지역별 구성비.....	98
<그림 3-1> 지역 L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 분해.....	120
<그림 4-1> 6대 광역 경제권별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현황.....	123
<그림 4-2> 6대 광역경제권별 수요의 공급지역별 구성현황.....	124
<그림 4-3> 충청지역 최종수요의 타지역 생산유발률.....	125
<그림 4-4> 충청지역 생산의 타지역 최종수요 의존율.....	125

<요약>

I. 지역산업연관표의 개요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내역을 투입 및 배분 흐름에 따라 기록

○ 산업연관표에서 세로방향은 생산을 위한 원재료 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 생산물의 배분구조를 나타냄

〈표 : 요약 1-1〉 산업연관표(예시)

구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밀	밀가루	빵	민간소비	재고증감	기타	
중간투입	밀 밀가루 빵	5	20	0	0	-15	0	10
		0	0	30	0	0	0	30
		0	0	0	50	0	0	50
부가가치		5	10	20				
총투입액		10	30	50				

○ 이 같이 편제된 산업연관표는 경제·산업구조의 파악, 주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

□ 지역산업연관표는 특정지역의 지역내·지역간 산업별 투입구조와 생산물 배분구조를 기록

□ 한국은행은 2007.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접추정이 아닌 실지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중 충청권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

II. 충청지역의 경제구조

1. 총 공급액 중 충청지역생산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8.0%

□ 2003년중 충청지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274.9조원

○ 총 공급에서 국내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 58.2조원(21.2%), 해외로부터의 수입 29.8조원(10.8%)을 차감한 186.9조원(68.0%)이 충청지역내 총산출

○ 지역내 총산출(총생산)은 107.2조원(57.4%)의 중간투입과 79.7조원(42.6%)의 부가가치가 투입되어 생산

- 중간투입은 물질투입 77.6조원(72.4%)과 서비스투입 29.5조원(27.6%)으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34.5조원(43.3%), 영업잉여 24.5조원(30.7%), 고정자본소모 11.6조원
 (14.6%) 등으로 구성

1) 최종수요 중 타지역으로의 수출과 이출이 절반을 상회

□ 2003년중 충청지역의 총수요는 중간수요 107.2조원(39.0%) 및 최종수요 167.7조원(61.0%)으로 구성

○ 최종수요는 충청지역내 최종수요 75.9조원(45.3%)과 수출 및 이출 91.8조원(54.7%)으로 구성

- 충청지역내 최종수요 중 소비가 50.2조원(66.2%), 투자가 25.7조원(33.8%)을 차지

2) 제조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산업구조

□ 2003년중 충청지역의 산업별 산출액은 제조업(51.7%), 서비스업(31.0%),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0.9%) 등의 순

○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11.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10.4%), 음식료품(7.6%), 수송장비(4.7%) 등의 순

○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 및 보건(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 공공행정 및 국방(4.0%), 도소매(2.9%), 음식점 및 숙박(2.7%), 금융 및 보험(2.6%) 등의 순

2. 타지역과의 교역에서 공산품은 흑자, 서비스는 적자

□ 충청권의 타지역과의 교역수지(이출액-이입액)를 보면 수도권에서 7.6조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총 8.9조원 흑자(이출초과)

○ 공산품이 13.1조원 흑자인 반면 서비스는 6.0조원의 적자를 기록

Ⅲ. 충청지역 경제의 산업연관효과

1.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1.31 수준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투자(1.37)가 가장 높았으며 이출(1.33), 수출(1.29), 소비(1.28)의 순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1.3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33), 서비스(1.31), 농림어업(1.28), 광업(1.28) 등의 순

○ 제조업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49)이 가장 높았으며 비금속광물(1.45), 화학(1.39), 제1차 금속(1.38), 수송장비(1.37) 등이 높게 나타남

□ 최종수요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6 수준

○ 항목별로는 소비(0.75), 투자(0.61), 이출(0.50) 및 수출(0.41)의 순

□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면 농림어업(0.75), 서비스업(0.73),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0.59), 제조업(0.43)의 순으로 높았음

○ 제조업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0.5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인쇄·출판 및 복제(0.54), 비금속광물(0.5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0.47), 정밀기기(0.46) 등이 양호

2.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1)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어업 및 서비스가 높은 편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4.1(명/10억원)이었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9.0), 서비스(19.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1.1), 제조업(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20.0), 인쇄·출판 및 복제(15.8), 가구 및 기타제조업(10.8), 섬유 및 가죽제품(10.4) 등의 순

○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47.8), 음식점 및 숙박(35.3), 사회 및 기타서비스(33.1), 운수 및 보관(21.2) 등의 순

2) 고용유발계수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높은 편

□ 2003년 충청지역의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8.1(명/10억원)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2.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0.1), 제조업(5.1), 농림어업(5.0)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는 인쇄·출판·복제업(11.3)이 가장 높았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9.0), 금속 제품(8.2) 등의 순
-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17.2), 교육 및 보건(16.5), 음식점 및 숙박(14.4), 운수 및 보관(14.3) 등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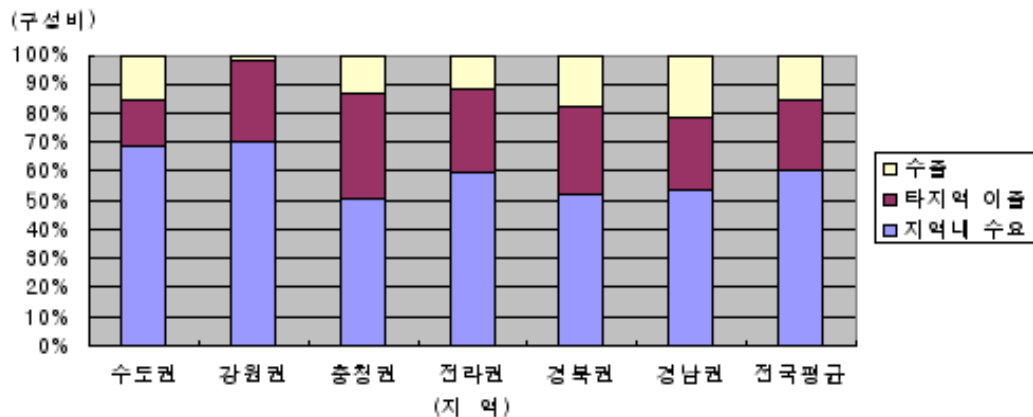
IV. 충청지역 경제의 주요 특징

1. 개방형 경제구조

□ 충청지역 경제는 6개 광역 경제권역 중 타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아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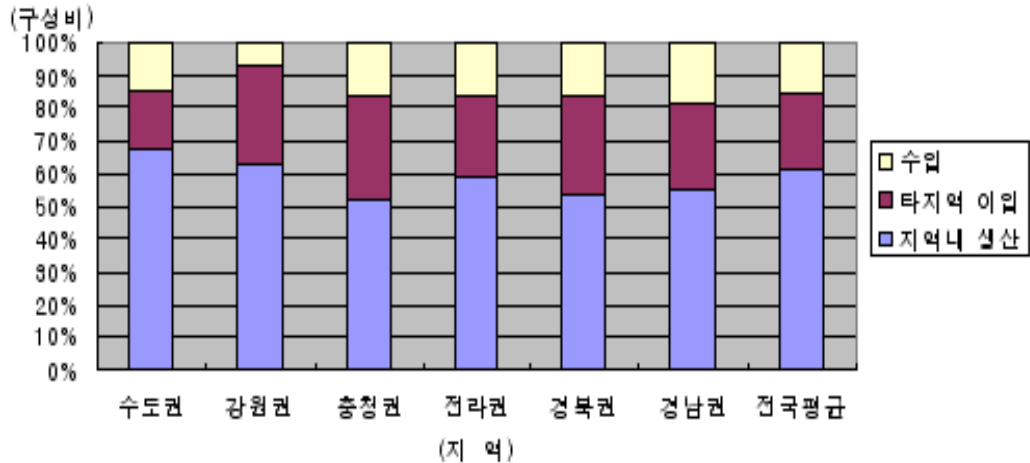
○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절반 정도(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

〈그림 : 요약 4-1〉 6개 광역경제권역별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 현황



-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0%는 수입되거나 타지역에서 이입

〈그림 : 요약 4-2〉 6대 광역 경제권역별 수요의 공급지역별 구성현황



- 충청지역 민간소비액 중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자기지역공급률)도 60.7%에 불과

□ 타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밀접

-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이출액 중 수도권에의 판매 비중이 57.6%

- 타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 중 수도권 비중이 53.5%

2.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미흡

□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충청지역의 주력산업을 추려보면

*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 산출액 기준

○ 제조업은 화학제품(전산업의 11.1%), 전기 및 전자기기(10.4%), 음식료품(7.6%), 수송장비(4.7%) 등

○ 비제조업은 건설(8.0%), 교육 및 보건(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평가해 보면

○ 화학,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의 업종은 지역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정도가 평균치를 하회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 전후방 연쇄효과도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

3.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

□ 충청권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국에 비해 낮은 상황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및 전국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를 고용표상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

〈표 : 요약 4-1〉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충청권(A)	전 국(B)	A-B
농 립 어 업	11	12	-1
제 조 업	78	67	11
건설업	39	39	0
서비스	37	41	-4
전산업	41	43	-2

I. 지역산업연관표의 개요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내역을 투입 및 배분 흐름에 따라 기록

○ 산업연관표에서 세로방향은 생산을 위한 원재료 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 생산물의 배분구조를 나타냄

- 투입구조는 각 산업에서 원재료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용(중간 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부가가치)으로 구성

- 배분구조는 각 산업의 생산물이 산업에서 원자재로 사용되는 중간수요와 가계, 기업 등에서 소비나 투자 등으로 사용되는 최종수요로 구성

〈표 1-1〉 산업연관표(예시)

구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밀	밀가루	빵	민간소비	재고증감	기타	
중간투입	밀 밀가루 빵	5	20	0	0	-15	0	10
		0	0	30	0	0	0	30
		0	0	0	50	0	0	50
부가가치		5	10	20				
총투입액		10	30	50				

○ 이 같이 편제된 산업연관표는 경제·산업구조의 파악, 주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

□ 지역산업연관표는 특정지역의 지역내·지역간 산업별 투입구조와 생산물 배분구조를 기록

○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세로방향은 지역생산물의 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 지역생산물의 배분구조를 나타내며 다음의 두 가지 표를 작성

- 지역간 상호의존관계 파악과 경제정책의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

* 가령 충남 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할 경우 지역간 파급효과를 지역별·산업별로 분석할 수 있음

〈표 1-2〉 지역간 산업연관표

		중간수요		최종수요	
		1지역	2지역	1지역	2지역
중간투입	1지역	A11	A12	F11	F12
	2지역	A21	A22	F21	F22
부가가치		V1	V2		

- 지역내 산업별 투입산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동 산업연관표에서는 국내 다른 지역과의 거래를 이출·입으로 일괄 계상

〈표 1-3〉 지역내 산업연관표

		중간수요		최종수요	
		소비	투자	수출	이출
중간투입	A	F			
부가가치	V				

□ 한국은행은 2007.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접추정이 아닌 실지조사기법을 이용하여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

-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지역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중 충청권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지역내 산업연관표)

Ⅱ. 충청지역의 경제구조

1. 개 요

□ 2003년 중 충청지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274.9조원

○ 총 공급에서 국내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 58.2조원(21.2%), 해외로부터의 수입 29.8조원(10.8%)을 차감한 186.9조원(68.0%)이 충청지역내 총산출

○ 지역내 총산출(총생산)은 107.2조원(57.4%)의 중간투입과 79.7조원(42.6%)의 부가가치가 투입되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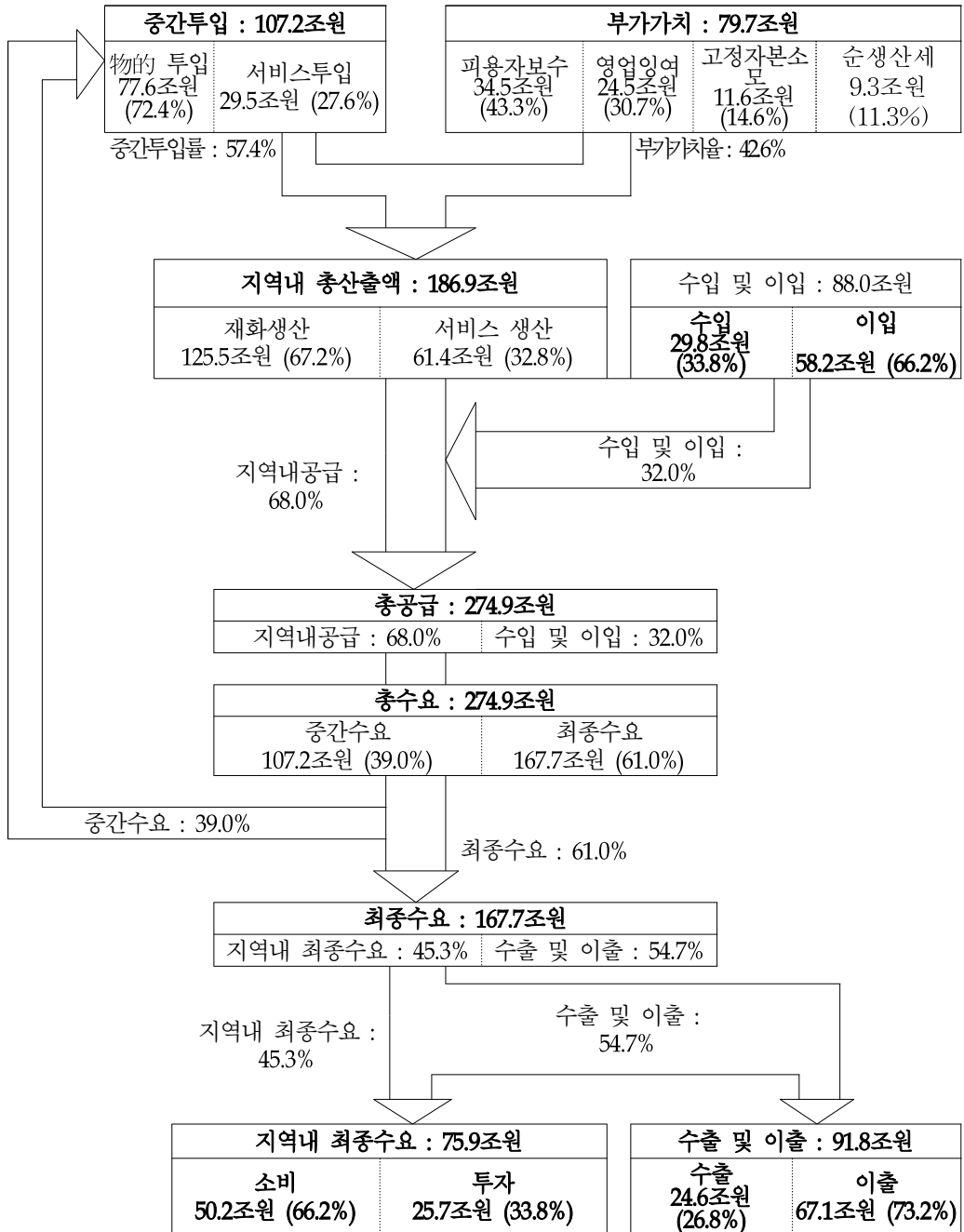
- 중간투입은 물적투입 77.6조원(72.4%)과 서비스투입 29.5조원(27.6%)으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34.5조원(43.3%), 영업잉여 24.5조원(30.7%), 고정자본소모 11.6조원(14.6%) 등으로 구성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총수요는 중간수요 107.2조원(39.0%) 및 최종수요 167.7조원(61.0%)으로 구성

○ 최종수요는 충청지역내 최종수요 75.9조원(45.3%)과 수출 및 이출 91.8조원(54.7%)으로 구성

- 충청지역내 최종수요 중 소비가 50.2조원(66.2%), 투자가 25.7조원(33.8%)을 차지

2003년 중 충청지역 경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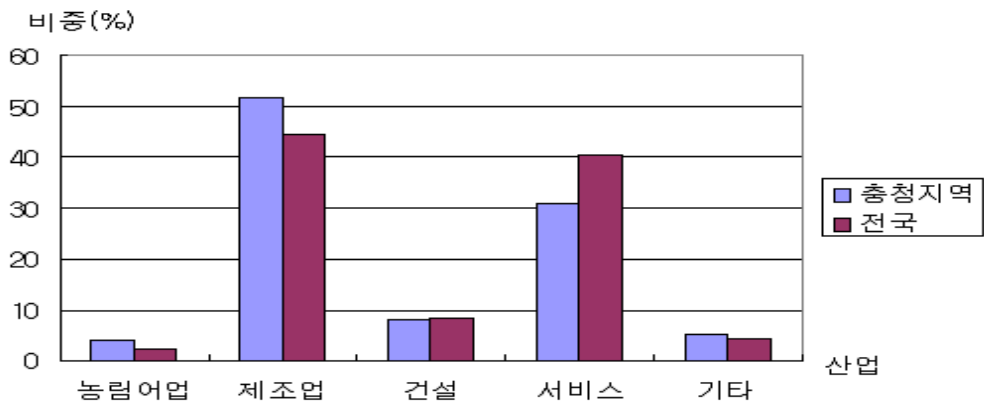
2. 산업구조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산업별 산출액은 제조업(51.7%), 서비스업(31.0%),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0.9%) 등의 순

○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11.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10.4%), 음식료품(7.6%), 수송장비(4.7%) 등의 순

○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 및 보건(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 공공행정 및 국방(4.0%), 도소매(2.9%), 음식점 및 숙박(2.7%), 금융 및 보험(2.6%) 등의 순

〈그림 2-1〉 산업별 비중



〈표 2-1〉 산업별 산출액 구성

(단위 : 10억원, %)

구분	충청지역			전국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농림어업	7,640.9	(19.5)	4.1	39,228.1	2.3
광업	699.9	(20.8)	0.4	3,359.8	0.2
제조업	96,725.3	(12.5)	51.7	775,094.0	44.5
음식료품	14,268.7	(20.9)	7.6	68,276.1	3.9
섬유 및 가죽제품	3,454.2	(7.7)	1.8	44,894.2	2.6
목재 및 종이제품	4,128.1	(22.3)	2.2	18,520.5	1.1
인쇄, 출판 및 복제	425.0	(3.0)	0.2	14,110.0	0.8
석유 및 석탄제품	6,486.4	(12.4)	3.5	52,105.9	3.0
화학제품	20,820.1	(19.2)	11.1	108,229.9	6.2
비금속광물제품	4,645.2	(19.8)	2.5	23,412.1	1.3
제1차 금속제품	4,483.2	(5.9)	2.4	76,515.2	4.4
금속제품	2,606.3	(9.1)	1.4	28,659.8	1.6
일반기계	4,853.7	(9.0)	2.6	54,120.7	3.1
전기 및 전자기기	19,428.7	(12.2)	10.4	159,402.6	9.2
정밀기기	1,114.0	(13.9)	0.6	8,028.4	0.5
수송장비	8,734.7	(8.3)	4.7	105,507.4	6.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277.1	(9.6)	0.7	13,311.2	0.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20,464.0	24.3	10.9	181,463.5	10.4
전력·가스·수도	5,585.0	(13.8)	3.0	40,417.0	2.3
건설	14,879.0	(10.5)	7.9	141,046.5	8.1
서비스	57,854.0	(8.2)	31.0	706,177.3	40.6
도소매	5,502.1	(6.9)	2.9	79,772.5	4.6
음식점 및 숙박	5,016.4	(9.4)	2.7	53,417.4	3.1
운수 및 보관	3,902.2	(6.3)	2.1	62,335.2	3.6
통신 및 방송	3,017.7	(7.0)	1.6	43,140.1	2.5
금융 및 보험	4,933.5	(6.6)	2.6	75,127.3	4.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172.6	(6.7)	6.5	181,050.1	10.4
공공행정 및 국방	7,458.6	(12.9)	4.0	57,622.8	3.3
교육 및 보건	12,861.3	(11.6)	6.9	111,005.9	6.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989.5	(7.0)	1.6	42,706.0	2.5
기타	3,528.7	(9.9)	1.9	35,622.8	2.0
전산업	186,912.8	(10.7)	100.0	1,740,945.3	100.0

주 : ()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3. 투입 및 최종수요 구조

1) 중간투입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투입률([중간투입액/총투입액] × 100)은 57.4%

○ 중간투입중에서 물적재화와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4%와 27.6%

〈표 2-2〉 중간투입 구성

(단위 : %)

구분	충청지역	전 국
물적재화투입	41.5<72.4>	37.4<66.8>
서비스투입	15.8<27.6>	18.6<33.2>
중간투입계	57.4<100.0>	55.9<100.0>

주 : < >내는 전체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산업별 중간투입률을 보면 제조업(70.9%)이 가장 높고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56.0%), 서비스(39.0%) 등의 순

〈표 2-3〉 산업별 중간투입률 현황

(단위 : %)

구분	충청지역	전 국
농림어업	38.8	40.6
광업	35.5	35.2
제조업	70.9	71.5
(음식료품)	67.4	68.9
(화학제품)	74.1	74.4
전기 및 전자기기	70.3	71.8
(수송장비)	74.8	73.6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56.0	54.7
(건설)	55.6	54.9
서비스	39.0	38.0
(도소매)	38.6	39.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6	32.0
(공공행정 및 국방)	31.2	30.3
(교육 및 보건)	29.6	32.5
전산업	57.4	55.9

2) 부가가치

□ 2003년중 충청지역의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총산출액] × 100)은 42.6%

○ 항목별로는 피용자보수가 43.3%로 가장 높고 영업잉여(30.7%), 고정자본소모(14.6%)의 순

〈표 2-4〉 부가가치율 현황

(단위 : 10억원, %)

구분	충청지역		전 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피 용 자 보 수	34,546.3	43.3	348,625.6	45.5
영 업 잉 여	24,504.9	30.7	237,645.2	31.0
고 정 자 본 소 모	11,634.2	14.6	102,689.8	13.4
순생산세(생산비-보조금)	9,030.5	11.3	78,017.5	10.2
부 가 가 치 계 (부가가치율)	79,715.8 (42.6)	100.0	766,978.1 (44.1)	100.0

□ 산업별 피용자보수율은 서비스업(32.1%),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23.0%), 제조업(9.9%) 등의 순

〈표 2-5〉 산업별 피용자보수 현황

(단위 : %)

구분	충청지역	전 국
농림어업	5.2	7.0
광업	17.3	20.8
제조업	9.9	11.0
(음식료품)	7.7	7.8
(화학제품)	9.4	10.1
(전기 및 전자기기)	10.8	10.1
(수송장비)	10.4	12.1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23.0	23.6
(건설)	27.5	28.0
서비스	32.1	30.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7	18.5
(공공행정 및 국방)	48.3	49.9
(교육 및 보건)	57.3	54.6
전산업	18.5	20.0

3) 최종수요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최종수요는 167.7조원

○ 항목별로는 이출(40.0%), 소비(30.0%), 투자(15.3%), 수출 (14.7%)의 순

- 수출과 이출의 합계가 54.7%로 타지역(혹은 타국) 비중이 높은 수준

〈표 2-6〉 최종수요 현황

(단위 : 10억원, %)

구분	충청지역		전 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 비	50,238.5	30.0	531,416.0	51.3
민 간 소 비 지 출	39,047.2	23.3	448,959.1	43.4
정 부 소 비 지 출	11,191.2	6.7	82,456.9	8.0
투 자	25,654.8	15.3	231,779.7	22.4
고 정 자 본 형 성	25,331.5	15.1	229,098.5	22.1
재 고 증 감	323.3	0.2	2,681.2	0.3
수 출	24,646.8	14.7	272,079.0	26.3
이 출 ¹⁾	67,148.8	40.0		
최 종 수 요 계	167,688.8	100.0	1,035,274.7	100.0

주 : 1)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도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규모

4. 타지역과의 교역구조*

* 충청지역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행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타지역에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이출, 타지역으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이입

1) 이출구조

□ 2003년 중 충청지역은 총 산출액 186.9조원 중 67.1조원(35.9%)을 타지역에 이출

〈표 2-7〉 충청권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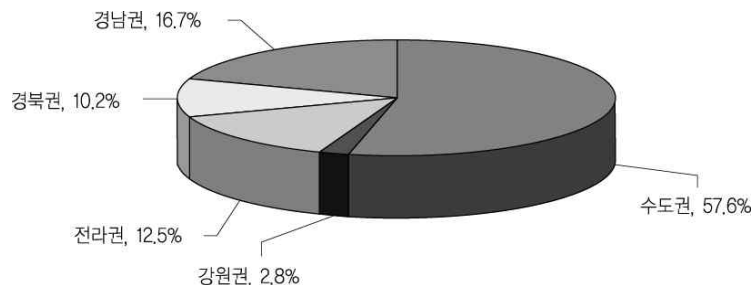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충청지역내 수요	타지역 이출	수 출	합 계
95.1	67.1	24.6	186.9
<50.9>	<35.9>	<13.2>	<100.0>

주 : < >안은 구성비(%)

○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타지역 이출액 구성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고 경남권(16.7%), 전라권(12.5%), 경북권(10.2%)의 순

〈그림 2-2〉 충청지역 이출액 지역별 구성비



- 상품별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이출액 구성비를 보면 공산품의 이출비중이 75.5%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15.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4.6%)의 순
 - 공산품 중에서는 화학제품(15.7%), 음식료품(14.4%), 전기 및 전자기기(9.5%) 등이 높았음
- 상품별 이출률($[\text{이출액} / \text{총산출액}] \times 100$)은 공산품(52.4%), 농림수산물(36.6%), 서비스(17.7%),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5.0%)의 순

〈표 2-8〉 충청권 이출액의 상품별 구성비 및 이출률 현황

(단위 : %)

구분	이출액 구성비	상품별 이출률
농 립 수 산 품	4.2	36.6
광 산 품	0.5	48.4
공 산 품	75.5	52.4
음 식 료 품	14.4	67.9
섬 유 및 가 죽 제 품	2.5	48.3
목 재 및 종 이 제 품	3.7	60.4
인 쇄·출 판 및 복 제	0.3	42.7
석 유 및 석 탄 제 품	6.2	64.2
화 학 제 품	15.7	50.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3.8	54.5
제 1 차 금 속 제 품	3.3	48.9
금 속 제 품	2.4	61.7
일 반 기 계	4.6	63.7
전 기 및 전 자 기 기	9.5	32.8
정 밀 기 기	1.2	69.8
수 송 장 비	6.8	52.4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1.2	64.2
전 력·가 스·수 도 및 건 설	4.6	15.0
전 력·가 스·수 도	4.5	54.2
건 설	0.1	0.3
서 비 스	15.3	17.7
도 소 매	5.3	65.1
음 식 점 및 숙 박	2.7	36.0
운 수 및 보 관	1.6	27.1
통 신 및 방 송	0.1	1.9
금 융 및 보 험	0.3	4.7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2.3	12.5
교 육 및 보 건	2.7	14.0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0.3	6.3
합 계	100.0	35.9

2) 이입구조

□ 충청권 공급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입된 규모는 58.2조원으로 총공급액의 31.8%를 차지

〈표 2-9〉 충청권 공급의 지역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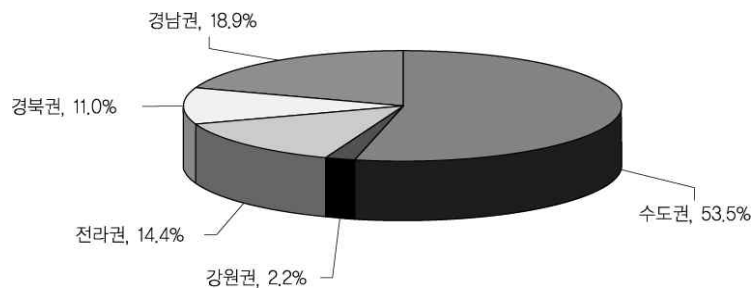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충청지역내 생산	타지역 이입	수 입	합 계
95.1	58.2	29.8	183.1
<52.0>	<31.8>	<16.2>	<100.0>

주 : < >안은 구성비(%)

○ 이입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53.5%)이 가장 크고 경남권(18.9%), 전라권(14.4%), 경북권(11.0%)의 순

〈그림 2-3〉 충청지역 이입액 지역별 구성비



□ 이입액의 상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64.6%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도 28.0%를 차지

○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9.9%), 수송장비(9.3%), 전기 및 전자제품(8.1%), 음식료품(6.9%) 등의 순

□ 상품별 이입률($\frac{\text{이입액}}{\text{총산출액}} \times 100$)은 공산품(45.4%), 서비스(25.3%), 농림수산물(18.8%) 등의 순

〈표 2-10〉 충청권 이입액의 상품별 구성비 및 이입률 현황

(단위 : %)

구분	이입액의 상품별 구성비	상품별 이입률
농 립 수 산 품	2.3	18.8
광 산 품	0.4	4.1
공 산 품	64.6	45.4
음 식 료 품	6.9	42.2
섬 유 및 가 죽 제 품	3.1	53.0
목 재 및 종 이 제 품	2.2	43.1
인 쇄·출 판 및 복 제	1.4	73.8
석 유 및 석 탄 제 품	5.5	41.7
화 학 제 품	9.9	38.4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6	27.5
제 1 차 금 속 제 품	6.5	53.4
금 속 제 품	3.3	65.6
일 반 기 계	5.3	43.7
전 기 및 전 자 기 기	8.1	39.0
정 밀 기 기	0.5	19.9
수 송 장 비	9.3	68.9
가 구 및 기 타	0.9	45.7
전 력·가 스·수 도 및 건 설	4.8	13.8
전 력·가 스·수 도	4.2	49.1
건 설	0.5	2.1
서 비 스	28.0	25.3
도 소 매	7.4	75.1
음 식 점 및 숙 박	2.5	30.1
운 수 및 보 관	3.1	39.4
통 신 및 방 송	1.0	16.2
금 융 및 보 험	1.9	19.1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8.6	30.9
교 육 및 보 건	2.3	10.8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1	18.4
전 산 업	100.0	31.8

<참고 1>

[충청지역의 자급률]

□ 충청지역의 자급률*은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86.1%), 서비스(72.2%), 농림수산물(6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산품은 27.3%로 비교적 낮았음

* [(지역내 총수요액-타지역에서의 이입액-수입액)/지역내 총수요액] × 100

○ 제조업내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정밀기기(13.3%), 석유 및 석탄제품(18.2%) 등은 낮았음

〈표 2-11〉 충청권의 상품별 자급률

	(단위 : %)	
	충청권	전지역
농 립 수 산 품	68.0	56.6
광 산 품	7.2	4.3
공 산 품	27.3	37.0
음 식 료 품	43.3	41.7
섬 유 및 가 죽 제 품	19.6	38.2
목 재 및 종 이 제 품	26.4	39.5
인 쇄·출 판 및 복 제	21.3	70.2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32.9	44.7
석 유 및 석 탄 제 품	18.2	26.4
화 학 제 품	33.6	39.4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9.1	56.1
제 1 차 금 속 제 품	22.5	40.0
금 속 제 품	26.9	52.9
일 반 기 계	18.3	33.8
전 기 및 전 자 기 기	20.6	26.2
정 밀 기 기	13.3	14.3
수 송 장 비	20.9	36.7
전 력·가 스·수 도 및 건 설	86.1	91.8
전 력·가 스·수 도	50.7	67.2
건 설	97.9	98.8
서 비 스	72.2	80.4
도 소 매	23.9	57.7
음 식 점 및 숙 박	62.3	68.9
운 수 및 보 관	55.3	63.7
통 신 및 방 송	82.7	89.6
금 융 및 보 험	80.1	89.4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65.1	79.2
교 육 및 보 건	88.4	89.4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78.2	85.7
전 산 업	52.0	61.1

3) 교역수지

□ 충청권의 타지역과의 교역수지(이출액-이입액)를 보면 수도권에서 7.6조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총 8.9조원 흑자(이출초과)

○ 공산품이 13.1조원 흑자인 반면 서비스는 6.0조원의 적자를 기록

〈표 2-12〉 충청권의 타지역과의 교역수지 현황

(단위 : 10억원)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지역
농림수산물	2,042.8	37.5	-624.4	86.3	-75.9	1,466.3
광 산 품	113.4	-133.0	71.3	48.0	33.6	133.3
공 산 품	10,930.9	810.9	395.6	476.8	446.8	13,060.9
음식료품	3,829.6	148.7	307.1	566.8	819.7	5,671.9
섬유 및 가죽제품	-36.4	16.5	83.9	-187.4	-3.2	-126.6
목재 및 종이제품	939.3	30.2	64.4	107.1	54.8	1,195.8
인쇄, 출판 및 복제	-724.2	0.6	36.4	9.4	30.1	-647.8
석유 및 석탄제품	2,181.1	187.1	-599.2	350.8	-1,150.5	969.2
화학제품	2,170.1	190.4	260.7	999.4	1,118.1	4,738.8
비금속광물제품	909.3	-32.4	92.8	172.0	453.6	1,595.4
제1차금속제품	430.4	40.7	-644.0	-1,124.9	-288.9	-1,586.6
금속제품	-318.7	78.5	167.6	-138.4	-129.5	-340.5
일반기계	-227.3	38.8	257.6	-15.9	-42.3	10.8
전기 및 전자기기	1,121.6	73.1	276.3	-251.3	468.1	1,687.7
정밀기기	130.2	10.4	80.9	44.6	194.5	460.7
수송장비	576.4	19.9	-44.9	-96.8	-1,318.4	-863.8
가구 및 기타	-50.7	8.6	55.8	41.3	240.8	295.7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445.7	135.3	98.9	-365.8	-26.2	287.8
전력, 가스 및 수도	679.5	133.8	108.9	-366.7	1.0	556.5
건설	-233.8	1.5	-9.9	0.9	-27.3	-268.7
서 비 스	-5,969.2	-215.9	84.8	226.4	-147.8	-6,021.7
도소매	-644.4	21.1	4.8	65.1	-145.6	-699.0
음식점 및 숙박	267.1	-59.0	24.6	100.5	-2.3	330.9
운수 및 보관	-495.1	-31.6	-32.4	-88.1	-118.4	-765.8
통신 및 방송	-531.1	-0.9	2.5	3.9	6.0	-519.6
금융 및 보험	-875.6	9.2	-4.0	4.7	-8.2	-873.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542.5	-35.6	19.6	53.9	20.1	-3,484.5
교육 및 보건	235.6	-65.7	89.8	91.9	102.0	453.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83.2	-53.3	-20.2	-5.4	-1.3	-463.5
전 산 업	7,563.5	634.9	26.1	471.7	230.4	8,926.7

5. 취업 및 고용

1)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계수*는 농림어업이 54.9(명/10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17.3),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8.8), 제조업(3.7) 등의 순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 피용자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노동생산성의 역수임

〈표 2-13〉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 명/10억원)

	충청지역(A)	전국(B)	(A-B)
농림어업	54.9	49.3	5.6
광업	3.6	5.6	-2.0
제조업	3.7	4.2	-0.5
음식료품	3.7	4.3	-0.6
섬유 및 가죽제품	8.2	9.7	-1.5
목재 및 종이제품	3.6	5.8	-2.2
인쇄, 출판 및 복제	13.4	9.8	3.6
석유 및 석탄제품	0.3	0.3	0.0
화학제품	3.0	3.4	-0.5
비금속광물제품	4.1	4.6	-0.4
제1차 금속제품	1.8	1.5	0.3
금속제품	8.2	9.0	-0.8
일반기계	5.3	6.0	-0.6
전기 및 전자기기	4.1	3.8	0.3
정밀기기	5.4	7.6	-2.3
수송장비	3.1	3.2	-0.1
가구 및 기타제조업	8.2	9.6	-1.4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8.8	9.4	-0.7
전력·가스·수도	1.7	1.8	-0.1
건설	11.4	11.6	-0.2
서비스	17.3	15.2	2.1
도소매	45.2	35.0	10.1
음식점 및 숙박	29.3	27.6	1.7
운수 및 보관	19.1	15.0	4.1
통신 및 방송	4.5	3.8	0.6
금융 및 보험	9.7	8.0	1.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5	6.5	0.0
공공행정 및 국방	11.8	11.6	0.2
교육 및 보건	16.5	17.0	-0.5
사회 및 기타서비스	29.8	23.5	6.3
전산업	10.7	10.4	0.3

2) 고용계수

□ 충청지역의 고용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1.4(명/10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8.3), 농림어업 (3.6), 제조업(3.5) 등의 순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피용자수(취업자에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표 2-14〉 산업별 고용계수

(단위 : 명/10억원)

	충청지역(A)	전국(B)	(A-B)
농림어업	3.6	3.7	-0.1
광업	3.5	5.2	-1.7
제조업	3.5	3.8	-0.4
음식료품	2.9	3.2	-0.2
섬유 및 가죽제품	7.4	8.4	-1.0
목재 및 종이제품	3.4	5.1	-1.8
인쇄, 출판 및 복제	9.6	8.2	1.4
석유 및 석탄제품	0.3	0.3	0.0
화학제품	2.9	3.3	-0.4
비금속 광물제품	3.9	4.2	-0.3
제1차 금속제품	1.8	1.5	0.3
금속제품	7.1	7.4	-0.3
일반기계	5.0	5.5	-0.5
전기 및 전자기기	4.0	3.7	0.3
정밀기기	5.1	7.1	-2.0
수송장비	3.1	3.1	0.0
가구 및 기타제조업	6.5	7.5	-0.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8.3	9.0	-0.7
전력·가스·수도	1.7	1.8	-0.1
건설	10.8	11.1	-0.3
서비스	11.4	10.3	1.0
도소매	17.0	16.0	1.0
음식적 및 숙박	12.5	12.9	-0.3
운수 및 보관	13.0	10.5	2.4
통신 및 방송	4.0	3.6	0.5
금융 및 보험	9.6	7.9	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2	5.4	-0.2
공공행정 및 국방	11.8	11.6	0.2
교육 및 보건	15.1	15.3	-0.2
사회 및 기타서비스	15.1	13.2	1.9
전산업	6.5	7.1	-0.6

Ⅲ. 충청지역 경제의 산업연관효과

1.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 생산유발효과

□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1.31* 수준

* 생산유발계수 1.31은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1.31단위의 생산이 유발되었다는 의미. 즉 최종수요 142조 3,401억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186조 9,128억원의 생산이 필요($1.31 = 186\text{조 } 9,128\text{억원} / 142\text{조 } 3,401\text{억원}$)함을 의미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투자(1.37)가 가장 높았으며 이출(1.33), 수출(1.29), 소비(1.28)의 순

○ 항목별 생산유발의존도(구성비)는 이출이 47.6%로 가장 높고 소비(23.7%), 수출(17.0%), 투자(11.7%)의 순

〈표 3-1〉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 관련지표

	생산유발액(10억원) ¹⁾	생산유발계수 ²⁾	생산유발의존도(%)
소 비	44,239.1	1.28	23.7
투 자	21,824.8	1.37	11.7
수 출	31,857.4	1.29	17.0
이 출	88,991.5	1.33	47.6
최종수요	186,912.8	1.31	100.0

주 : 1)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액 : 2003년 중 충청지역 소비, 투자, 수출, 이출 등 최종수요로 인해 충청지역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액

2)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 : 1)의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액을 소비, 투자, 수출, 이출 등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금액으로 나눈 계수

□ 2003년중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1.3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33), 서비스(1.31), 농림어업(1.28), 광업(1.28) 등의 순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산업에서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산된 1단위와 이 1단위 생산을 위해 해당 산업 및 타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 생산된 크기를 합한 것

○ 제조업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49)이 가장 높았으며 비금속광물(1.45), 화학(1.39), 제1차금속(1.38), 수송장비(1.37) 등이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1.43), 음식점 및 숙박업(1.40), 도소매(1.34), 통신 및 방송(1.32) 등이 높음

〈표 3-2〉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생 산 유 발 산 업	피 생 산 유 발 산 업					전국 (2003)
	농림어업	광공업	전·가·수 및 건설	서비스	합계	
농림어업	1.05	0.11	0.01	0.12	1.28	1.68
광업	0.00	1.05	0.02	0.21	1.28	1.57
제조업	0.04	1.17	0.02	0.10	1.33	1.97
음식료품	0.27	1.11	0.01	0.10	1.49	2.02
섬유 및 가죽제품	0.00	1.14	0.03	0.10	1.27	1.98
목재 및 종이제품	0.00	1.12	0.05	0.10	1.28	1.93
인쇄, 출판 및 복제	0.00	1.13	0.01	0.15	1.29	2.13
석유 및 석탄 제품	0.00	1.04	0.01	0.03	1.08	1.14
화학제품	0.00	1.24	0.03	0.12	1.39	2.00
비금속광물제품	0.00	1.22	0.03	0.20	1.45	2.06
제1차 금속제품	0.00	1.26	0.02	0.10	1.38	0.27
금속제품	0.00	1.12	0.01	0.09	1.21	2.16
일반기계	0.00	1.20	0.01	0.11	1.32	2.18
전기 및 전자기기	0.00	1.13	0.01	0.09	1.23	1.71
정밀기기	0.00	1.13	0.01	0.21	1.35	1.87
수송장비	0.00	1.29	0.01	0.07	1.37	2.30
가구 및 기타제조업	0.00	1.14	0.01	0.15	1.31	2.0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0.00	0.16	1.03	0.14	1.33	1.87
전력·가스·수도	0.00	0.03	1.08	0.07	1.19	1.49
건설	0.00	0.21	1.01	0.16	1.38	1.98
서비스	0.01	0.07	0.02	1.21	1.31	1.59
도소매	0.00	0.02	0.02	1.30	1.34	1.60
음식점 및 숙박	0.07	0.17	0.02	1.14	1.40	1.92
운수 및 보관	0.00	0.08	0.01	1.15	1.23	1.55
통신 및 방송	0.00	0.02	0.02	1.29	1.32	1.58
금융 및 보험	0.00	0.02	0.01	1.24	1.27	1.4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0	0.02	0.04	1.15	1.22	1.52
공공행정 및 국방	0.00	0.04	0.02	1.16	1.22	1.55
교육 및 보건	0.00	0.05	0.02	1.17	1.24	1.55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	0.10	0.03	1.30	1.43	1.85
전산업					1.31	1.68

주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총 얼마만큼 생산

되는지를 나타냄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 1단위당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6* 수준

* 부가가치 유발계수 0.56이란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0.56단위의 부가가치 생산이 유발되었다는 의미. 즉 최종수요 142조 3,401억원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79조 7,158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0.56 = 79\text{조 } 7,158\text{억원} / 142\text{조 } 3,401\text{억원}$)

○ 항목별로는 소비(0.75), 투자(0.61), 이출(0.50) 및 수출(0.41)의 순

□ 부가가치 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구성비)를 보면 이출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32.6%), 수출(12.7%), 투자(12.2%) 등의 순

〈표 3-3〉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 관련지표

		부가가치유발액 (10억원) ¹⁾	부가가치유발계수 ²⁾	부가가치유발 의존도(%)
소	비	25,992.4	0.75	32.6
투	자	9,746.4	0.61	12.2
수	출	10,151.2	0.41	12.7
이	출	33,825.8	0.50	42.4
최종수요		79,715.8	0.56	100.0

주 : 1)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 : 2003년중 충청지역 소비, 투자, 수출, 이출 등 최종수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규모

2)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1)의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을 소비, 투자, 수출, 이출 등 충청지역 최종수요 항목별 금액으로 나눈 계수

- 2003년중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면 농림어업(0.75), 서비스업(0.73),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0.59), 제조업(0.43)의 순으로 높았음
- 제조업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0.5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인쇄·출판 및 복제(0.54), 비금속광물(0.5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0.47), 정밀기기(0.46) 등이 양호
-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각각 0.85로 가장 크고 도소매(0.80), 교육 및 보건(0.80), 통신 및 방송(0.79), 공공행정 및 국방(0.77) 등의 순

〈표 3-4〉 충청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충청IO이용 (A)	전국(2003) (B)	(A-B)
농림어업	0.75	0.89	-0.14
광업	0.78	0.90	-0.12
제조업	0.43	0.64	-0.22
음식료품	0.58	0.80	-0.21
섬유 및 가죽제품	0.40	0.69	-0.29
목재 및 종이제품	0.43	0.65	-0.22
인쇄, 출판 및 복제	0.54	0.82	-0.27
석유 및 석탄제품	0.39	0.41	-0.02
화학제품	0.40	0.63	-0.22
비금속광물제품	0.52	0.77	-0.25
제1차금속제품	0.31	0.59	-0.28
금속제품	0.40	0.74	-0.35
일반기계	0.40	0.72	-0.32
전기 및 전자기기	0.39	0.55	-0.16
정밀기기	0.46	0.66	-0.20
수송장비	0.37	0.70	-0.3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47	0.72	-0.25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0.59	0.80	-0.22
전력, 가스 및 수도	0.52	0.67	-0.16
건설	0.61	0.84	-0.23
서비스	0.73	0.89	-0.16
도소매	0.80	0.91	-0.11
음식점 및 숙박	0.62	0.84	-0.22
운수 및 보관	0.62	0.69	-0.06
통신 및 방송	0.79	0.91	-0.12
금융 및 보험	0.85	0.95	-0.1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85	0.94	-0.09
공공행정 및 국방	0.77	0.91	-0.14
교육 및 보건	0.80	0.90	-0.1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69	0.89	-0.20
전산업	0.56	0.74	-0.18

주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총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생산되는지를 나타냄

2. 전 · 후방 연쇄효과

□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 해당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전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산출이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타산업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남

- 충청지역에 소재한 기업간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 충청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충청지역 생산이 충청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

① 충청지역에 미치는 효과만 감안하는 경우(충청지역 지역내IO 이용) 음식료품이 1.12로 가장 크며 비금속광물제품(1.09), 사회 및 기타서비스(1.08), 음식점 및 숙박(1.06), 화학제품(1.05), 건설(1.04) 등의 순

②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지역간IO 이용) 수송장비가 1.29로 가장 컸으며 제1차금속제품(1.23), 금속제품(1.21) 등이 높게 나타남

〈표 3-5〉 충청지역 산업의 영향력 계수¹⁾

	충청지역IO 이용 (A)	지역간IO 이용 (B)	(A-B)
농림어업	0.97	0.90	0.07
광업	0.97	0.85	0.12
제조업	1.00	1.04	-0.04
음식료품	1.12	1.10	0.02
섬유 및 가죽제품	0.96	1.05	-0.09
목재 및 종이제품	0.96	0.97	-0.01
인쇄, 출판 및 복제	0.98	1.07	-0.10
석유 및 석탄제품	0.81	0.62	0.20
화학제품	1.05	1.03	0.01
비금속광물제품	1.09	1.09	0.00
제1차금속제품	1.04	1.23	-0.18
금속제품	0.92	1.21	-0.29
일반기계	0.99	1.18	-0.19
전기 및 전자기기	0.93	0.95	-0.02
정밀기기	1.02	1.08	-0.06
수송장비	1.03	1.29	-0.26
가구 및 기타제조업	0.99	1.11	-0.12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00	1.02	-0.02
전력·가스·수도	0.90	0.88	0.02
건설	1.04	1.07	-0.02
서비스	0.96	0.85	0.11
도소매	1.01	0.86	0.15
음식점 및 숙박	1.06	1.03	0.03
운수 및 보관	0.93	0.88	0.05
통신 및 방송	1.00	0.86	0.14
금융 및 보험	0.96	0.80	0.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92	0.77	0.15
공공행정 및 국방	0.92	0.82	0.10
교육 및 보건	0.93	0.81	0.12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8	1.02	0.06
전산업	1.00	1.00	

주 : 1) 후방연쇄효과와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1보다 크면 타산업에 비

해 후방연관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하고 1보다 적으면 후방연관성이 적은 산업으로 평가

□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를 산업별로 보면

* 모든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어떤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산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특정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제품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사용될수록 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남

- 충청지역에 소재한 기업간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 충청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충청지역 생산이 충청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

① 충청지역에 미치는 효과만 감안하는 경우(충청지역IO 이용)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72로 가장 높으며 화학제품(1.23), 음식점 및 숙박(1.20), 금융 및 보험(1.16), 농림수산물(1.12) 등도 높게 나타남

②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지역간IO 이용) 화학제품(2.11)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54), 목재 및 종이제품(1.40), 음식료품(1.27), 전력·가스·수도(1.24) 등의 순

〈표 3-6〉 충청지역 산업의 감응도 계수¹⁾

	충청지역IO 이용 (A)	지역간HO 이용 (B)	(A-B)
농림어업	1.12	1.13	-0.01
광업	0.82	0.72	0.10
제조업	1.02	1.29	-0.27
음식료품	1.11	1.27	-0.17
섬유 및 가죽제품	0.88	0.83	0.05
목재 및 종이제품	0.97	1.40	-0.43
인쇄, 출판 및 복제	0.81	0.67	0.15
석유 및 석탄제품	0.93	1.16	-0.23
화학제품	1.23	2.11	-0.88
비금속광물제품	0.94	1.03	-0.09
제1차 금속제품	1.08	1.13	-0.05
금속제품	0.85	0.79	0.06
일반기계	0.86	0.83	0.04
전기 및 전자기기	0.92	1.02	-0.10
정밀기기	0.80	0.70	0.10
수송장비	0.96	1.01	-0.05
가구 및 기타제조업	0.80	0.66	0.13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0.91	0.84	0.07
전력·가스·수도	1.08	1.24	-0.17
건설	0.84	0.68	0.16
서비스	1.14	1.01	0.13
도소매	0.84	0.83	0.01
음식점 및 숙박	1.20	1.09	0.10
운수 및 보관	1.06	0.99	0.07
통신 및 방송	1.09	0.89	0.20
금융 및 보험	1.16	1.01	0.1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2	1.54	0.18
공공행정 및 국방	0.77	0.61	0.17
교육 및 보건	1.00	0.88	0.12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83	0.66	0.17
전산업	1.00	1.00	

주 : 1) 전방연관성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1보다 크면 타산업에 비해

전방연관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하고 1보다 적으면 전방연관성이 적은 산업으로 평가

3.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1) 취업유발계수*

* 해당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과 기타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2003년 중 충청지역의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4.1(명/10억원)이었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9.0), 서비스(19.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1.1), 제조업(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20.0), 인쇄·출판 및 복제(15.8), 가구 및 기타제조업(10.8), 섬유 및 가죽제품(10.4) 등의 순

○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47.8), 음식점 및 숙박(35.3), 사회 및 기타서비스(33.1), 운수 및 보관(21.2) 등의 순

〈표 3-7〉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충청지역 (A)	전국 (B)	(A-B)
농림어업	59.0	57.6	1.4
광업	5.9	9.8	-3.9
제조업	7.9	12.1	-4.2
음식료품	20.0	27.2	-7.2
섬유 및 가죽제품	10.4	18.2	-7.8
목재 및 종이제품	5.6	13.3	-7.7
인쇄, 출판 및 복제	15.8	19.8	-4.0
석유 및 석탄제품	0.6	1.2	-0.6
화학제품	5.3	10.1	-4.8
비금속광물제품	7.8	12.6	-4.8
제1차 금속제품	3.8	7.1	-3.3
금속제품	9.8	15.9	-6.1
일반기계	7.6	13.9	-6.3
전기 및 전자기기	5.7	8.9	-3.2
정밀기기	8.7	15.2	-6.5
수송장비	5.2	11.1	-5.9
가구 및 기타제조업	10.8	17.6	-6.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1.1	15.5	-4.4
전력·가스·수도	3.0	4.4	-1.4
건설	14.2	18.7	-4.5
서비스	19.8	20.5	-0.7
도소매	47.8	40.1	7.7
음식점 및 숙박	35.3	40.5	-5.2
운수 및 보관	21.2	19.0	2.2
통신 및 방송	6.6	8.4	-1.8
금융 및 보험	12.0	11.9	0.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3	10.9	-2.6
공공행정 및 국방	13.7	16.4	-2.7
교육 및 보건	18.6	21.7	-3.1
사회 및 기타서비스	33.1	30.8	2.3
전산업	14.1	16.9	-2.8

2) 고용유발계수*

* 해당산업의 소비나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산업과 기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 2003년 충청지역의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8.1(명/10억원)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2.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0.1), 제조업(5.1), 농림어업(5.0)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는 인쇄·출판·복제업(11.3)이 가장 높았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9.0), 금속제품(8.2) 등의 순

○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17.2), 교육 및 보건(16.5), 음식점 및 숙박(14.4), 운수 및 보관(14.3) 등이 높게 나타남

〈표 3-8〉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충청지역 (A)	전국 (B)	(A-B)
농림어업	5.0	7.1	-2.1
광업	5.0	8.1	-3.1
제조업	5.1	8.6	-3.5
음식료품	5.1	8.3	-3.2
섬유 및 가죽제품	9.0	14.7	-5.7
목재 및 종이제품	4.7	10.4	-5.7
인쇄, 출판 및 복제	11.3	15.3	-4.0
석유 및 석탄제품	0.5	1.0	-0.5
화학제품	4.7	8.2	-3.5
비금속광물제품	6.6	10.1	-3.5
제1차 금속제품	3.3	5.6	-2.3
금속제품	8.2	12.4	-4.2
일반기계	6.7	11.5	-4.8
전기 및 전자기기	5.3	7.5	-2.2
정밀기기	7.8	12.7	-4.9
수송장비	4.7	9.2	-4.5
가구 및 기타제조업	8.2	13.1	-4.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0.1	13.5	-3.4
전력·가스·수도	2.7	3.9	-1.2
건설	12.9	16.3	-3.4
서비스	12.9	13.7	-0.8
도소매	18.9	19.6	-0.7
음식점 및 숙박	14.4	17.7	-3.3
운수 및 보관	14.3	13.4	0.9
통신 및 방송	5.7	6.9	-1.2
금융 및 보험	11.3	10.7	0.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	8.7	-2.1
공공행정 및 국방	12.9	14.7	-1.8
교육 및 보건	16.5	18.5	-2.0
사회 및 기타서비스	17.2	18.0	-0.8
전산업	8.1	11.2	-3.1

4. 피드백 효과

□ 충청지역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타지역을 통해서 다시 충청지역 산업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지역간 피드백 효과*(Inter-regional feedback effect)는 28개 산업 부문별로 0.15%~3.1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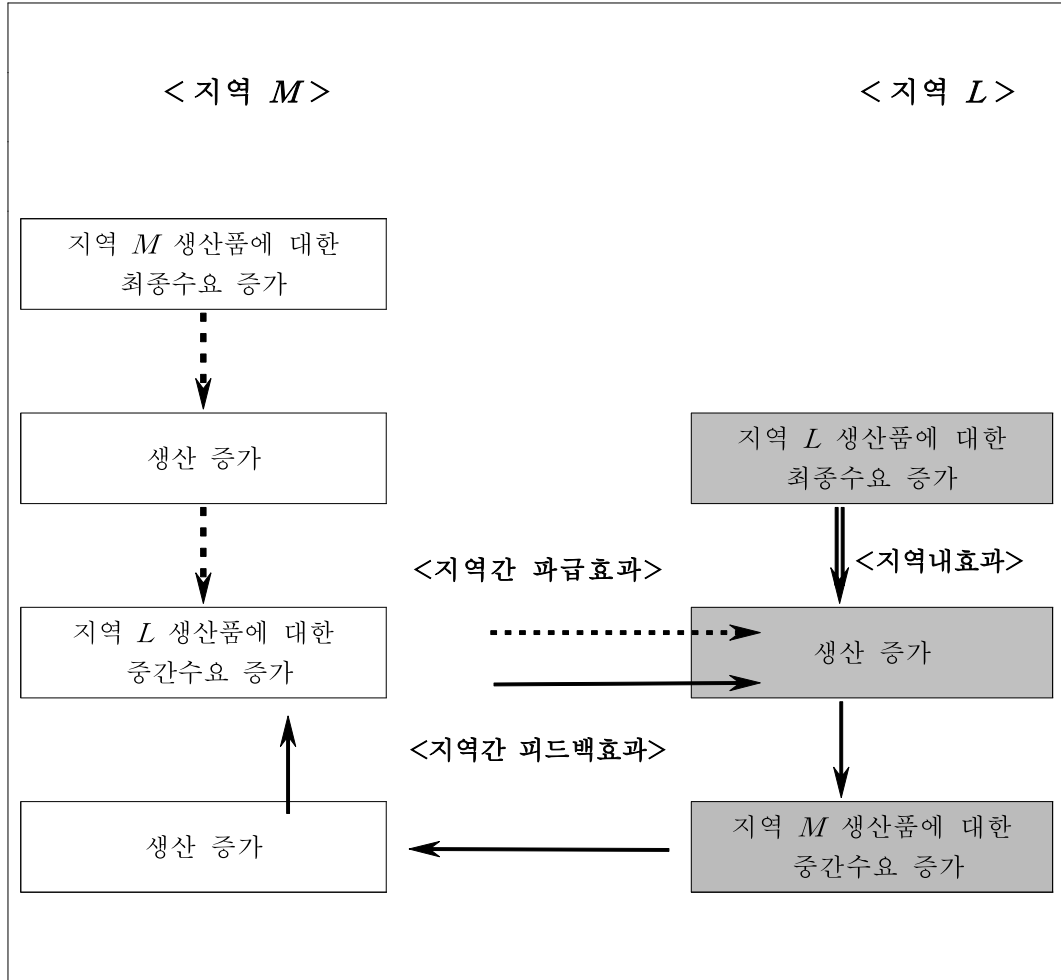
* 단일지역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충청지역내 생산유발계수를 각각 계측한 결과의 차이

○ 산업별로 보면 수송장비 3.12%, 인쇄·출판 및 복제 2.79%, 일반기계 2.11%, 섬유 및 가죽제품 2.00% 등의 순으로 환류효과가 크게 나타남

○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 0.15%, 금융 및 보험 0.53%, 도소매 0.59% 등은 환류효과가 작게 나타남

<참고>

<그림 3-1> 지역 L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 분해



〈표 3-9〉 충청지역 산업의 피드백 효과

	지역간IO이용 충청지역 생산유발계수(A)	충청지역IO이용 생산유발계수(B)	(A-B)	(A-B)/A (%)
농 립 어 업	1.298	1.281	0.017	1.34
광업	1.292	1.283	0.009	0.72
제조업	1.353	1.331	0.022	1.63
음식료품	1.510	1.487	0.023	1.53
섬유 및 가죽제품	1.298	1.272	0.026	2.00
목재 및 종이제품	1.297	1.276	0.022	1.66
인쇄, 출판 및 복제	1.330	1.293	0.037	2.79
석유 및 석탄제품	1.077	1.076	0.002	0.15
화학제품	1.405	1.385	0.020	1.39
비금속 광물제품	1.469	1.449	0.020	1.39
제1차 금속제품	1.401	1.382	0.019	1.35
금속제품	1.238	1.214	0.024	1.95
일반기계	1.344	1.316	0.028	2.11
전기 및 전자기기	1.249	1.230	0.019	1.50
정밀기기	1.372	1.349	0.023	1.70
수송장비	1.415	1.371	0.044	3.12
가구 및 기타제조업	1.336	1.308	0.028	2.0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347	1.330	0.017	1.26
전력·가스·수도	1.198	1.188	0.010	0.82
건설	1.404	1.384	0.020	1.42
서비스	1.284	1.272	0.012	0.93
도 소 매	1.348	1.340	0.008	0.59
음식점 및 숙박	1.420	1.401	0.020	1.39
운수 및 보관	1.245	1.234	0.012	0.93
통신 및 방송	1.333	1.325	0.008	0.63
금융 및 보험	1.280	1.273	0.007	0.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26	1.219	0.007	0.61
공공행정 및 국방	1.234	1.220	0.013	1.09
교 육 및 보 건	1.250	1.238	0.012	0.96
사 회 및 기 타 서 비 스	1.447	1.427	0.020	1.35
합계	35.716	35.218	0.498	1.39¹⁾ <1.38>²⁾

주 : 1) 산업별 계수를 단순 평균

2) 지역간IO와 충청지역IO 생산유발계수에 충청지역 최종수요를 곱하여 산출한 생산액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전산업 피드백 효과 계측에 유리

<참고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효과

-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공사기간 (2007~15년)중 9.3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충청지역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파급효과를 추정해보면

- 동 기간 동안 충청지역에 연평균 1.5조원의 생산, 0.7조원의 부가가치, 1.5만명의 고용을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2006.11

- 동 기간 중 건설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5조원(총 128조원)의 생산을 유발

〈표 3-10〉 생산유발효과

(단위 : 조원)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2.8<100.0>	1.9<14.8>	9.3<72.7>	1.5<11.7>

주 : < >내는 비중(%)

- 부가가치면에서는 동 기간 중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0.7조원 (총 5.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

〈표 3-11〉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조원)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5.6<100.0>	0.6<10.7>	4.1<73.2>	0.9<16.1>

주 : < >내는 비중(%)

- 고용면에서는 동 기간 중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5만명(총 13.1만명)의 취업을 유발

〈표 3-12〉 취업유발효과

(단위 : 만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3.1<100.0>	0.8< 6.1>	10.6<80.9>	1.5<11.5>

주 : < >내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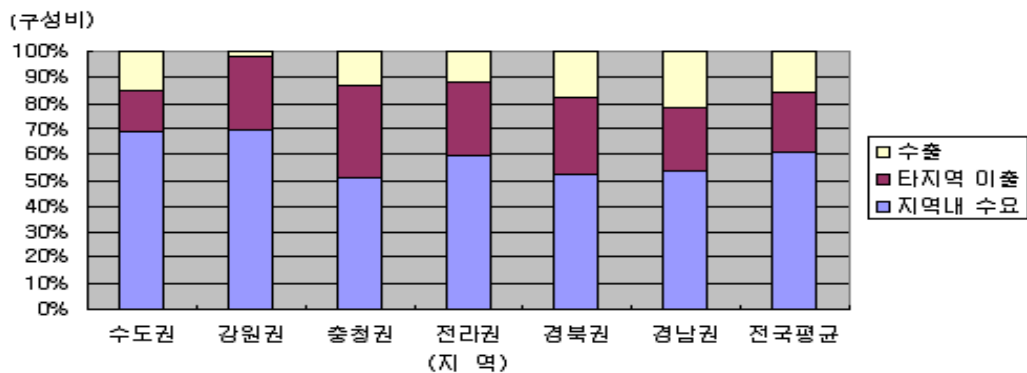
IV. 충청지역 경제의 주요 특징

1. 개방형 경제구조

□ 충청지역 경제는 6개 광역 경제권역 중 타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아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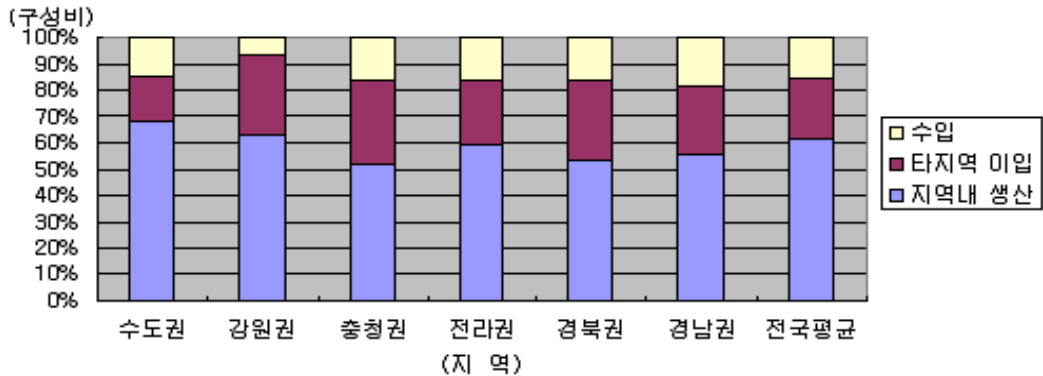
○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절반 정도(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

〈그림 4-1〉 6대 광역 경제권별 생산액의 수요처별 구성현황



○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0%는 수입되거나 타지역에서 이입

〈그림 4-2〉 6대 광역경제권별 수요의 공급지역별 구성현황



○ 충청지역 민간소비액 중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자გი지역공급률)도 60.7%에 불과

〈표 4-1〉 충청권 민간소비 자გი지역공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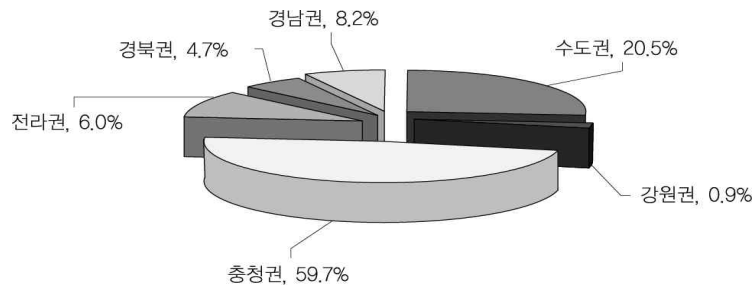
(단위 : 10억원, %)

구 분	충청지역 민간소비액(A)	충청산제품 충청지역 민간소비액(B)	자기지역 공급률(B/A)
농림수산물	1,301	725	55.7
공 산 품	11,882	3,186	26.8
(음 식 료 품)	4,289	2,059	48.0
(섬유 및 가죽제품)	1,497	164	10.9
(인쇄, 출판 및 복제)	300	43	14.2
(석유 및 석탄제품)	1,412	209	14.8
(화 학 제 품)	571	159	27.9
전력, 가스 및 수도	964	474	49.1
서 비 스	24,923	19,337	77.6
(도 소 매)	2,679	709	26.5
(음식점 및 숙박)	2,979	1,881	63.2
(운수 및 보관)	1,231	745	60.5
(통신 및 방송)	1,696	1,414	83.4
(금융 및 보험)	2,213	2,117	95.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781	4,197	87.8
전 산 업	39,047	23,697	60.7

주 : 자기지역공급률 = $\frac{\text{자기지역 생산품의 지역내 민간소비액}}{\text{지역내 민간소비액}}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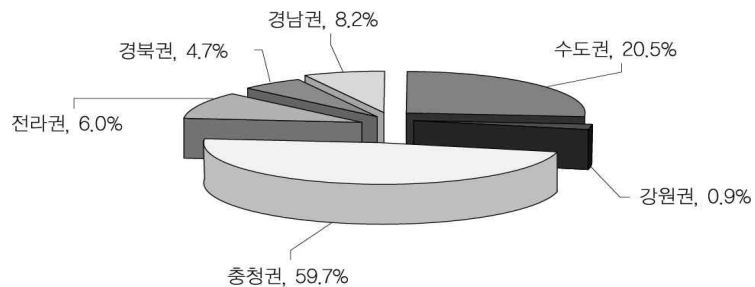
-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충청지역이 타지역 생산을 유발하는 정도를 보면 충청지역 최종수요 증가가 유발하는 생산의 40.3%는 충청이외 지역에서 발생

〈그림 4-3〉 충청지역 최종수요의 타지역 생산유발률



- 충청지역 생산의 타지역 최종수요 의존율은 46.2% 수준

〈그림 4-4〉 충청지역 생산의 타지역 최종수요 의존율



☐ 타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밀접

○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이출액 중 수도권에의 판매 비중이 57.6%

○ 타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 중 수도권 비중이 53.5%

2.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미흡

☐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충청지역의 주력산업을 추려보면

*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 산출액 기준

○ 제조업은 화학제품(전산업의 11.1%), 전기 및 전자기기(10.4%), 음식료품(7.6%), 수송장비(4.7%) 등

○ 비제조업은 건설(8.0%), 교육 및 보건(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평가해 보면

○ 음식료품, 건설, 교육 및 보건 등의 경우 지역내 부가가치·취업 유발정도 및 전후방 연쇄효과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전산업 평균치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면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화학,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의 업종은 지역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정도가 평균치를 하회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취업유발 정도가 미흡

-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 전후방 연쇄효과도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

→ 부가가치 또는 취업을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경우 소재·부품 등의 역외의존도가 높은 데 주로 기인

-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이 경기도 기흥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반도체품을 조립하여 수출하고, LCD, PDP 등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유리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부품을 역외에서 조달

〈표 4-2〉 주요 소재·부품의 충남지역 조달비중¹⁾

(단위 : %)

구분	소재·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충남지역 조달 비중
백라이트	25	10
구동 IC	20	-
유리기판	10	90
컬러필터	10	-
편광판	10	-
액 정	5	-
기 타	20	15
계	100	14.5

주 : 1) 2003년중 금액기준

자료 : 한국은행, 「충남지역 디스플레이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2004.11

3.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낮은 생산성

□ 충청권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50.9%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농림어업(21.3%), 제조업(18.4%)의 순

○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 9.7%p 낮은 상황

〈표 4-3〉 산업별 취업구조

(단위 : %)

구분	충청권(A)	전 국(B)	A-B
농 립 어 업	21.3	10.9	10.4
제 조 업	18.4	18.7	-0.3
건설업	8.7	9.3	-0.6
서비스	50.9	60.6	-9.7

자료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 충청권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국에 비해 낮은 상황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및 전국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를 고용표상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

〈표 4-4〉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충청권(A)	전 국(B)	A-B
농 립 어 업	11	12	-1
제 조 업	78	67	11
건설업	39	39	0
서비스	37	41	-4
전산업	41	43	-2



제 2차 연구회

1. 지역 주택가격의 파급효과 분석 : GVAR 모형의 활용

김 봉 환

2. 최근 일본지역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박 경

지역주택가격의 파급효과분석 : GVAR모형의 활용

김 봉 한
(공 주 대 학 교)

목 차

1. 연구의 배경	137
2. 기존연구	138
3. 연구방법론	140
4. 서울시의 경우	142
5. 전국의 경우	152
6. 결론	157

표 목 차

<표 1> 단위근 검정결과	144
<표 2> 공적분 검정결과	145
<표 3> 공적분 벡터 추정치	146
<표 4> 주택가격 변동율.....	147
<표 5> 주택가격 변동율의 상관계수.....	148
<표 6> 주택가격의 상관계수.....	153

그림 목 차

<그림 1> 강남 주요구의 주택가격 변동율.....	148
<그림 2> 강북 주요구의 주택가격 변동율.....	149
<그림 3>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강남구의 가격 상승에 대한 여타 구의 가격반응).....	150
<그림 4>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이자율 상승에 대한 구별 주택가격의 반응).....	151
<그림 5>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구별 주택가격의 반응).....	151
<그림 6> 1987.1 - 2007.12월 기간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지수(주택은행)	152
<그림 7>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여타 도시의 가격반응).....	154
<그림 8>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도시별 주택가격의 반응).....	155
<그림 9>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이자율 상승에 대한 도시별 주택가격의 반응).....	156

1. 연구의 배경

□ 지역 주택가격은 전국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 및 타지역의 주택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전국적 요인: 부동산정책, 금리, 유동성 및 경기

○ 지역적 요인: 지역 소득, 지역의 은행여신과 지역개발 등 지역의 특수요인

□ 일부 지역에서 급등한 주택가격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지역간 파급행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국주택가격을 주도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 지역의 주택가격의 변동을 GVAR(global VAR) 모형을 사용하여 전국적 요인, 지역적 요인 및 타지역의 주택가격으로 분해하고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여타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2. 기존연구

- ☐ 주택가격의 지역간 파급여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런던을 포함한 영국 동남지역의 주택가격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 ☐ Holmans(1990)는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발견
 - ① 영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이 지역별 소득 변동보다 더 큼
 - ② 영국의 남북간 주택가격 차이(north/south divide)가 198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다가 1990년 들어 축소
 - ③ 영국 동남지역이 영국 전체 주택가격 변동을 선도하는 양상
 - ④ 장기적으로 지역 주택가격간 정상상태(stationarity) 유지
- ☐ 이중 ③ 및 ④의 특징이 학자들간에 물결효과(ripple effect)라고 명명되고 다양한 시계열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검증되기 시작하였으나 물결효과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간 파급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이 활발해짐
- ☐ 대부분의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변화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파급되는지 여부를 분석

① 김의준 외(2000): Granger-Sims 인과관계 검정과 VAR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수도권 8개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강남구, 서초구 등 동남권의 가격변동이 양천구, 동작구 등 서남권과 신도시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분석대상기간 : 1989.11-1999.10)

② 최명섭 외(2003): 공간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on)을 통해 강남구 및 서초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각각 7km 및 5km 반경 안의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분석대상기간 : 2002.8월 횡단면 자료)

③ 이용만 · 이상한(2004)은 그랜저 인과관계와 Cointegration 검정을 통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비강남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분석대상기간 : 1991.1-2003.8)

□ 최근 김세완 · 박기정(2006)과 서승환(2007) 등이 강남지역 및 서울지역의 주택(아파트) 가격이 전국에 파급되는지 여부를 검정

① 김세완 · 박기정(2006): Nonlinear STAR을 이용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강남 지역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수도권 및 전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분석대상기간 : 1986.1-2005.12)

② 서승환(2007):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검정과 VECM의 분산분해를 사용하여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않고 인접지역인 강북, 분당 및 과천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분석대상기간 : 1986.1-2006.12)

□ 최영준 외(2008)은 지역간 상호연관성을 감안할 수 있는 SURADF 단위근 검정을 사용하여 지역간 주택가격의 파급여부를 살펴봄

-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주택가격의 지역간 파급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 이는 지역간 파급에 의해 전국에 걸쳐 거품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림

3. 연구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GVAR(global VAR) 모형을 사용하였음

- GVAR모형은 Dees, DiMauro, Pesaran and Smith(2005)와 Pesaran, Schuermann and Weiner(2004) 등이 개발한 GVAR 모형은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통경제정책변수를 고려하고 동시에 각 지역경제의 내생변수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고려하는 모형임
- GVAR 모형에서는 각 지역경제의 내생변수인 주택가격, 산업생산지수 등이 이자율, 통화량 및 경상수지와 같은 국민경제에 공통적인 정책변수와 타 지역경제의 내생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
- GVAR 모형에서 각 지역경제의 내생변수로 구성된 오차수정모형이 추정되는데 각 지역경제의 오차수정모형은 해당지역의 내생변수와 여타 지역경제 내생변수의 가중 평균 및 와 이자율과 같은 국민경제 공통의 변수로 구성됨

□ 각 지역경제의 오차수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연관됨

- $(N+1)$ 개의 지역 경제가 존재하고 $i = 0, 1, 2, \dots, N$ 이라고 함

- 각 지역경제의 내생변수 x (예를 들면 지역주택가격, 지역산업생산 등) 는 다른 지역의 내생변수의 가중평균인 x^* 와 국민경제전체의 이자율, 통화량 등의 변수(cx)와 시간 추세(t)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 $(k_i \times 1)$ 인 변수 x_{it}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

$$x_{it} = a_{i0} + a_{i1}t + \Phi_i x_{it-1} + \Lambda_{i0} x_{it}^* + \Lambda_{i1} x_{it-1}^* + \psi_{i0} d_t + \psi_{i1} d_{t-1} + \epsilon_{it}$$

- 여기서 $d_t = (t, cx_t)$, $\Phi_i = (k_i \times k_i)$ 의 계수행렬, $\Lambda_{i0}, \Lambda_{i1} = (k_i \times k_i^*)$ 의 계수행렬, $\psi_{i0}, \psi_{i1} = (k_i \times s)$ 의 계수행렬 $\epsilon_{it} = (k_i \times 1)$ 의 오차항 벡터 $\epsilon_{it} =$ 자기상관관계가 없고, 평균이 0이면 공분산 행렬이 $\Sigma_{ii} = (\sigma_{ii,ls})$ 인데 $\sigma_{ii,ls} = cov(\epsilon_{ilt}, \epsilon_{ist})$ 이어서 $\epsilon_{it} \sim iid(0, \Sigma_{ii})$ 임

- 여기서, d_t 와 x_{it}^* 가 약외생적인(weakly exogenous) $I(1)$ 프로세스임

공적분모형에서 약외생가정(weak exogeneity assumption)은 x_{it} 로부터 x_{it}^* 로의 장기 피드백 효과(long run feedback effects)가 없다는 것을 함축함

- 국가전체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Gx_t = a_0 + a_1 t + Hx_{t-1} + \psi_0 d_t + \psi_1 d_{t-1} + \epsilon_t$$

여기서

$$a_j = \begin{pmatrix} a_{0j} \\ a_{1j} \\ \dots \\ a_{Nj} \end{pmatrix} \quad \epsilon_t = \begin{pmatrix} \epsilon_{0t} \\ \epsilon_{1t} \\ \dots \\ \epsilon_{Nt} \end{pmatrix} \quad \psi_j = \begin{pmatrix} \psi_{0j} \\ \psi_{1j} \\ \dots \\ \psi_{Nj} \end{pmatrix} \quad G = \begin{pmatrix} A_0 W_0 \\ A_1 W_1 \\ \dots \\ A_N W_N \end{pmatrix} \quad H = \begin{pmatrix} B_0 W_0 \\ B_1 W_1 \\ \dots \\ B_N W_N \end{pmatrix}$$

W_i 는 $(k_i \times k_i^*) \times k$ 계수행렬로서 개별 지역경제모형을 전국모형으로 연결하는 연결행렬(link matrix)임

□ 본 연구에서 사용될 GVAR 모형에서 각 경제지역간의 상호관계는 다음의 3가지 경로로 모형화되는 것임

① x_{it} 와 x_{it}^* 간의 동시성관계와 x_{it} 와 x_{it-1}^* 간의 관계

② x_{it} 와 전체국민경제 변수(cx_t)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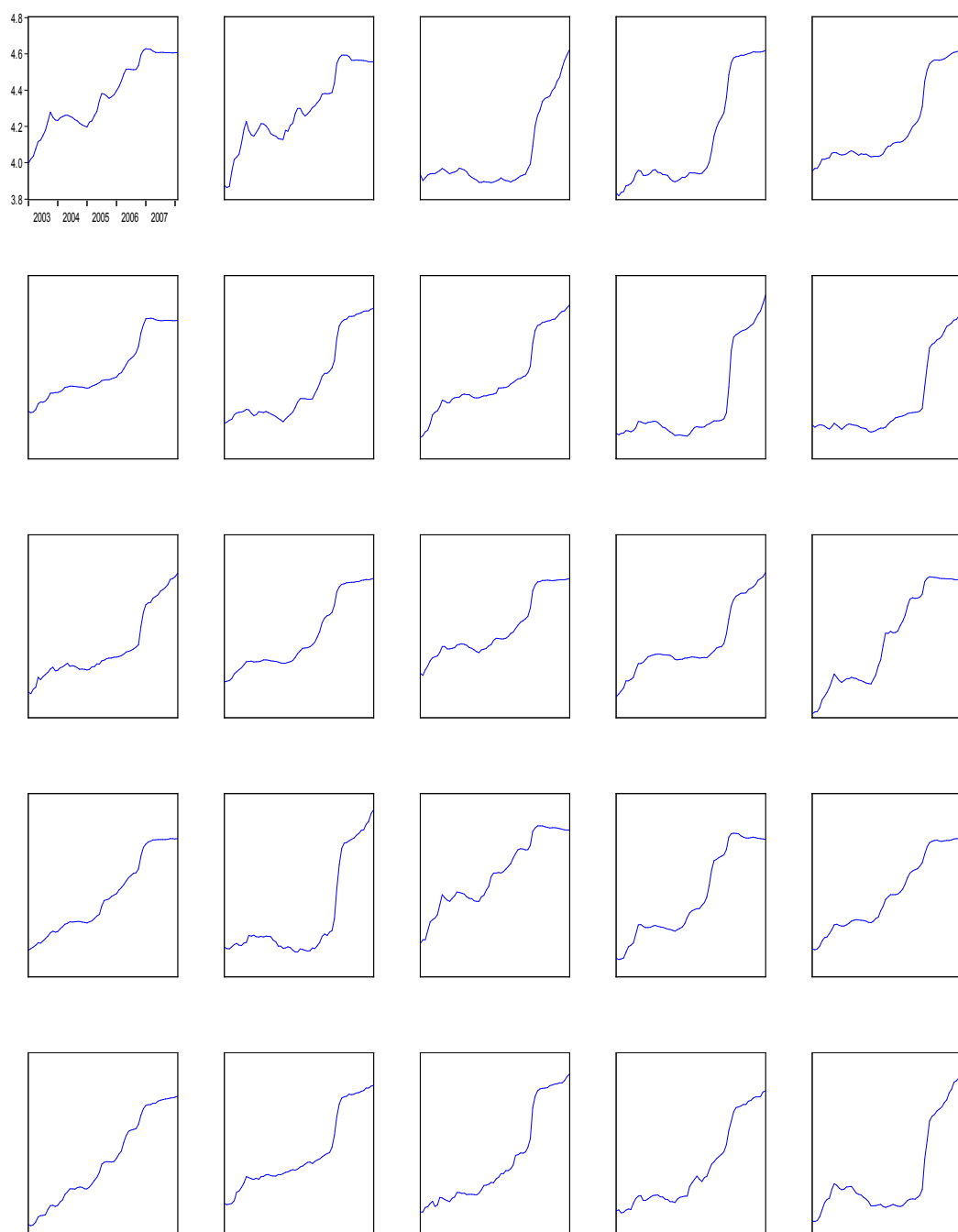
③ i 지역의 충격과 j 지역의 충격간의 contemporaneous 관계(Σ_{ij} 로 추정)

□ 이렇게 해서 모형을 추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함수를 구해서, 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4. 서울시의 경우

□ 표본기간: 2003.1 - 2008.2 (월간자료), 아파트 매매가격 (국민은행)

p1= 강북구, p2= 광진구, p3= 노원구, p4=도봉구, p5= 동대문구, p6=마포구
p7=서대문구, p8=성동구, p9=성북구, p10= 용산구, p11=은평구, p12=종로구
p13=중구, p14=중랑구, p15=강남구, p16=강동구, p17=강서구, p18=관악구
p19=구로구, p20=금천구, p21=동작구, p22=서초구, p23=송파구, p24=양천구
p25=영등포구



〈표 1〉 단위근 검정결과

주택가격				
	p		p^*	
	ADF	p -값	ADF	p -값
강남구	-1.0886	0.714	-0.2988	0.918
강동구	-0.4289	0.896	0.1200	0.964
강북구	-1.4723	0.540	-0.2506	0.925
강서구	-0.1587	0.937	0.1521	0.967
관악구	-1.6098	0.471	-0.8851	0.786
광진구	-2.0180	0.278	-0.7256	0.832
구로구	-0.8236	0.804	0.0696	0.960
금천구	-0.2890	0.919	-0.0325	0.951
노원구	0.8411	0.994	0.4127	0.981
도봉구	0.0242	0.956	-0.0926	0.945
동대문구	-0.0483	0.949	-0.1524	0.938
동작구	-0.7324	0.830	-0.0179	0.952
마포구	-0.9322	0.771	-0.7861	0.815
서대문구	-0.0977	0.944	-0.1587	0.937
서초구	-0.3166	0.915	0.1774	0.968
성동구	-0.3381	0.912	-0.3381	0.912
성북구	0.4460	0.983	0.4460	0.983
송파구	0.2403	0.973	0.1164	0.964
양천구	0.4620	0.984	0.1030	0.963
영등포구	-0.1492	0.938	0.1267	0.965
용산구	0.7096	0.991	0.7549	0.992
은평구	0.6105	0.988	0.0011	0.954
종로구	-0.4315	0.896	-0.0609	0.948
중구	-0.9094	0.778	0.0968	0.962
중랑구	0.2975	0.976	0.0560	0.959
금리	-1.6640	0.441		
통화량(M2)	5.1991	1.000		
산업생산	-4.0422	0.002		

〈표 2〉 공적분 검정결과

H_0	$r \leq 0$	$r \leq 1$	$r \leq 2$	$r \leq 3$	$r \leq 4$	lags
강남구	87.805 (0.001)	52.989 (0.015)	19.981 (0.424)	8.430 (0.420)	1.720 (0.189)	2
강동구	95.635 (0.000)	51.978 (0.019)	23.317 (0.230)	10.513 (0.243)	0.267 (0.604)	4
강북구	74.059 (0.022)	43.643 (0.117)	22.482 (0.272)	12.047 (0.154)	2.758 (0.096)	3
강서구	105.587 (0.000)	44.519 (0.099)	21.166 (0.347)	9.812 (0.295)	0.239 (0.624)	4
관악구	100.289 (0.000)	53.087 (0.014)	27.038 (0.100)	7.161 (0.559)	0.186 (0.665)	4
광진구	86.300 (0.001)	42.869 (0.135)	22.946 (0.248)	7.113 (0.564)	2.986 (0.084)	2
구로구	101.904 (0.000)	62.119 (0.001)	31.584 (0.030)	14.058 (0.081)	3.973 (0.046)	4
금천구	80.400 (0.005)	46.862 (0.061)	21.611 (0.320)	6.996 (0.578)	1.538 (0.214)	2
노원구	73.622 (0.024)	44.567 (0.098)	24.429 (0.183)	8.073 (0.457)	0.441 (0.506)	3
도봉구	72.689 (0.029)	37.807 (0.310)	15.641 (0.737)	5.329 (0.772)	2.110 (0.146)	2
동대문구	72.584 (0.029)	39.494 (0.241)	19.764 (0.438)	8.540 (0.409)	0.877 (0.349)	3
동작구	79.412 (0.007)	40.026 (0.221)	17.960 (0.569)	6.690 (0.613)	0.021 (0.883)	3
마포구	101.624 (0.000)	66.447 (0.000)	36.428 (0.007)	14.315 (0.074)	5.243 (0.022)	4
서대문구	80.142 (0.006)	49.857 (0.032)	29.499 (0.054)	14.335 (0.074)	3.162 (0.075)	3
서초구	110.275 (0.000)	53.230 (0.014)	27.010 (0.101)	11.179 (0.200)	2.216 (0.136)	4
성동구	91.372 (0.000)	51.782 (0.020)	25.874 (0.132)	10.749 (0.227)	2.583 (0.108)	2
성북구	109.807 (0.000)	48.831 (0.040)	22.924 (0.249)	10.094 (0.273)	0.1630 (0.686)	4
송파구	92.895 (0.000)	60.432 (0.002)	36.415 (0.007)	16.446 (0.035)	4.415 (0.035)	3
양천구	86.714 (0.001)	39.787 (0.230)	19.167 (0.480)	7.811 (0.485)	3.182 (0.074)	2
영등포구	97.195 (0.000)	51.568 (0.021)	25.692 (0.138)	9.606 (0.312)	0.624 (0.429)	4
용산구	94.121 (0.000)	53.177 (0.014)	26.482 (0.114)	13.608 (0.094)	3.443 (0.063)	4
은평구	106.172 (0.000)	67.647 (0.000)	38.762 (0.003)	17.623 (0.023)	5.234 (0.022)	4
종로구	93.039 (0.000)	58.338 (0.003)	32.084 (0.026)	14.369 (0.073)	3.640 (0.056)	4
중구	71.211 (0.038)	39.848 (0.228)	17.781 (0.582)	6.088 (0.685)	2.014 (0.155)	2
중랑구	81.683 (0.004)	49.903 (0.031)	26.349 (0.118)	10.851 (0.220)	0.812 (0.367)	3

〈표 3〉 공적분 벡터 추정치

지역	p^*	이자율	통화량	산업생산
강남구	-0.3064 (1.278)	-0.0349 (0.059)	3.6234 (1.452)	3.1252 (0.678)
강동구	-0.1296 (0.315)	-0.0074 (0.013)	1.9286 (0.313)	0.8853 (0.130)
강북구	0.6828 (0.851)	-0.1079 (0.040)	1.0002 (0.980)	1.8421 (0.403)
강서구	0.8807 (0.255)	0.0431 (0.010)	-0.5056 (0.256)	-1.2172 (0.139)
관악구	0.4455 (0.535)	-0.1244 (0.027)	1.8063 (0.614)	1.7779 (0.288)
광진구	1.5115 (0.163)	-0.0114 (0.008)	-0.7312 (0.195)	-0.0461 (0.068)
구로구	0.8075 (0.251)	-0.0163 (0.011)	0.8678 (0.289)	0.5533 (0.090)
금천구	1.1300 (3.030)	0.1020 (0.152)	-5.1341 (3.478)	-1.6227 (1.451)
노원구	0.3759 (0.318)	0.0252 (0.013)	0.1182 (0.283)	-0.5479 (0.127)
도봉구	1.8697 (0.540)	-0.0046 (0.025)	-0.0166 (0.614)	-0.2400 (0.212)
동대문구	1.6915 (0.328)	0.0365 (0.015)	-0.9984 (0.393)	-0.8635 (0.170)
동작구	0.3510 (0.172)	-0.0385 (0.008)	1.4802 (0.186)	0.4686 (0.082)
마포구	2.0714 (0.522)	0.0329 (0.024)	-0.9839 (0.608)	-1.5447 (0.301)
서대문구	2.0988 (0.515)	-0.0327 (0.029)	-0.5935 (0.619)	-0.6872 (0.231)
서초구	0.8825 (0.079)	0.0087 (0.004)	-0.0926 (0.080)	-0.1444 (0.032)
성동구	0.8429 (0.160)	-0.0035 (0.007)	-0.3171 (0.185)	-0.1836 (0.069)
성북구	1.3890 (0.153)	0.0472 (0.008)	-0.3514 (0.142)	-0.6852 (0.086)
송파구	0.7548 (0.063)	0.0041 (0.003)	-0.0439 (0.067)	-0.0951 (0.035)
양천구	0.8071 (0.061)	0.0071 (0.002)	0.0461 (0.062)	-0.0262 (0.022)
영등포구	0.5734 (0.144)	0.0219 (0.005)	-0.5220 (0.139)	-0.3376 (0.053)
용산구	1.5148 (0.118)	-0.0312 (0.009)	-0.4152 (0.107)	-0.0233 (0.065)
은평구	0.2521 (0.135)	0.0181 (0.005)	0.0932 (0.148)	-0.0531 (0.049)
종로구	0.7258 (0.199)	0.0223 (0.007)	0.4531 (0.236)	0.2903 (0.072)
중구	0.8146 (2.077)	-0.0805 (0.096)	3.7067 (2.251)	-0.2675 (0.803)
중랑구	0.5846 (0.228)	-0.0204 (0.008)	0.0874 (0.253)	-0.3291 (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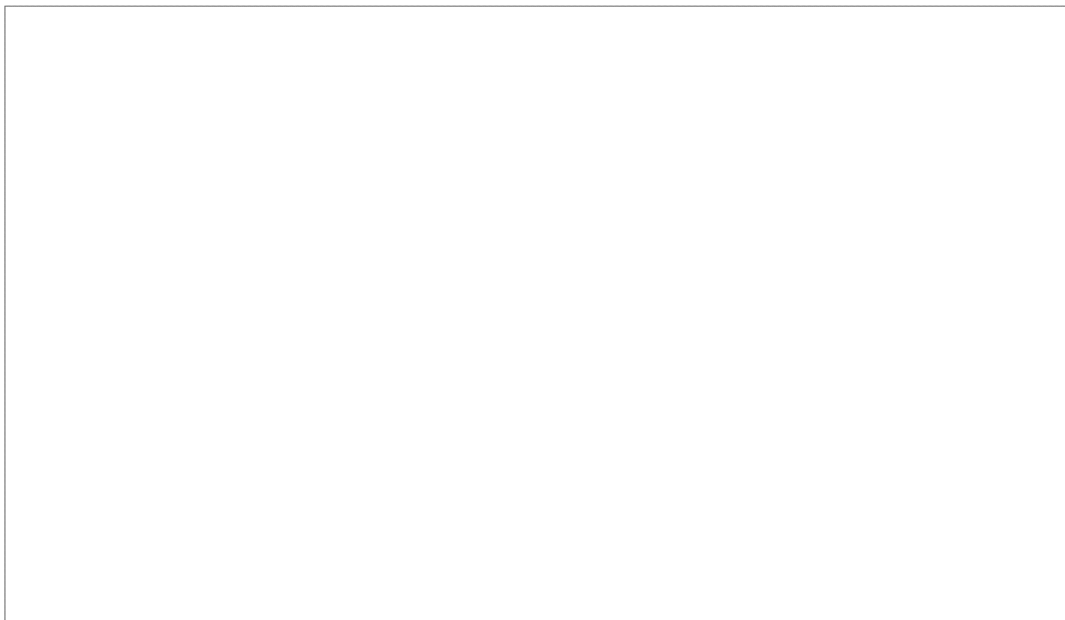
〈표 4〉 주택가격 변동율

구분	강남지역				강북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2003.1	0.038487	0.009069	0.021506	-0.0032	0	-0.00144	0.00644	-0.00287
2003.2	0.089238	0.06676	0.109713	0.053505	0.006515	-0.00072	0.020474	0.009302
2003.3	0.101718	0.068994	0.082426	0.05345	0.008984	-0.00106	0.016562	0.000411
2003.4	0.009001	0.001109	0.024244	0.036705	0.013387	-0.00101	0.003187	0.011792
2004.1	0.017772	0.008127	0.023241	-0.00366	0.001815	0.004215	0.008656	-0.00152
2004.2	0.002051	0.003071	0.015438	0.002855	-0.00067	0.000477	0.001606	0.001105
2004.3	-0.02535	-0.01142	-0.02751	-0.00781	-0.01508	-0.00618	-0.00316	-0.00618
2004.4	-0.02784	-0.01307	-0.01685	-0.00958	-0.01495	-0.00769	-0.00385	-0.01007
2005.1	0.02865	0.038282	0.032517	0.008489	-0.00437	0.001647	0.00578	-0.00108
2005.2	0.109752	0.129165	0.101996	0.048535	-0.00286	0.005448	0.005761	-0.0084
2005.3	0.026526	0.063321	0.024624	0.035011	0.023573	0.013891	0.012066	0.003994
2005.4	0.007415	0.001591	0.017428	0.017948	0.000433	0.010011	0.003332	-0.00235
2006.1	0.076252	0.067954	0.061216	0.088892	0.009296	0.004717	0.003696	0.00837
2006.2	0.064226	0.077604	0.05081	0.114373	0.008234	0.005061	0.009091	0.019305
2006.3	-0.00057	0.003147	-0.00391	0.019939	0.005908	0.003609	0.009575	0.00563
2006.4	0.104458	0.082762	0.117805	0.092601	0.186747	0.099012	0.076273	0.109011
2007.1	0.004876	0.004422	0.011882	2.86E-05	0.048492	0.050775	0.022193	0.036252
2007.2	-0.0172	-0.00526	-0.01067	-0.01868	0.010099	0.014771	0.016792	0.007539
2007.3	-0.00016	-0.00157	-0.00039	0.002865	0.016002	0.024975	0.015816	0.012509
2007.4	-0.00141	-0.00332	-0.00983	-0.00596	0.035418	0.012091	0.0199	0.014767

〈표 5〉 주택가격 변동율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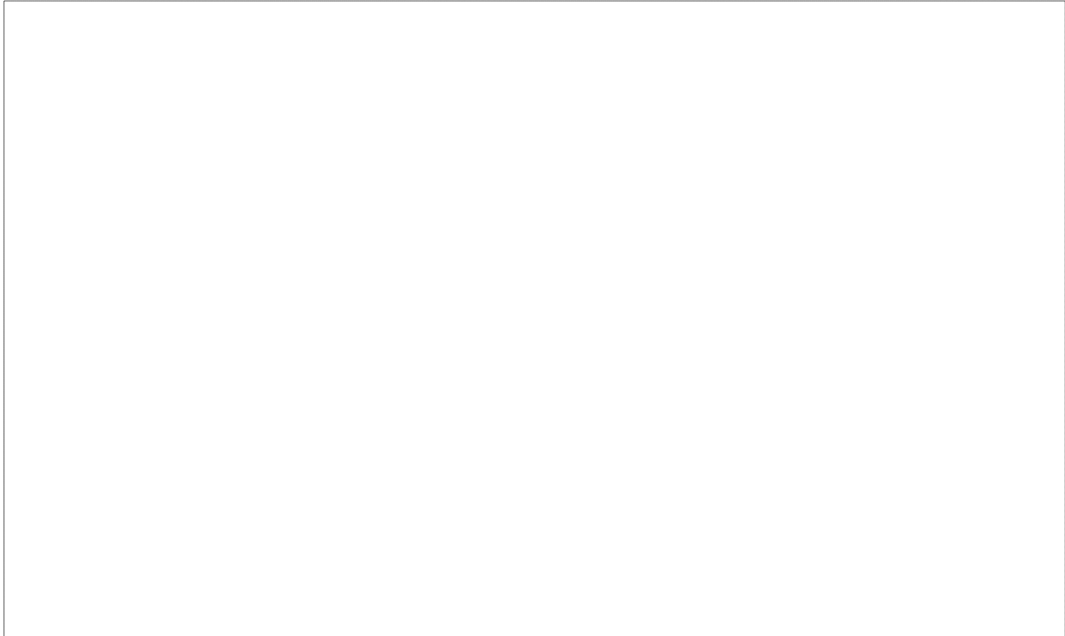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남구	1							
서초구	0.9213	1						
송파구	0.9655	0.8816	1					
양천구	0.7886	0.7900	0.7603	1				
노원구	0.3623	0.2768	0.4348	0.3930	1			
도봉구	0.2538	0.2037	0.3306	0.2708	0.9455	1		
동대문구	0.4406	0.3280	0.5122	0.3749	0.9590	0.9084	1	
성북구	0.3406	0.2500	0.4210	0.4473	0.9766	0.9389	0.9370	1

〈그림 1〉 강남 주요구의 주택가격 변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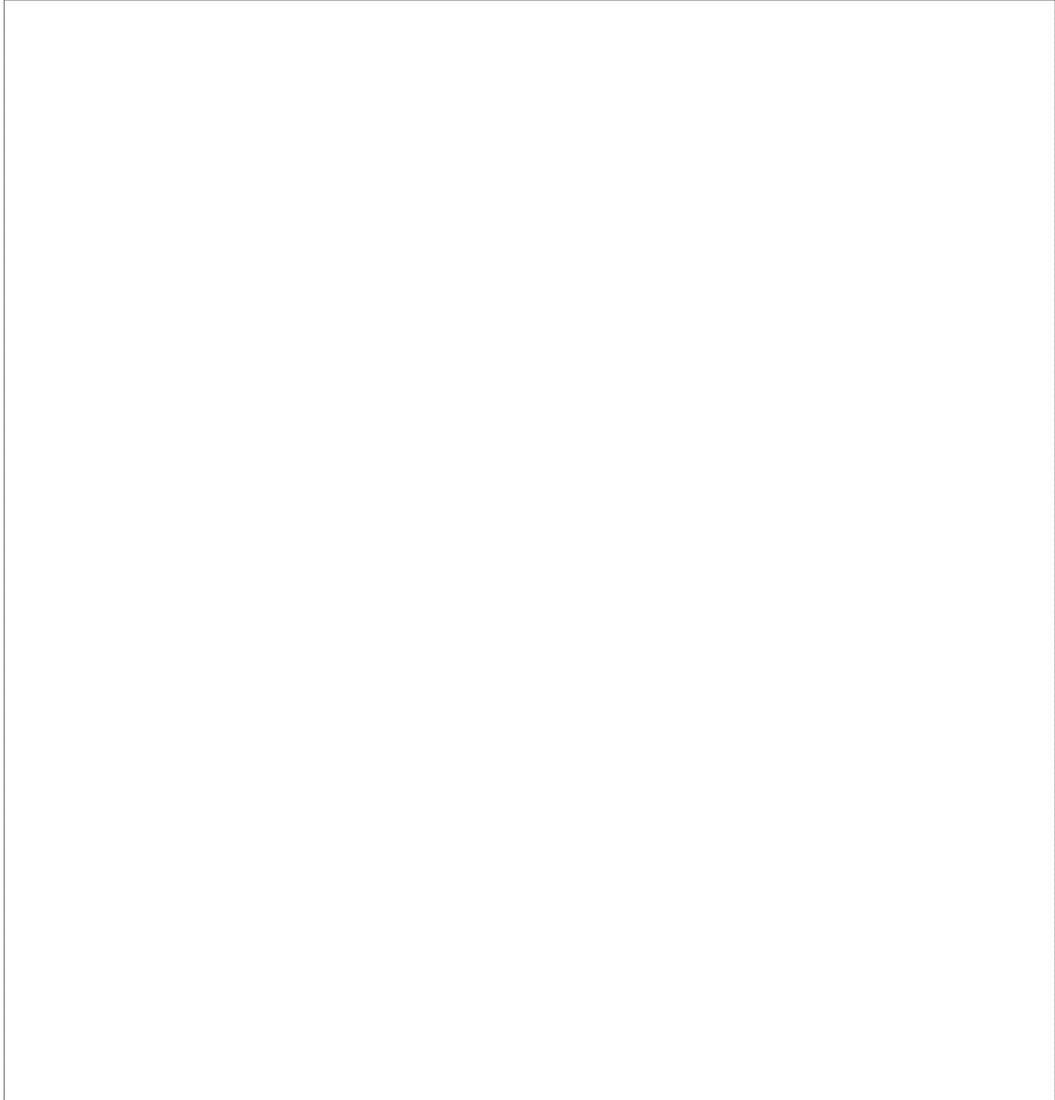
p1= 강남구, p2= 서초구, p3= 송파구, p4= 양천구

〈그림 2〉 강북 주요구의 주택가격 변동율



p5= 노원구, p6= 도봉구, p7= 동대문구, p8= 성북구

〈그림 3〉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강남구의 가격 상승에 대한 여타 구의 가격반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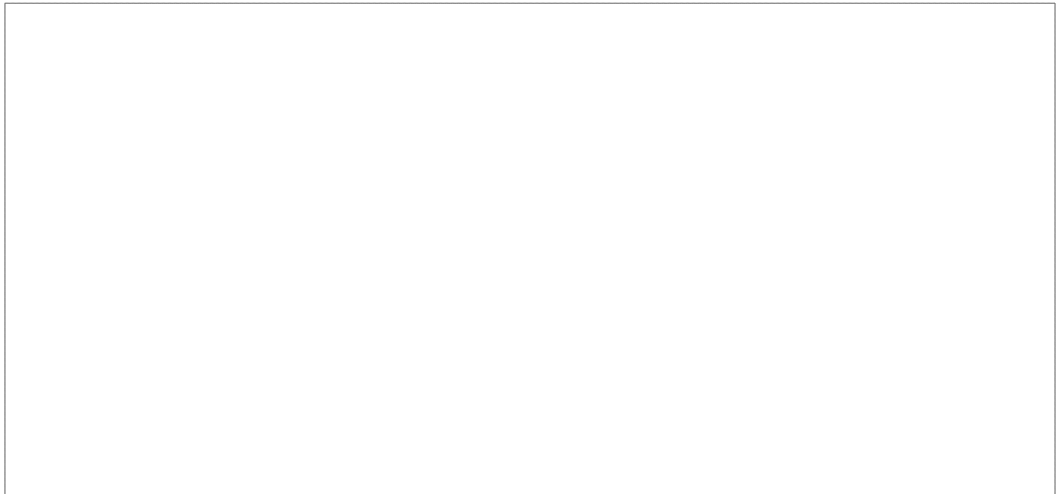
- ☐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강남구의 가격변동과 비슷하게 상승하지만 강북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매우 낮음

〈그림 4〉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이자율 상승에 대한 구별 주택가격의 반응 -



☐ 이자율 상승시 강북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지만,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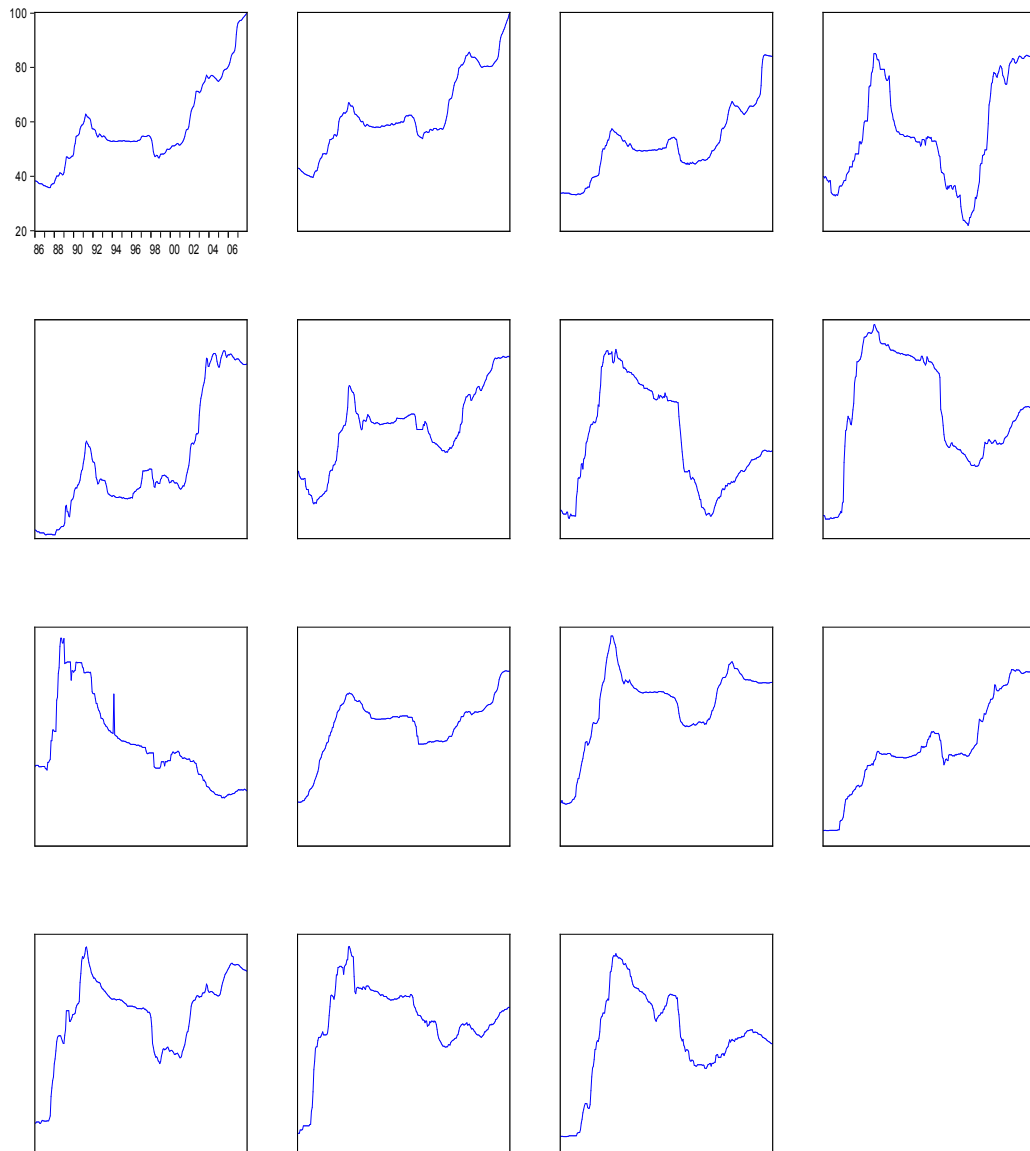
〈그림 5〉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구별 주택가격의 반응 -



☐ 산업생산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상승

5. 전국의 경우

〈그림 6〉 1987.1 - 2007.12월 기간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주택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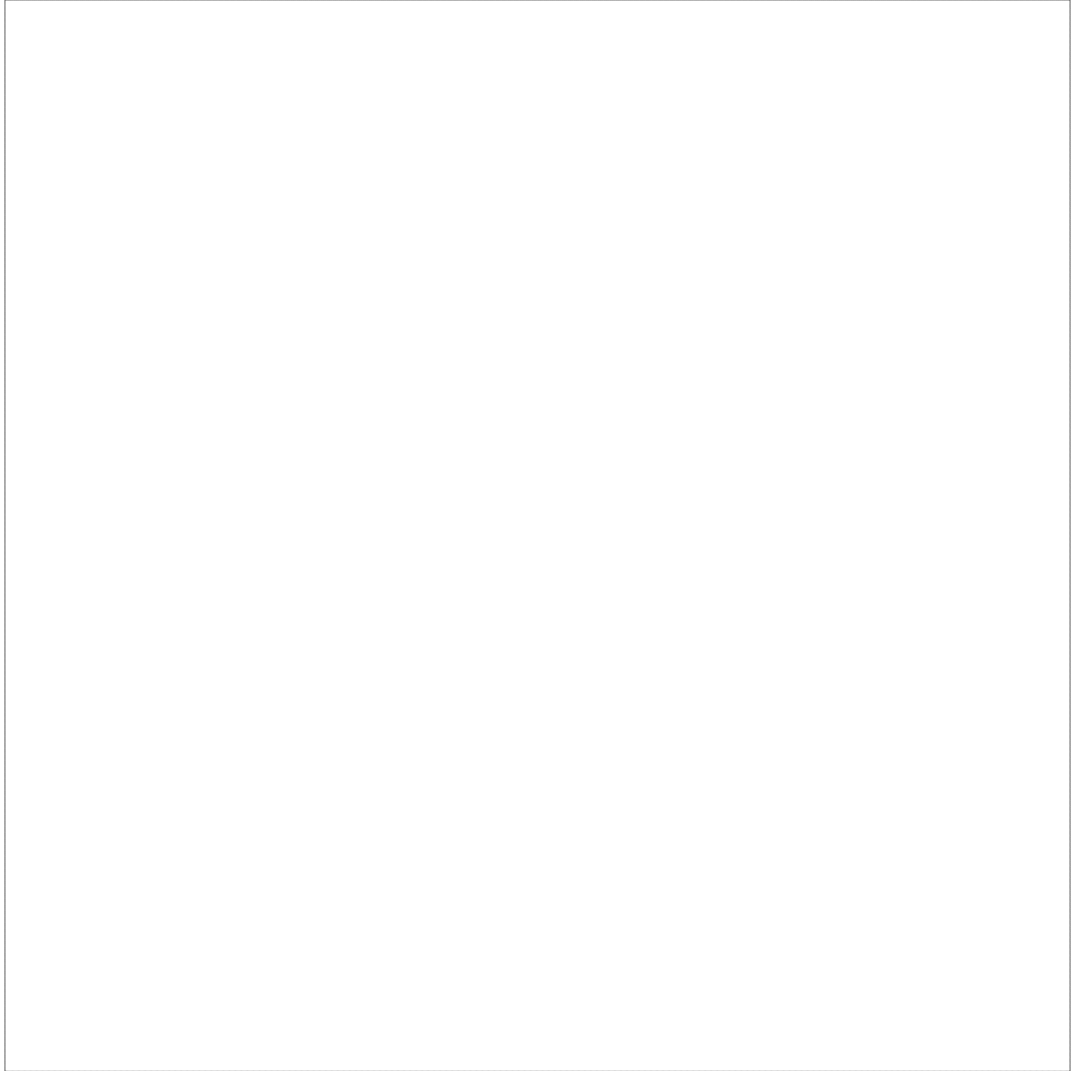


〈표 6〉 주택가격의 상관계수

지역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대전	청주	전주	광주
서울	1							
인천	0.98	1						
수원	0.97	0.95	1					
천안	0.75	0.71	0.79	1				
대전	0.94	0.94	0.91	0.74	1			
청주	0.88	0.86	0.93	0.79	0.86	1		
전주	-0.02	-0.04	0.10	0.44	-0.12	0.26	1	
광주	0.14	0.14	0.26	0.48	0.02	0.40	0.95	1
목포	-0.49	-0.49	-0.47	-0.09	-0.57	-0.44	0.59	0.52
울산	0.78	0.78	0.84	0.78	0.68	0.85	0.54	0.70
부산	0.67	0.72	0.73	0.72	0.63	0.79	0.54	0.69
창원	0.93	0.95	0.92	0.66	0.94	0.89	-0.01	0.17
대구	0.73	0.73	0.76	0.82	0.65	0.79	0.57	0.71
포항	0.26	0.29	0.36	0.46	0.16	0.47	0.82	0.91
춘천	0.32	0.34	0.45	0.56	0.26	0.62	0.81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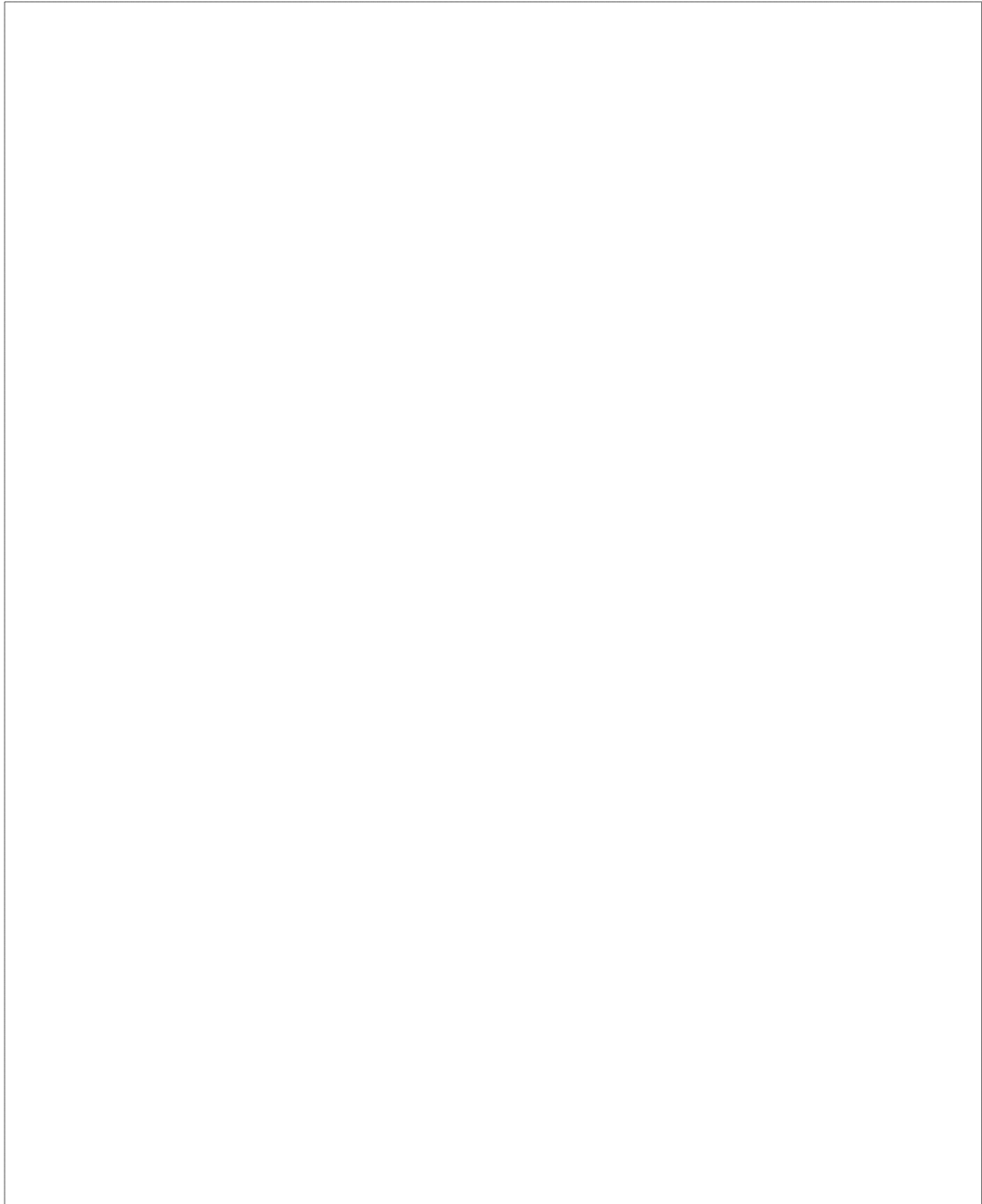
지역	목포	울산	부산	창원	대구	포항	춘천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목포	1						
울산	-0.01	1					
부산	0.01	0.92	1				
창원	-0.56	0.78	0.73	1			
대구	0.06	0.95	0.94	0.73	1		
포항	0.44	0.78	0.79	0.32	0.78	1	
춘천	0.19	0.77	0.83	0.41	0.77	0.85	1

〈그림 7〉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여타 도시의 가격반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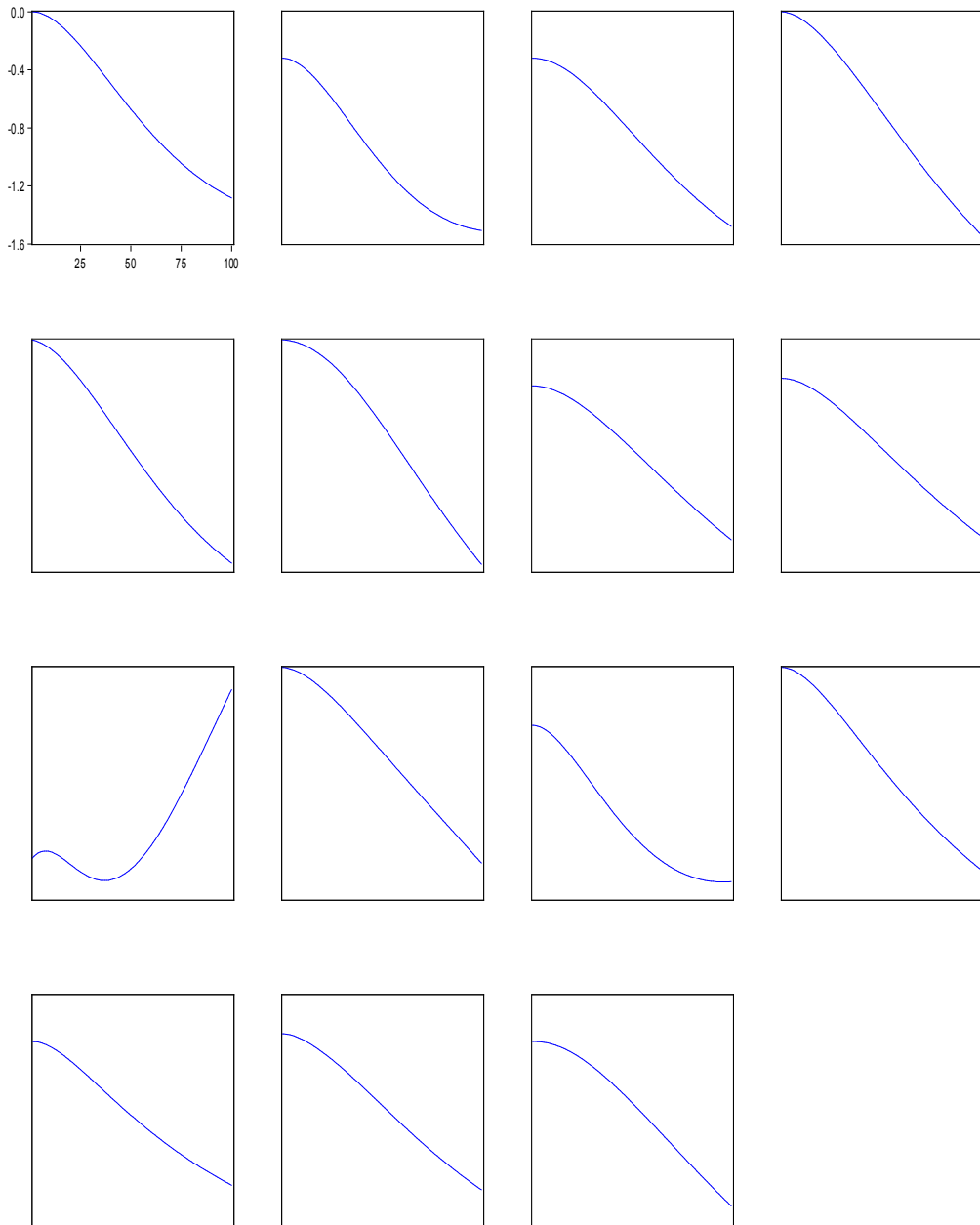


- ☐ 서울과 근접한 인천, 수원, 천안, 청주의 경우 서울 주택가격의 파급효과가 크다.
- ☐ 서울과 거리가 먼, 광주, 목포, 울산, 부산, 창원, 대구, 포항의 경우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의 파급효과가 낮다.

〈그림 8〉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도시별 주택가격의 반응 -



〈그림 9〉 충격반응함수 추정: GVAR 모형의 추정치 활용
 - 이자율 상승에 대한 도시별 주택가격의 반응 -



6. 결론

☐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파급효과

-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강남구의 가격변동과 비슷하게 상승하지만
- 강북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매우 낮음

☐ 전국의 도시별 주택가격 파급효과

- 서울과 근접한 인천, 수원, 천안, 청주의 경우 서울 주택가격의 파급효과가 큼
- 서울과 거리가 먼, 광주, 목포, 울산, 부산, 창원, 대구, 포항의 경우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의 파급효과가 낮음

☐ 이자율과 산업생산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주택가격의 지역간 파급효과는

- 서울에서는 강남지역이 파급효과의 진원지인데, 강남 주택가격은 강북지역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적으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인접지역에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최영준 외(2008)과 같이 지역간 파급효과에 의해 전국에 걸쳐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최근 일본 지역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박 경
(목 원 대 학 교)

목 차

I. 서론	165
II. 전후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의 검토	167
1. 전후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	167
2. 전후 일본 지역개발정책의 공·과	169
3.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들	171
III. 최근의 지역경제 정책의 동향	174
1. 최근의 지역정책 전환의 동향 : ‘균형발전’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174
2. 정책전환의 배경 :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	175
3. 국토정책 전환의 결과	178
4. 지방으로부터의 반발	179
IV. 논점과 시사점	181
1. 논점 : 로컬 옵티멈과 내셔널미니멈 및 분권의 방향	181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4
참고문헌	188

표 목 차

<표 2-1> 全國總合開發計劃(1차~5차)의 전개	167
<표 2-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168
<표 3-1>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	176
<표 3-2> 3위 일체 재정 분권개혁의 결과	178
<표 4-1> 지방 재정 모델의 비교	183

그림 목 차

<그림 2-1> 지역격차 수준과 동향.....	168
<그림 2-2> 지역격차의 국제비교.....	169
<그림 2-3> 3대 도시권 전입초과수의 추이.....	170
<그림 2-4> 공공투자 의존형 지역경제.....	170
<그림 3-1> 공장입지건수.....	176
<그림 3-2> 공공투자 관련 정부지출의 추이.....	177

I. 서론

□ 일본의 지역정책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전환한다. 즉, 1990년대 전반까지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국토정책의 이념으로 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는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내셔널미니멈에서 로컬미니멈)으로 전환하고 있음⁷⁾

□ 전후 일본의 지역정책을 반추해 보면, 공공투자, 공업분산,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에는 성공했으나 동경집중, 과소과밀, 토전국가, 지방의 공공투자 및 보조금 의존 체질 개선에는 실패하였음

○ 먼저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동경집중과 과소과밀의 원인과 정책실패 이유는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함

□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이념을 포기하고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내셔널미니멈에서 로컬미니멈)으로 전환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동경집중과 과소과밀의 해결과 지역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일본내 논란과 그 시사점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7) 일반적으로는 전후~1970년대까지의 중화학공업 거점개발기, 1980년대~90년대 후반의 다극분산형 균형발전기,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지역간 경쟁에 의한 자립화기로 나누나, 전후에서 1970년대까지도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기본 이념은 국토균형발전이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두기간으로 구분하기로 함(자세한 것은 伊藤敏安(2003) 참조).

- 1990년대 후반, 고이즈미 내각은 집권 이래 산업분산정책 폐기, 공공투자비 삭감, 지방지원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삭감, 도주제·시정촌 합병 등 지방분권과 지방제도 개혁과 신국토계획체제 도입, 신산업창출 정책, 클러스터 정책 등 신 지역산업정책 도입 등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 이후의 신 지역정책은 지역격차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 승자 독식이란 문제점을 초래하여 일본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지방분권형 비시장주의적 지역내생발전론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이 글에서는 공공투자 삭감, 내생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 원칙에 양 입장이 합치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방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전후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의 검토

1. 전후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

〈표 2-1〉 全國總合開發計劃(1차~5차)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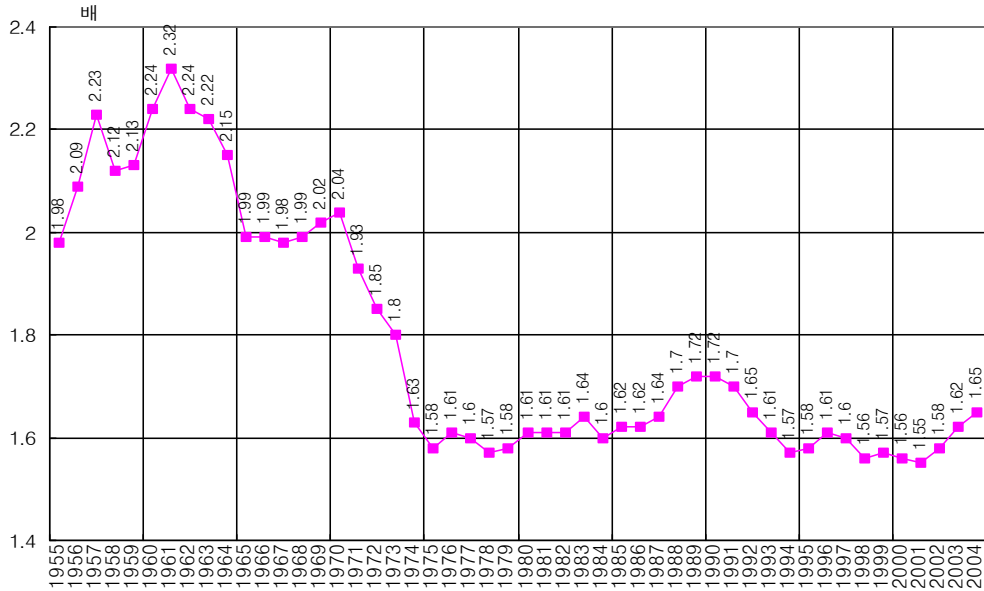
구분	一全總(1962)	二全總(1969)	三全總(1977)	四全總(1987)	五全總(1998)
목표년도	1970년	1985년	대략 10년간 (1987년)	대략 2000년	2010년~2015년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성장경제로의 이행 과대 도시문제, 소득격차의 확대 소득배증계획(태평양벨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성장경제 인구, 산업의 대도시 집중 정보화, 국제화, 기술혁신의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 경제성장기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 국토자원, 에너지의 유한성 현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및 제 기능의 동경일극집중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등에 의해 지방권에 서의 고용문제 심각화 본격적인 국제화의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화 시대, 지구환경문제, 대 경쟁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고도정보시대
기본적 목표	지역간의 균형발전	풍요로운 환경의 창조	인간 거주의 종합적 환경의 정비	多極分散型 국토의 형성	多軸型 국토형성의 기초 구축
개발방식	거점개발방식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	定住構想	교류 네트워크 구상	참가와 연대

주: 5全總의 원래 최종 목표연도는 2010~2015년경이었으나, 2005년에 국토종합개발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

형성계획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중에는 신법에 의한 전국계획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출처: 國土廳 監修, 『平成12年度 國土統計要覽』, 大成出版社, 2000.

〈그림 2-1〉 지역격차 수준과 동향



〈표 2-2〉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산업입지 정책	거점개발에 의한 공업집적	공업 재배치 정책	테크노폴리스 정책	두뇌입지구상	신산업 창출, 클러스터 정책
연대	50년대 후반 -60년대 중반	6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 후반 이후
배경	고도성장과 所得倍増政策	過小過密과 공해문제	오일쇼크이후 안정성장과 定住構想	경제의 소프트화, 엔고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국제화의 진전, 버블경제의 붕괴와 경제침체
산업 구조	중화학공업의 발전	가공조립 산업의 발전	첨단산업의 성장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해외생산비용의 확대, 지식정보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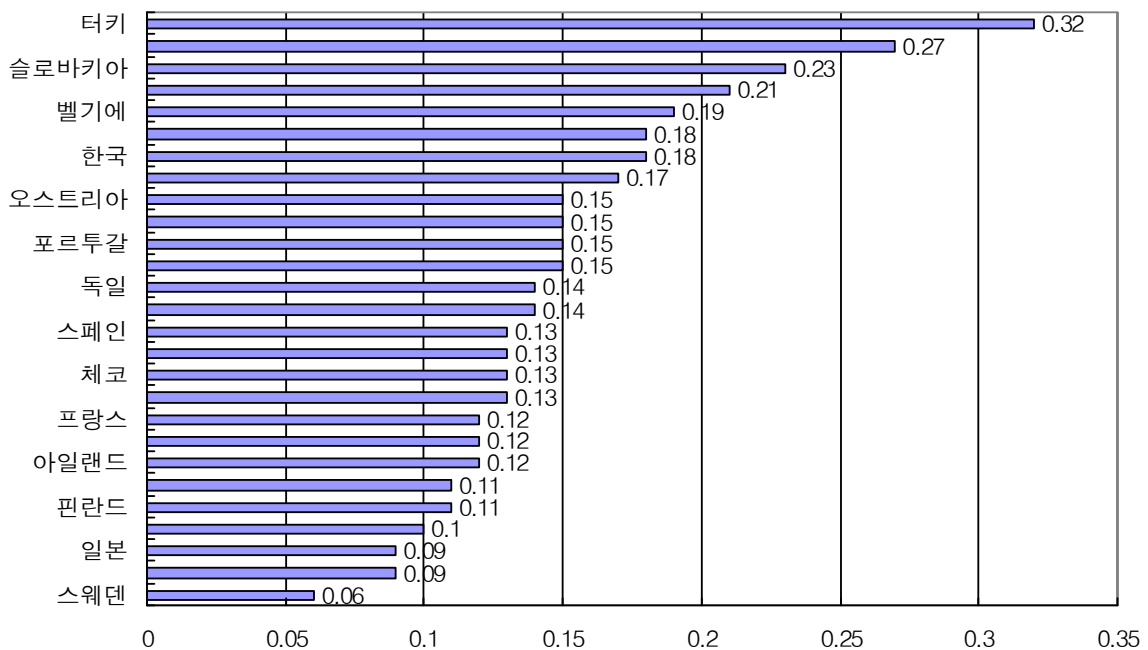
2. 전후 일본 지역개발정책의 공·과

□ 일본의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정책은 소득의 지역격차 축소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지방의 과소화와 동경권 일극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특히 1980년대의 버블경제 성장기에 동경일극 집중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 2000년에 이후 재차 확대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우선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균형정책은 지방의 공공투자 의존체질의 강화와 자생력의 약화, 정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음

〈그림 2-2〉 지역격차의 국제비교

(2001년, 27개국의 일인당 GDP의 지역간 격차 지니계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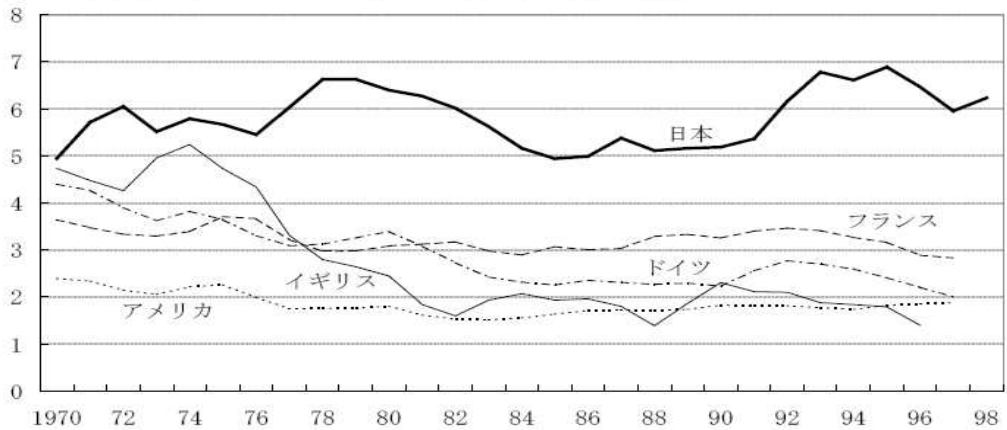


〈그림 2-3〉 3대 도시권 전입초과수의 추이



〈그림 2-4〉 공공투자 의존형 지역경제

図3.1 : 先進国におけるGDPに占める公共事業費割合の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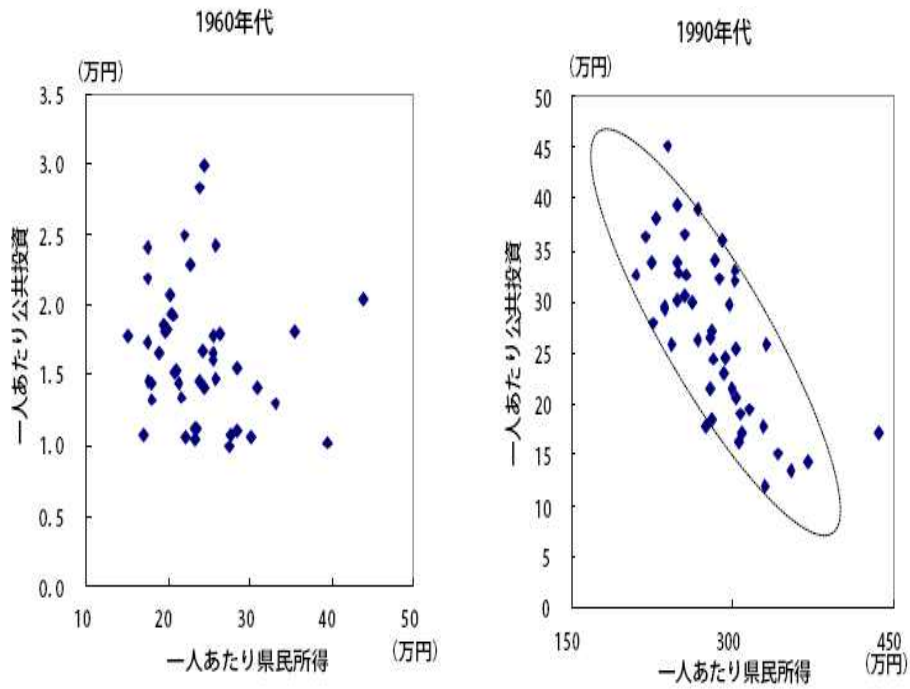
出所：日本：『国民経済計算年報』（年度ベース）

諸外国：OECD National Accounts 2000

注：ドイツの数字は1990年以前は旧西ドイツ

・公共事業費は一般政府ベースの総固定資本形成を示す。

- 1990년대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투자 의존도가 높아짐



3.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들

- 일본의 지역정책이 소득격차 문제 해소에는 기여했으나 동경권 일극집중과 과소 과밀 문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음
- 이또(伊藤敏安, 2003)는 5차에 걸친 전종계획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란 말이 일관되게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는 혼선을 겪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즉, 최초의 전종에서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소득 격차의 시정)'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였으나, 제 2차 및 제 3차 전종에서는 '균형 있는 국토 이용'이라고 변화됨. 그러나 제 4차 전종에서는 다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회귀. 한편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제 5차 전종)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발휘시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조건부의 표현으로 사용됨. 제 5차 전종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의 이념은 후퇴하고 자립과 경쟁에 의한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이 부각되었음

- 이런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이념과 목표의 혼선이 정책의 혼선을 가져왔으며, 각 전종에서 일인당 현민소득의 균형 혹은 생활여건의 균등화, 인구격차 시정 등 구체적인 균형발전의 목표가 모호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임

□ 한편 야마자키(山崎朗, 1994)는 지역격차를 일인당 소득격차, 생활조건 격차, 취업구조 격차의 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일본의 균형발전의 개념은 소득격차와 생활조건 격차에만 치중하여 국토균형발전이 국토이용의 균형으로 대체되면서 공공투자 확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충실화와 개발가능성의 확대에 주로 초점을 두게 되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정책은 산업재배치와 지역소득격차 해소에 머물면서 타 경제정책의 하위에 위치하고, 이 결과 지역간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취업기회의 격차로 인구유출의 가속화와 동경일극집중, 과소과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임

- 즉, 야마자키는 취업에 관한 기회균등의 문제로서 지역간 격차를 파악한다면 인구이동 정책은 최악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구이동에 의해 지역사회 전체의 소득이 그 인구 이동 분만큼 축소되고, 지역사회의 산업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가기 때문. 직업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은 거주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음. 거주선택의 자유는 지역간 이동에 의한 직업·산업간 이동 자유의 종속변수임.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보장해 가는 것이 인구이동을 억제하고 과소과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임.

- 이상으로 볼때, 국토계획의 포괄범위가 균형있는 국토이용을 넘어서 지역간 산업구성의 격차, 취업기회 격차, 임금격차, 생활조건의 격차까지 포괄해야 되는가는 논쟁점이지만, 적어도 국토 균형발전의 목표가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공업재배치에 국한되어서는 인구유출과 과소과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음

Ⅲ. 최근의 지역경제 정책의 동향

1. 최근의 지역정책 전환의 동향: '균형발전'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던 대도시권이 큰 경기 침체에 빠지고, 경제 불황으로 정부의 재정위기가 겹쳐, 1990년대 후반 이후 과거의 균형정책에서 지역 자율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함

○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의 2001년 6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정리한 「금후의 경제 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르면, 향후 지역정책은 글로벌 세계 경쟁의 시대 도래와 국가 재정의 위기라는 환경 변화 가운데, '균형있는 발전' 으로부터 '지역간 경쟁에 의한 활성화'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지방은 스스로의 판단과 재원에 의해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정촌 합병의 의한 대규모 지자체 형성을 통해 자립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과소지역의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체증하였던 지방교부세의 보정단계를 삭감하였음. 이런 맥락에서 1959년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공장제한법(首都圏の規制都市區域에 있어서工場等の制限에 관한 법률)을 2002년에 폐지하였음

○ 아울러 내각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여 대도시권에 공공사업의 우선 배분을 실시함.
당시 지방경제는 경기불황과 공공투자 삭감으로 심각한 침체상황에 빠져있었지만
지역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악폐를 탈각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이라고
여김

□ 이 경향의 최대의 특징은 대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는 것임. 이는 1990년대 중반,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이래 일관된 경향으로서,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기업에게 선택
될 수 있는 국토와 지역을 형성’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입지조건
정비를 위하여 한정된 재정재원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영국 등 서구에서 보는
신자유주의 지역정책의 물결과 일맥상통하는 동향임

○ 그러나 실제 외자계 기업의 일본내 투자는 70%가 동경에 집중하고 그 다음이 카나자와,
오오사카, 효고 등 수도권 근처 일부 대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외자유치가 지방의
고용창출과 연결되지 않고 있음. 岡田知弘(2005)은 글로벌화와 구조개혁의 수익자는
승리측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며, 그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동경권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음

2. 정책전환의 배경: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

□ 경제의 글로벌화와 대도시 지역의 침체

○ 해외이전에 따라 기계 공업의존도가 큰 대도시 지역의 경제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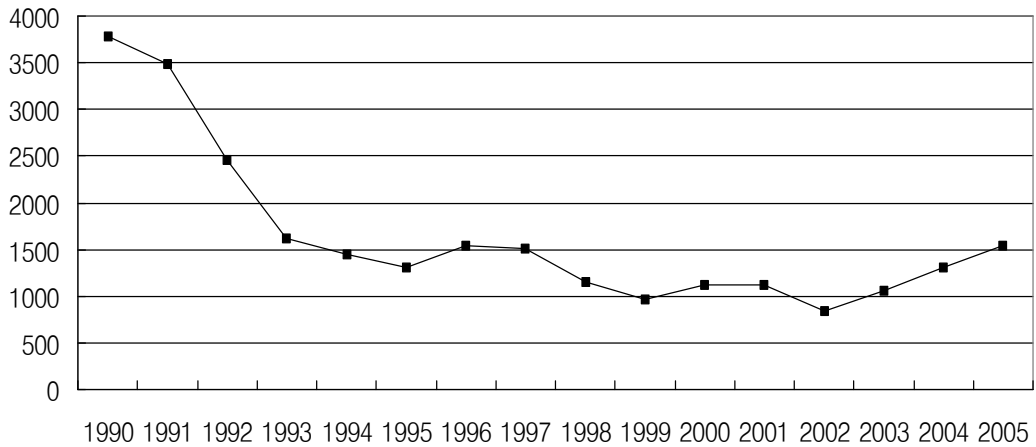
〈표 3-1〉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

(단위: %)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해외진출기업기준	18.0	19.7	21.8	23.8	24.5	23.0	24.2	29.0	29.1	29.8	30.8
국내 전 법인기준	7.9	8.3	10.4	11.0	11.6	11.4	11.8	14.3	14.6	15.5	16.1

자료: 經濟産業省など編(2005), 「ものづくり白書2005年版」, p. 36.

〈그림 3-1〉 공장입지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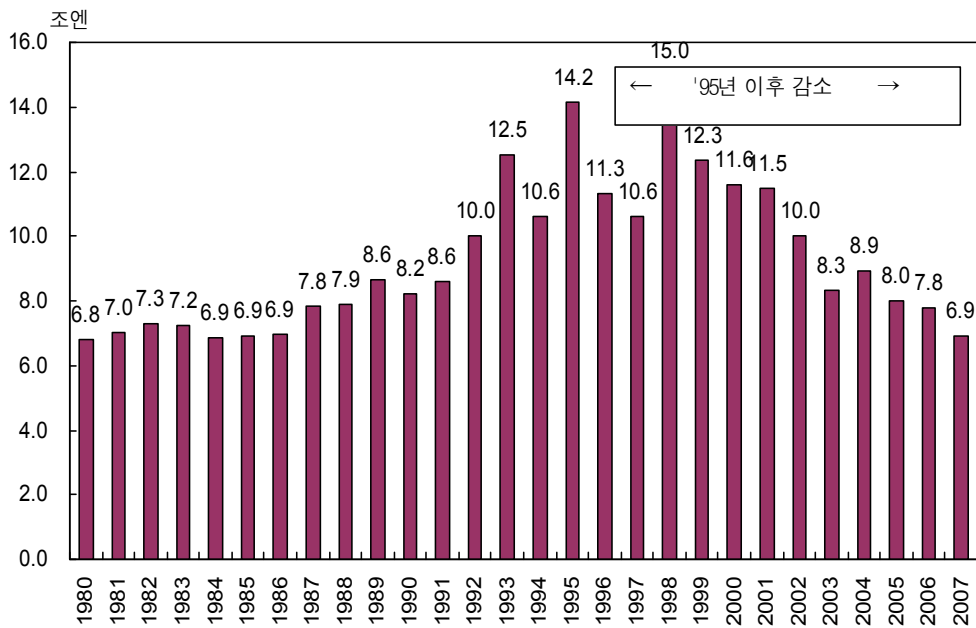
- 기업의 해외이전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제조업 공동화라는 지역산업 재편을 초래하여 고용과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음. 특히 동경, 사이타마, 효고, 카나가와, 나고야 등 기계 공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⁸⁾

8)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특이한 계열 시스템과의 관련성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 아이치 현과 혼다 자동차가 있는 시즈오카 현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작다(OECD, 2005. p. 40).

□ 공공투자 지출에 따른 정부재정의 압박

- 일본 정부는 90년대의 불황을 공공투자 확대로 이겨내려 함
- 그러나 현재 국가와 지방의 장기 채무는 약 750조 엔(GDP의 약 150%)로까지 확대됨 (2005년 현재)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정부건설투자액을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임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개혁(3위일체 재정분권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슬림화를 꾀함

〈그림 3-2〉 공공투자 관련 정부지출의 추이



자료: 재무성 <http://www.mof.go.jp/jouhou/syukei/sy014/sy014s.htm>

〈표 3-2〉 3위 일체 재정 분권개혁의 결과

줄어든 것		늘어난 것	
국고보조금	4.7조엔	지방세	3조엔
교부세	5.1조엔	교부세	0.7조엔
합	9.8조엔	합	3.7조엔
총 감액분	약 5.1조엔		

3. 국토정책 전환의 결과

- ☐ 2001년 이후 고이즈미(小泉)정권하에서 개혁 노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다시 확대됨. 즉 2001년에 고소득 5현과 저소득 5현사이의 소득격차는 1.55배였으나, 그 이후 1.65로 계속 확대됨
- ☐ 아울러 2002년을 피크로 하는 동경권에의 인구 재집중도 나타남⁹⁾
- ☐ 또한 공공사업 삭감과 지방재원 감축의 결과 종래 공공사업이 경제를 지탱해왔던 낙후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지방 분권 개혁, 삼위일체 개혁으로 세원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지만, 자주재원의 부족한 지방의 상대적인 재원난과 이에 따른 투자 부족이 염려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향후 20년 후를 전망할 때 앞으로 지역격차의 수준은 어떻게 될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음

9) 이것은 1987년을 피크로 하는 이른바 버블 경제의 시기의 동경권에의 집중과 달리 교외 현에서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도쿄 23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도심 회귀 현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1987년을 피크로 하는 일차 집중시기에서는 동경 도심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와 같은 주변 현에서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로, 지가의 상승이 도심에서 교외로 파급한 점에서 전형적인 버블 경제의 특징을 보임

- 지방 재정력 결핍 문제 이외에도 지역별로 고령화의 진척 상태가 달라 이것이 향후 격차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농촌지역일수록 고령화의 진척 상태가 높음),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농림 수산물의 경쟁 격화에 의해서 노동 집약형의 산업이나 1차 산업의 비율의 높은 지역이 타격을 입고 있는 점들이 향후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비교적 작았던 지역 격차가 향후 확대일로로 걷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당히 현실성 높은 우려가 제기됨

4. 지방으로부터의 반발

-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에 대해 지방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음. 그 하나가 시정촌 합병을 둘러싼 반발임. 소규모 시정촌에서는 합병이 주민자치를 손상하고 기존에 만개해 온 내생적 지역진흥 운동(마찌 주꾸리 운동)의 싹을 자르게 된다는 것임
- 그 대신에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주장. 이들의 주장은, 일본에서 지방정부가 많은 낭비적인 공공사업을 벌인 것은 소위 토건(土建)국가란 일본정부의 공공개발촉진 정책¹⁰⁾과 자기 책임의식이 없게 만드는 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순히 시정촌 합병이라는 수단의 도입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임.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동시에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한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책임의 역할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板本, 1999 및 重森 1999)

10) 일본 정부에서는 국내 수요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 보증해 줌과 동시에 지방채 이자분은 특별지방교부세로 보전해줬다.

□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에 대응하여, 아래로부터의 지역진흥운동, 즉 소위 내발적 발전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岡田知弘, 2005)

- 시정촌 합병 대신에 시정촌의 수평적 연대로 효율화를 도모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조례 혹은 지역진흥 조례를 제정
- 대형점의 지역진출을 억제하기위해 대형점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
-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판 ‘지역재투자법’의 도입
- 댐, 항만, 공항 등 무용한 정부주도의 공공건설 대신에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적 공공투자 확대 주장
- 주민본위의 도시, 지역 이용계획 수립
-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IV. 논점과 시사점

1. 논점 : 로컬 옵티멈과 내셔널미니멈 및 분권의 방향

- 이상과 같은 최근 일본정부의 국토정책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토계획의 과제가 소득격차의 시정에서 광범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로 전환하였고, 또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입지 경쟁력의 확보도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주·자립에 의한 지역의 개성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비판하는 측에서는 ‘지역이 자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금의 지역 자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체의 공동체인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혹한 자립론’(保母武彦, 2001)이며, 결국 지역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물론 공공투자 의존형 지역개발의 병폐를 극복하고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과 지방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이나 대응 처방은 각기 다름
- 향후 일본의 국토개발정책은 글로벌 시대 진전과 재정제약이라는 여건 변화 가운데 어떻게 지역 자립과 개성을 발휘해 가면서도 적절한 국민 최저한(national minimum)을 확보해 갈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임¹¹⁾

□ 내셔널 맥시멈 혹은 내셔널 스탠더드에서 로컬 옵티멈 + 내셔널미니멈으로

- 종전에 균형발전을 이유로 중앙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내셔널 맥시멈을 추구

⇒ 토건국가, 공적투자확대,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 지시, 지방의 보조금 의존체질

- 향후 로컬 옵티멈으로 가되, 적절한 내셔널미니멈은 수평적 지방조정제도로 보완 (복구 모델)

* 단순히 토건국가 비판이나 공공투자 삭감 비판은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로컬 옵티멈)으로 회귀하는 핑계를 줄 수 있음

□ 협조적 분권을 통한 로컬 옵티멈 + 내셔널미니멈 달성 방향

- 경쟁적 분권: 영 미 경우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명확. 중앙은 소득분배나 경제안정, 그리고 전국적 공공재의 공급, 지방은 지방적 공공재의 공급(자원배분) 역할/응의 과세/따라서 보조금 재정격차시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인정하지 않음

- 협조적 분권(복구의 모델): 중앙과 지방의 역할 중첩, 지방도 소득분배나 경제안정에 기여, 중앙이 세원을 집중, 당연히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단 응의과세 아니므로 보조금 의존 성향 강화 문제 초래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셔널 미니멈은 교부세(일반 보조금으로), 국가 위임사무 (법적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고분담금,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여 세원의 이양

11) 그 대안으로 지방의 입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위주의 공공지출은 삭감하더라도 복지나 생활을 중심으로 복지적 공공투자는 확대해야 하며, 지방재정 규모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에 자주세원의 확대(세원의 이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한다(岡田知弘, 2005, 持田信樹, 2004, 神野眞彦編, 2004).

* 내셔널 미니멈의 달성은 교부금으로(지원을 하나, 지방의 재량권 강화- 특히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도입) 그 이상의 개성있는 서비스의 제공은 자체 세원으로(로컬 옵티멈)(持田, p. 288)

〈표 4-1〉 지방 재정 모델의 비교

구분	(1)재정연방주의(경쟁적 분권 모델 separationist model)	(2) 통합 모델 integrationist model		(3) 집권 모델 centralized model
		협조적 분권 cooperative model	행정적 분권 administrative-model	
시스템 이념	경쟁·차별화	국가통합·다양성의 밸런스, 설명 책임	획일·평등	개발·통합
세원 배분	세원 분리 지방은 응익과세	조정적 중복 과세 높은 자주재원 비율	세수 분할의 우위 낮은 자주재원 비율	세제의 집권화
세율 결정권	세율은 지방에 따라 다름	지방에 의한 세율 결정 세율 격차는 완만	제한세율의 범위내. 실제는 획일적	제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중앙·지방의 사무는 명확하게 분리. 공공재의 공급. 법률에 정해 있지 않는 사무는 불가	중앙·지방의 사무는 중복. 중앙은 포괄보조금을 지방에 교부. 입법 통제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 소득재분배 서비스의 공급	중앙·지방의 사무는 중복. 중앙은 보조금을 통해서 행정 통제를 지방에 가함. 소득재분배 서비스의 공급	중앙정부의 일선행 선기관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소규모 지자체가 많음
지방채	시장규율에의 의존적자 파산 지방 정부에 대한 무구재정책 파산 물의 정비	률에 의한 규제	행정적 허가제 정부에 의한 원리 보증	지방 차입 금지
정부간 이전	보조금은 누출효과에 대응에 한정 지방 재정 조정의 결여	낮은 의존재원 비율. 포괄 보조금의 우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재정 조정 제도	높은 의존재원 비율 특정 보조금의 우위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재정 조정 제도	교섭에 의한 보조금 배분
중앙에 있어서 지방 이해의 반영	없음	중앙정부와 지방의 대표가 자발적으로 교섭	자치성, 연방참의원이 중앙에 지방의 이해를 대표	국회 의원
해당국	영국(1980년대), 미국 대도시권, 전통적 재정연방주의	캐나다, 북유럽 제국, 유럽 지방자치 현장, 샤프 권고	일본, 독일(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구 동유럽제국, 아시아 개발도상국
문제점	재분배의 저하, 지역격차 발생	매크로적 경제정책과의 정합화	설명 책임의 결여 방만한 예산 운영 (책임성 결여)	지방 보스의 지배 불투명·부패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첫째, 그동안의 일본의 경험으로 볼때 지방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공업재배치만으로 인구유출과 과소과밀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일본의 동경집중은 산업구성의 격차, 취업기회의 격차가 중요한 요인이었음. 전후 일본의 국토개념에는 중앙을 두뇌, 지방을 손발이라고 하는 ‘국토의 유기적 분업론’이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음(伊藤敏安, 2003)

○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의 목표를 소득격차 해소를 넘어 인구의 분산까지 겨냥한다면 ‘국토의 유기적 분업론’에서 벗어나 ‘지역간 산업구조의 균등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까지 관심을 뒤야 할 것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울 집중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토계획과 지역개발정책을 수립시 이 점에 보다 염두를 뒤야 할 것임

□ 둘째, 균형정책의 방기와 지역의 자립과 개성있는 발전의 추구는 지역격차를 심화시킴.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고이즈미 지방 행·재정 개혁의 결과로 2001년부터 지역격차가 재차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지역격차가 더 크고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정비 수준도 낮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정책이 필요함

○ 일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공공투자의 삭감 등 지역간 경쟁에 의한 자립화가 신 지역정책으로 수용된 배경에는, 가) 70, 80년대 일관된 수도권 규제정책과 소위 지방의 시대라는 대규모 투자 및 공장이전, 나)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립 기반 확충, 다) 90년대 해외생산의 전개에 따른 전반적 국내 공장입지의 저조(특히 대도시권 공동화), 라)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 도입에 따른 수도권의 자발적 입지역제 등이 배경이었음

○ 이런 제반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정책 모방은 부작용과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국민 최저한(national minimum)의 보장이 필요함. 그러나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 일본의 경우 각 중앙부서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수준보다도 높은, 내셔널 미디엄 혹은 내셔널맥시멈이라고 해야 할 목표를 내세워 행정비대화와 권한확대를 꾀해 왔음. 이것이 전후 일본의 비효율적 공공투자 확대, 정경유착에 의한 토건국가 논란을 초래한 요인이 되어 왔음

○ 아울러 내셔널미니멈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개입 구실로 이용되어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방 자립을 훼손해 왔음

○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재계에서는 내셔널미니멈을 포기하고 미국식의 로컬옵티멈(local optimum)¹²⁾로 가야할 것을 주장하나 학계에서는 내셔널미니멈을 보장하면서도 로컬옵티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 3의 길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음(持田信樹, 2004, 神野直彦編, 2006등)¹³⁾

12) 로컬 옵티멈이란 개념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중간보고 「분권형 사회의 창조」(1996년 3월)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로컬 옵티멈이란 지역별 실정에 따른 바람직한 상태 혹은 지역별 최적이라고 정의되며, 공공서비스의 한계수익과 부담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의 공급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컬 옵티멈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이 그 수준을 자주적·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소위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의 핵심 내용이다.

13) 일본 지방재정학계에서는 제 3의 길로 복구식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은 옹익과세 원리에 충실하여 재정격차 시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나, 복구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원부족을 보전해 주되, 일반 재원화하여 중앙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持田信樹, 2004).

- 구체적으로는 내셔널미니멈을 말 그대로 국민 최저한의 수준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이 책임지고 개성있는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삭감하고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며,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으로 일반재원화하고,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보다는 지역간의 자율에 의한 수평적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로컬 옵티멈과 내셔널미니멈의 관계 설정 및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향후 지역문제가 핵심적 논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일본은 2006년 '신경제성장전략' 이후 내수의 안정적 확보란 관점에서 지역산업진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까지 복지와 형평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내수안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재발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2006년 '신경제성장전략' 이후 지역활성화를 일본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각시키고, 중소·영세기업 및 지방 서비스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물론 '신경제성장전략'도 글로벌 경쟁하에서 지역간 경쟁과 자립발전을 중시하는 기존의 기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나 신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재발견하고 지방중소·영세기업, 서비스업의 발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둔 점은 새로운 정책의 전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글로벌화와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통한 내수의 안정적인 성장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이와 같이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 체제 구축에 의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일본 경제의 핵심 축의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성장전략에 있어 지역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즉, 도태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지방의 ‘보통의 중소 영세기업’의 역할과 가치 재인식 등은 우리나라 지역경제 혁신 과정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임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박 경(2007), 「일본의 지역정책」, 박경 외, 『주요국의 지역정책 - EU·영국·프랑스·일본』, 한국산업기술재단.

<외국문헌>

岡田知弘(2005), 『地域経済學入門-地域内再投資力論』, 自治體研究社.

岡田知弘外 編(2005), 『國際化時代の地域経済學』, 有斐閣アルマ.

經濟産業省(2005), 「工場立地動向調査(2005)」.

經濟産業省など編(2005), 「ものづくり白書2005年版」.

經濟産業省(2006), 『年次報告書』.

經濟産業省(2006.6), 「新經濟成長戰略」.

經濟産業省(2006.7), 「經濟成長戰略大綱」.

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 地域經濟産業グループ(2006.4), 「産業クラスター 第Ⅱ期中期計畫」, 日本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


經濟財政諮問會議(2001.6), 「今後の經濟財政運營および經濟社會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指針」.

國土廳 監修(2000), 『平成12年度 國土統計要覽』, 大成出版社, 2000.

今井康夫(2005), 「産業政策として産業クラスター 計劃」, 二神恭一, 西川太一郎 編著, 『産業クラスターと地域經濟』, 八千代出版社,

鈴木茂(2003), 「地域産業を支える公共部分の役割」, 神野直彦編, 『自立した地域經濟つ

- のデザインー 生産と生活の公共空間』, 有斐閣.
- 保母武彦(2001), 『公共事業をどう変えるか』, 岩波書店.
- 浜松信用金庫, 信金中央金庫総合研究所(2004), 『産業クラスターと地域活性化』, 同友館.
- 山崎朗(1994), ‘地域間格差の三形態と国土政策におけるインフレーション’, 『経済学研究』, 九州大学経済学会, 59巻第 5・6号 合併号.
- 山崎朗(2004), ‘變容する日本型産業集積’, 橘川武郎, 聯合総合生活開発研究所 編, 『地域からの経済再生』, 有斐閣.
- 産業構造審議會地域経済産業分科會(2007.1), 「地域活性化総合プランの實行に向けて」, 経済産業省
- 上原啓一(2007.4), 「地域経済活性化に向けてー中小企業地域資源活用促進法案及び地域産業活性化法案」, 『立法と調査』, No.266.
- 石井良一(2007), ‘バブリックマネジメント’, Review(2007 November), vol. 52, NIIR
- 神野直彦(2002), 『地域再生の経済学』中央公論新社
- 神野直彦編(2006), 『三位一體改革と地方税財政』, 學陽書房.
- 神野眞彦編(2004), 『自立した地域経済のデザイン』, 有斐閣.
- 伊藤敏安(2003), ‘地方によって国土の 均衡ある發展と何であったか?’ 『地域経済研究』, 第14号(2003年3月), 廣島大学地域経済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
- 中村剛治郎(2004), 『地域政治経済学』, 有斐閣.
- 地域再生本部(2007.2), 「地域再生総合プログラム」, 内閣府地域再生本部.
- 持田信樹(2004), 『地方分権の財政学』, 東京大学出版會.
- 川島哲郎(1978), ‘地域間の平等と均衡について’, 『経済学雑誌』第79巻 第1号(1978年9月).
- OECD(2005), Territorial Reviews : Japan, OECD.



제 3차 연구회

1. 참여정부 지역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 영 주

2.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박 창 귀

참여정부 지역혁신거버넌스체계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 영 주

(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I. 시작하며	199
II.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배경과 운영성과	201
1. 혁신협의회 설치배경	201
2. 혁신협의회 운영현황	204
III. 혁신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207
1. 혁신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207
2. 혁신협의회의 운영성과	218
IV. 지역혁신협의회의 개선과제	222
V. 맺으며	225

표 목 차

<표 2-1>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206
---------------------------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령구성.....	208
<그림 3-2> 직업.....	208
<그림 3-3> 지역별 구성.....	209
<그림 3-4> 협의회 내 역할.....	210
<그림 3-5> 참여기간.....	210
<그림 3-6>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주요 기능.....	211
<그림 3-7>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속여부.....	212
<그림 3-8> 시도혁신협의회 활동 활성화.....	212
<그림 3-9> 활성화 저해 요인.....	213
<그림 3-10> 심의의견의 반영 정도.....	214
<그림 3-11> 기능보완 및 추가 변경 필요성.....	214
<그림 3-12> 보완필요 기능.....	215
<그림 3-13> 인적구성상의 문제점.....	216
<그림 3-14> 적정 인원수.....	216
<그림 3-15> 적정 공간 범위.....	217
<그림 3-16> 협력관계형성 방안.....	217

I. 시작하며

참여정부 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테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 21세기 거시적 여건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정책과 학문차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신 지역정책(new regional policy)로 불리우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이 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특정 지역의 과밀과 지역격차와 같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초래된 공간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문정책에 불과했다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활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범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이 변했다. 그동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균등화하고, 지역적으로는 상대적 낙후지역의 총량적 성장과 양적 생산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었으나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치중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하여 자원을 변형지역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재분배하여 균등한 성장을 도모하는 하향적이고 외부의존적인 발전전략 대신에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은 것이다. 지역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장과 확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에 의하여 자립적(self-reliant)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추진방식의 변화이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정책이 추진됐으나 신 지역정책은 지역단위에서 선도와 창의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3가지 변화와 함께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혁신발전전략과 지역혁신협의회이다. 지역혁신발전전략에서는 산-학-관의 연계와 협력을 최중요 과제로 보았으며, 그 핵심역할을 담당할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각 지역별로 혁신협의회를 조성하였다.

2008년 실용정부의 출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변화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보완점과 변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혁신협의회의 성과와 경험이 향후의 지역혁신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활동과 성과를 혁신추진의 정책목적에 맞추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배경과 현황,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고, 지역혁신협의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배경과 운영성과

1. 혁신협회의 설치배경

지역혁신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혁신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지역혁신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혁신(innovation)이란 과학적 발명이나 R&D와는 달리 새로운 발명과 발명이후 적용 과정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편익과 효과를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동을 의미한다. 즉 혁신이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과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사회적 편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산업경쟁력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는 혁신을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하는 의도적 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혁신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의미하는 과학적 발명이나 실험실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개발(R&D)과는 차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혁신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을 정의하면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이란 지역 내 경제주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과 제도, 문화를 만드는 집단적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은 개별 경제주체의 혁신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력을 높이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관련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관행 및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혁신의 단위가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에서 지역으로 확대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암묵적 지식전달에 있어서의 대면접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지식정보는 많은 암묵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하면 신속한 정보의 교환을 이룰 수는 있지만, 보다 깊은 정보의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즉 정보의 Richness와 Reach의 Trade-off 관계가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기술혁신과제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기업과 연구진을 적기에 매칭시키는 일은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 쉽지 않다. 따라서 집적의 효과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혁신에서 조직외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혁신은 전통적으로 발명자나 개별 기업의 특성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해당분야의 관련연구,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전문가 상호간 교류를 통한 학습 등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혁신의 촉진수단으로 조직외적 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는 세계화시대의 개방경제체제 속에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혁신은 기업 또는 개별조직 단위로 전개됐다. 그러나 개인적 기업과 조직단위의 혁신 노력만을 가지고 개방적인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면서 다른 조직과 기관은 물론 심지어는 동종 경쟁기업과의 협력조차도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이다. 기술혁신의 싸이클이 짧아져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의 위험이 증대하면서 기업내부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보다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과 제휴를 통한 혁신활동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중시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성장 속도 및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네트워크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이한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다른 기업 또는 조직과의 교류·협력이 핵심과제가 됐다. 끝으로 경제의 세계화와 지구적 통합 현상으로 국가경제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성장을 좌우할 정도로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지역단위로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전략은 성장거점이론을 토대로 특정산업과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집적과 혼잡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성장이 지체되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방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핵심과제로 채택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지역발전의 우선순위를 지역의 내부적 발전역량을 키우는 데 두는 내생적이고 상향적인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역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총량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다. 대표적인 전략이 수도권지역의 자원이나 기업을 지역에 이전하여 단기간 내에 지역 산업생산과 도시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개방적인 무한 경쟁의 세계화시대에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효과가 지역주민의 복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으므로, 참여정부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키워 자생적으로 지역이 발전토록 하기위해 지역별로 지역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2004년부터 전국의 시·도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과 대학중심의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지역혁신발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리고 각 시·도에는 사무국을 갖춘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군 단위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 혁신협의회의 운영현황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 기업, 지자체, 지역시민사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학습과 혁신창출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혁신인자들을 연결해 주는 혁신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은 혁신체계구축의 선결과제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각 지역별로 혁신거버넌스체제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정부는 혁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4조(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와, 동법시행령 제32조에(시도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혁신협의회의 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지역내 혁신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신인자들 간의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주요 역할로 설정하였다.

(1) 조정자로서의 역할(Coordinator)

- 지역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혁신인자들간의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의 장해요인을 제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2) 심의자로서의 역할(Deliberation)

-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RIS의 형성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 운용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발전 시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조정·지원·연구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촉진자로서의 역할(Facilit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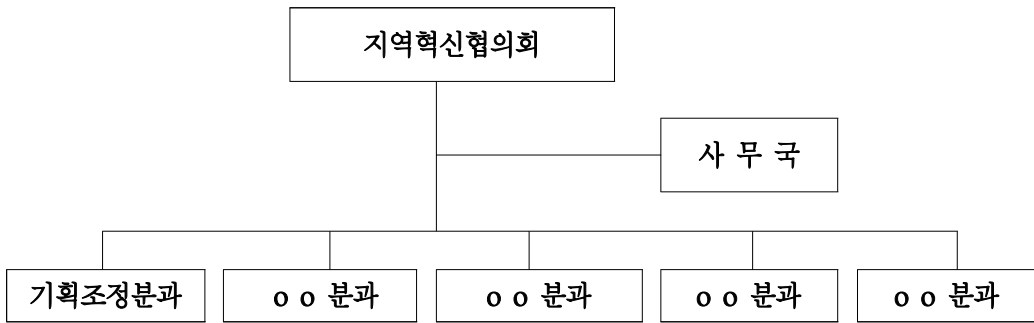
- 협의회를 통한 지역혁신 주체간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

(4) 중앙과 지방의 다리로서의 역할(Bridge)

(5) 혁신확산의 역할(Innovator)

- 지역사회의 혁신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각계각층의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체협의회와 분과협의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분과협의회에는 기획조정을 위한 분과와 각 지역별 전략 산업을 테마로 구성된 분과로 구성되어 총 60명 내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사무국은 각 지역 혁신협의회의 운영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보다는 지역발전연구원이나 전략산업기획단, 지역NGO 단체 등에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정부예산 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 일부로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전반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2-1〉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Ⅲ. 혁신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1. 혁신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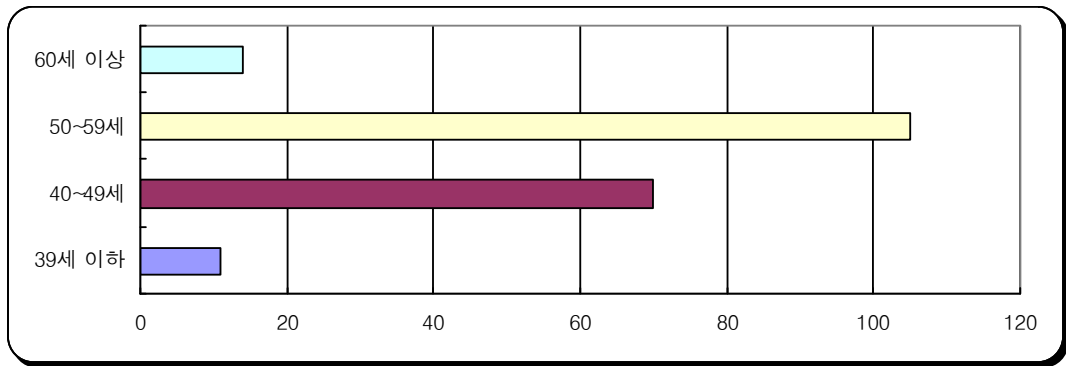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시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를 구분하여 2008년 5월 19일~ 5월 22일의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시도협의회관련자는 200부가 회수되어 분석되었다.

1) 응답자의 특성

시도혁신협회의 설문응답자의 연령은 4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공공기관/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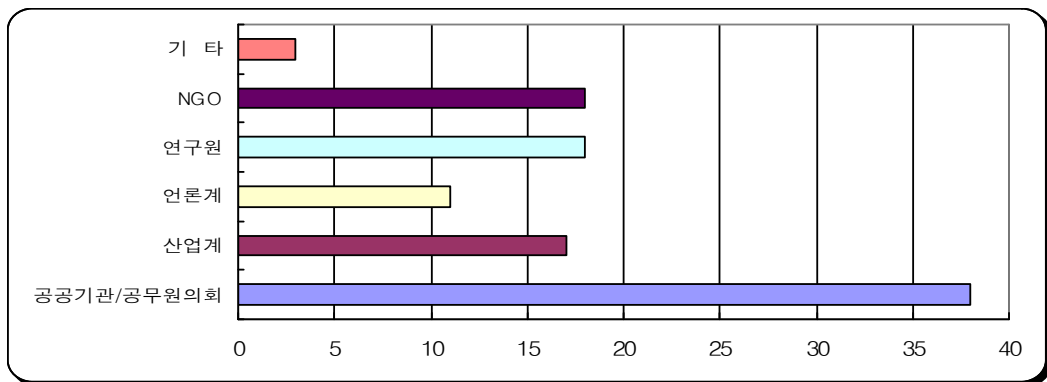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구성

(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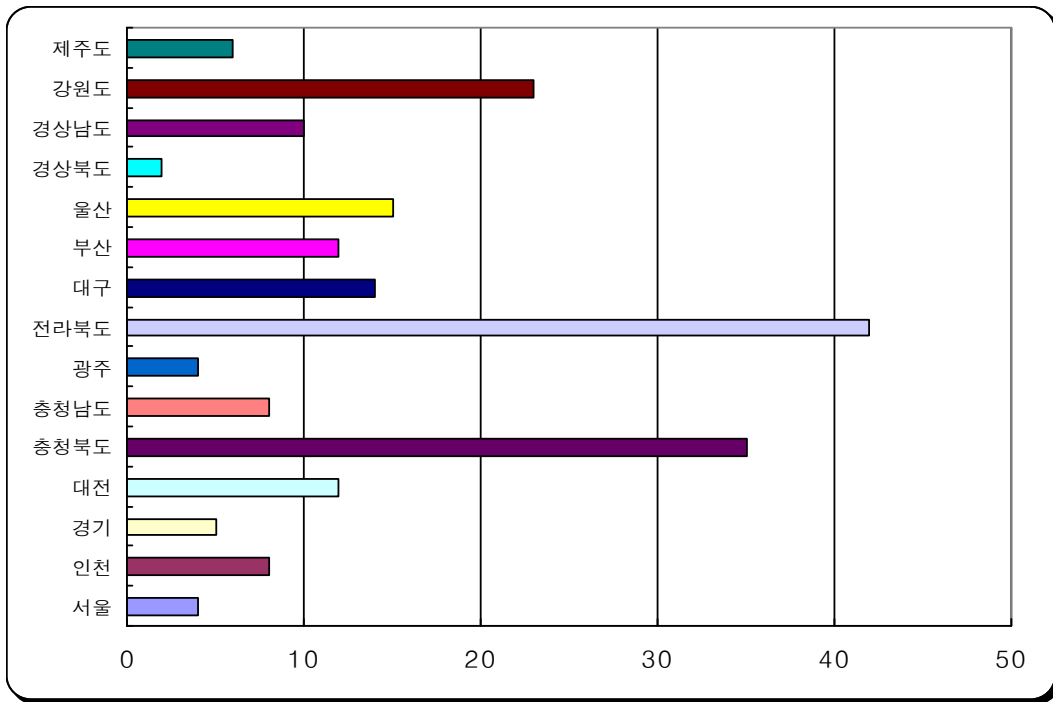
〈그림 3-2〉 직업

(단위 : %)



〈그림 3-3〉 지역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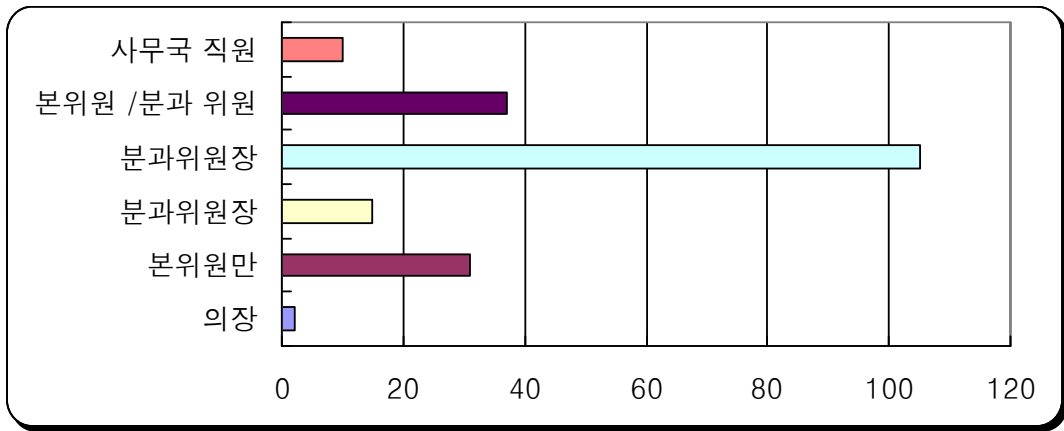
(단위 : 인)



- 협의회내 참여역할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이 많았고, 참여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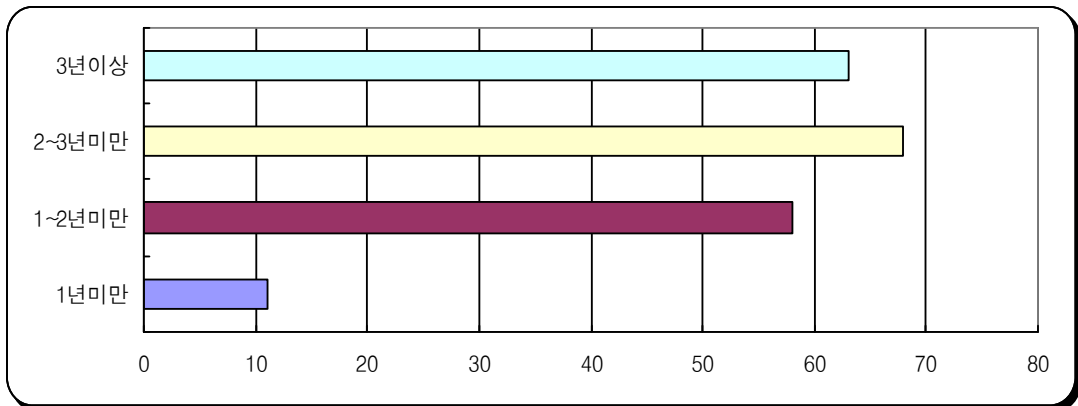
〈그림 3-4〉 협의회 내 역할

(단위 : 인)



〈그림 3-5〉 참여기간

(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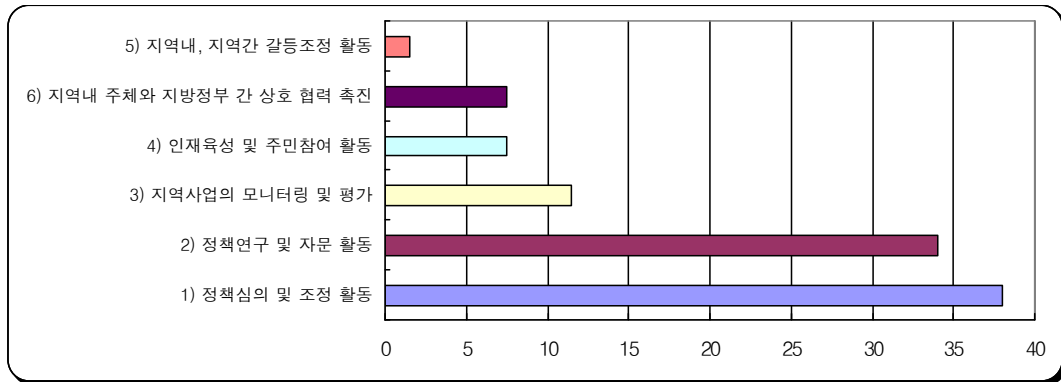
□ 지역혁신협의회 의 주요 기능

- 지역혁신협의회 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혁신협의회 관련자들은 지역혁신발전시책의 정책심의 및 조정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38%로 많았으며, 정책연구 및 자문활동이라는 응답도 34%를 차지하였다. 단, 학계(95인)와 공공기관 등(38인)은 정책연구 및 자문활동

(40.0%, 31.6%)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데 반해, 산업계와 언론계, 연구원, NGO 등은 정책심의 및 조정활동(41.2%, 36.4%, 66.7%)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6〉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주요 기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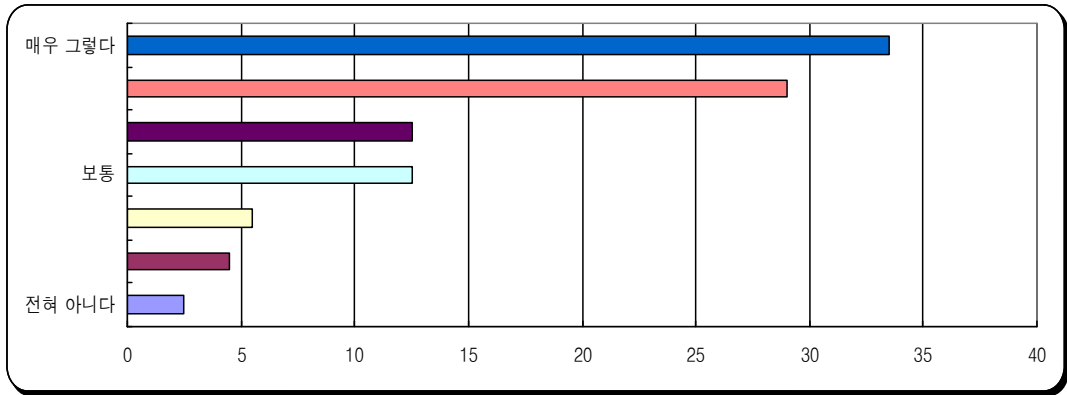


2) 혁신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속 여부

- ‘지역혁신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지역혁신협의회 존속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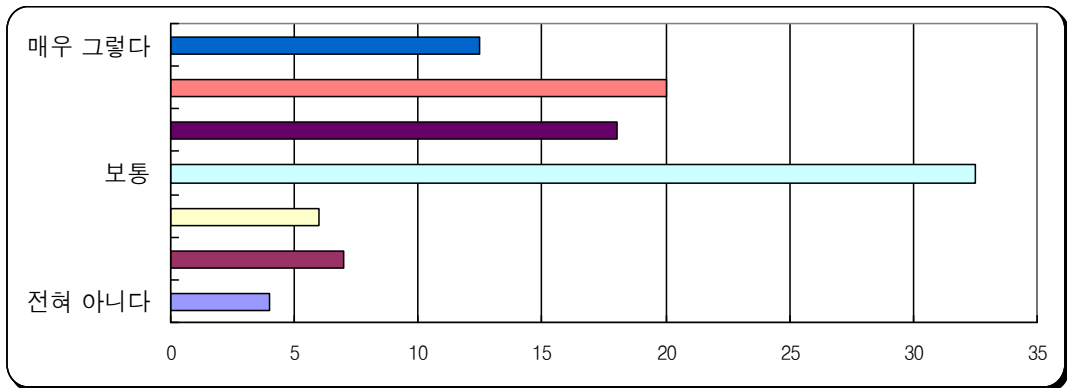


□ 협의회 활동 활성화 정도

- 시도지역혁신협의회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시도혁신협의회 활동 활성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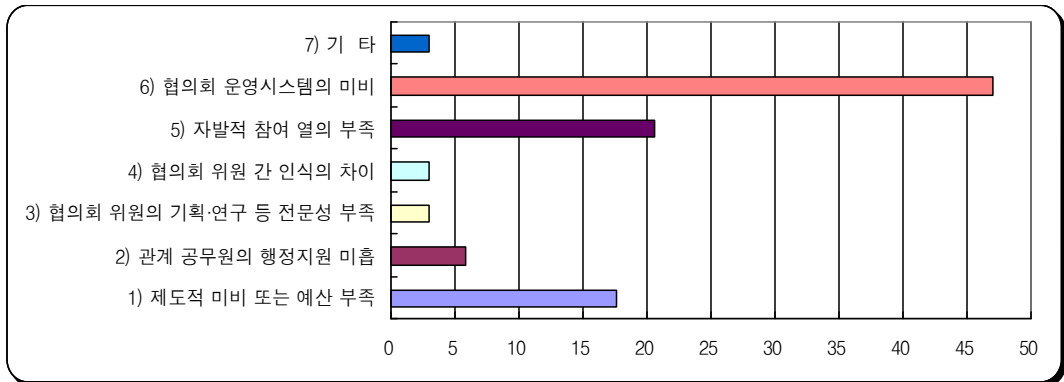
- 활성화 정도에 대해 학계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산업계나, 공공기관/공무원 보다 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 활성화 저해 요인

-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운영시스템의 미비가 가장 높은 지적(47.1%)을 받았으며, 다음은 자발적 참여 열의 부족(20.6%)이었다.

〈그림 3-9〉 활성화 저해 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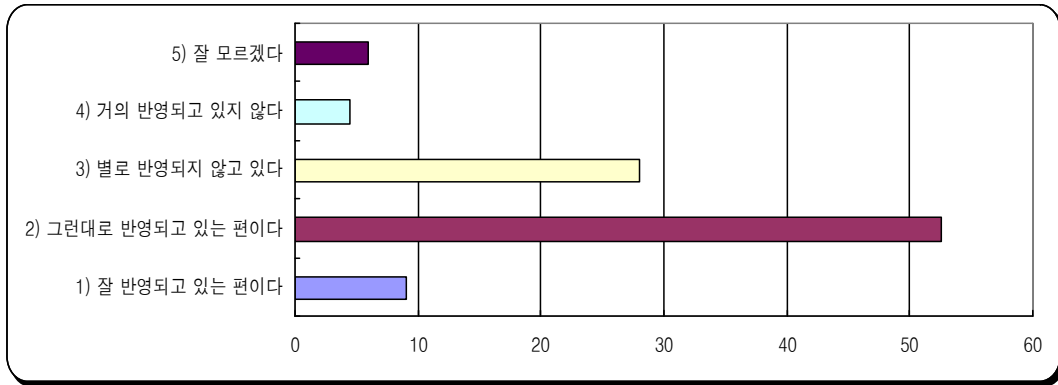


□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정도

-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의견의 정책반영정도와 관련하여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5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심의의견의 반영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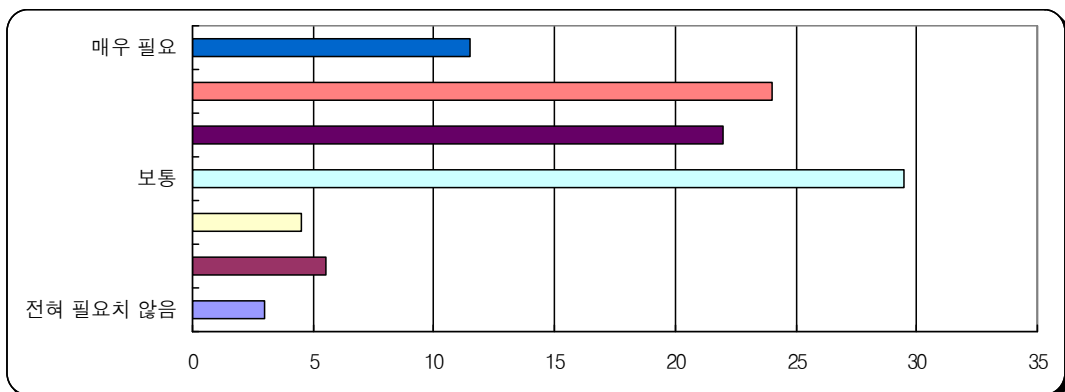
3) 시도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현행기능 보완 및 추가 변경 필요성

- 현행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보완 추가 변경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 기능보완 및 추가 변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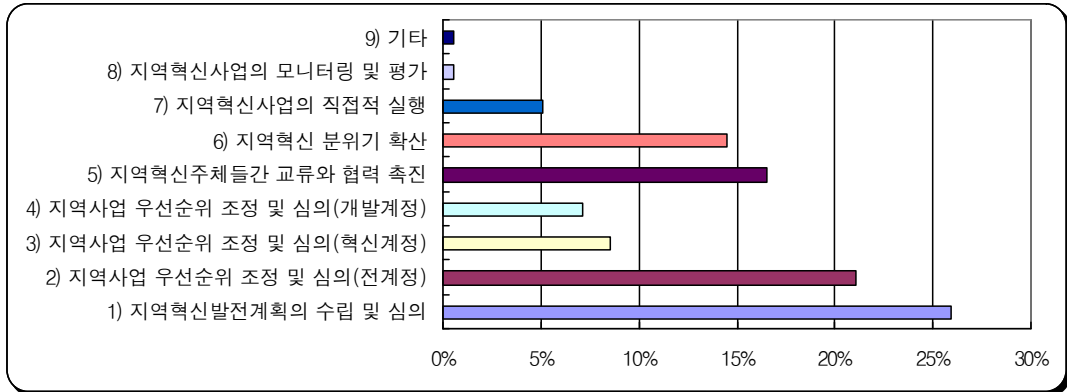
(단위 : %)



□ 보완필요기능(중복응답)

- 향후 보완이나 변경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심의와 지역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심의가 높은 부분을 차지함

〈그림 3-12〉 보완필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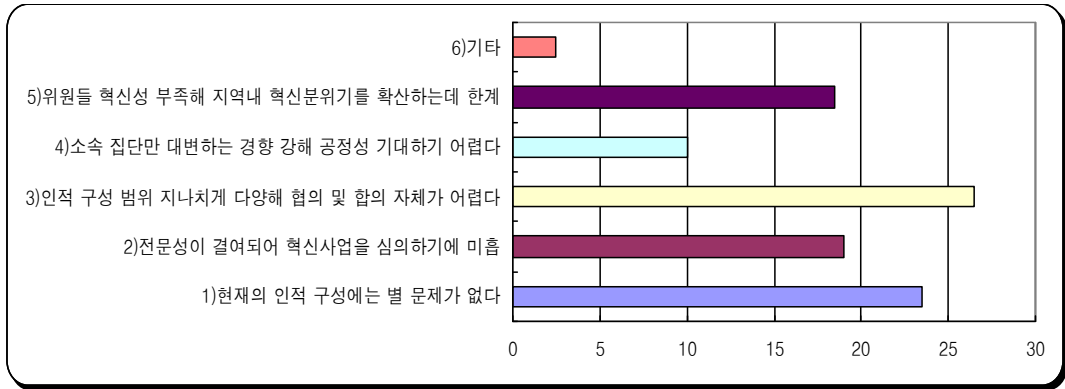


□ 인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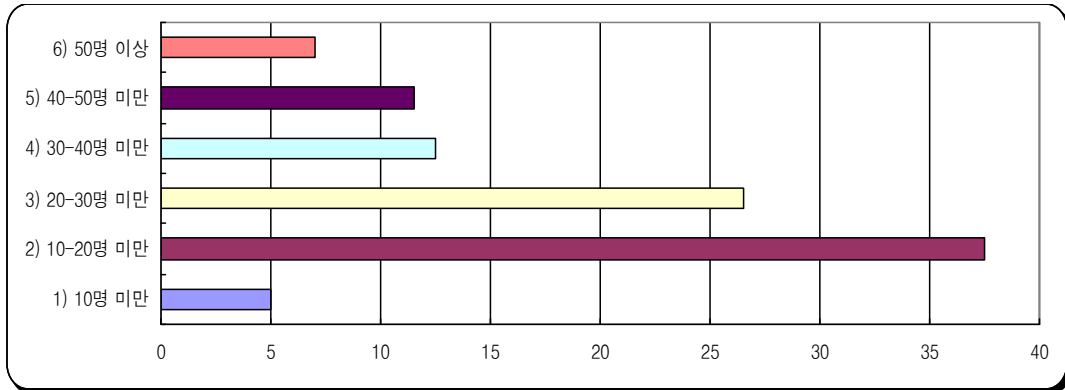
- 현재의 인적구성에 대해 인적구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다양해 협의 및 합의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 26.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적구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23.5%로 나타났다. 인적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학계와 연구원 등은 전문성의 결여와 별 문제가 없다는 항목이 높게 지적되는데 반하여, 산업계는 위원들의 혁신성이 부족한 점이 높게 지적되었다.

- 적정인원규모에 대해서는 10~30명이 64%를 차지하였고, 50명 이상이라는 답변은 7%로 나타나 60명 규모인 현재의 협의회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림 3-13〉 인적구성상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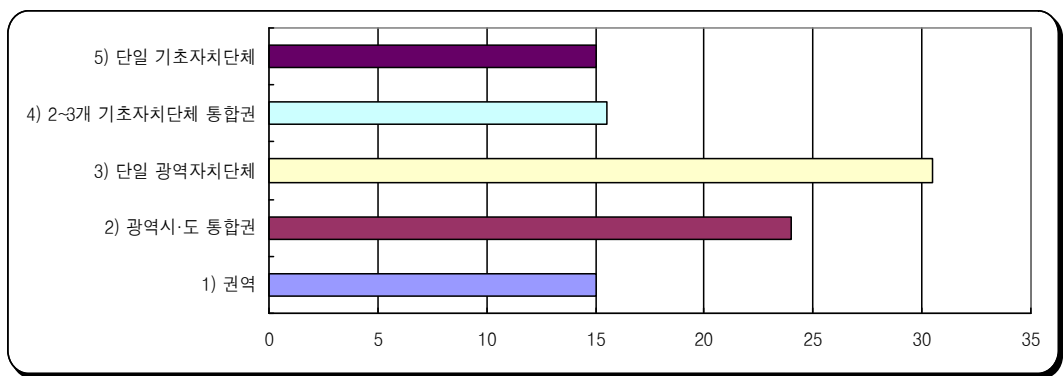
〈그림 3-14〉 적정 인원수



□ 적정 공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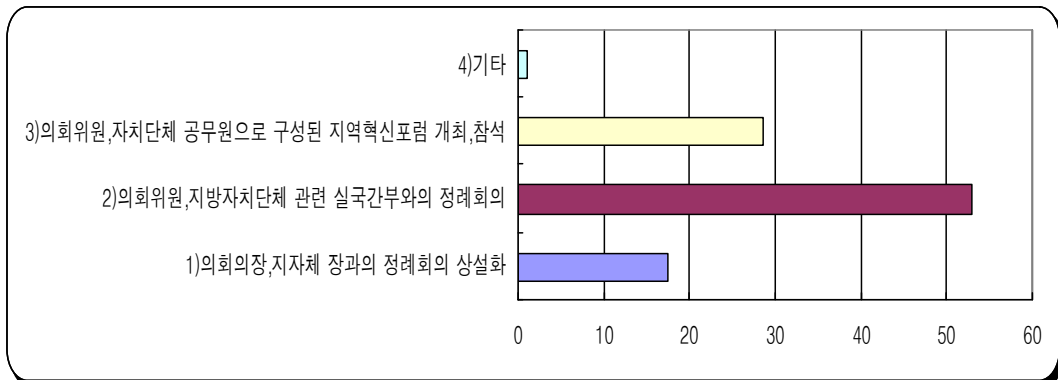
- 혁신협의회 설치를 위한 적정 공간 범위로는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역 시도 통합권이라는 응답도 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계가 2~3개 기초자치단체 통합권을 가장 높게 주장한데 반하여 공공기관/공무원, 산업계는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적정 공간 범위



- 지역혁신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실국과의 정례회의(53%)가 제시되었다.

〈그림 3-16〉 협력관계형성 방안



2. 혁신협의회 운영성과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발전 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과제 선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등 지역단위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는 중재자역할을 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발전계획의 추진에 따른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산업의 발전 등 산업측면에서 산학관의 연계를 촉진하였으며, 지역혁신사업의 심의/조정과 각 년도 NURI사업, RIS사업 등의 선정 및 추진상황 평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시행계획의 심의 등을 시행하였고, 분과별 포럼과 연구팀사업, 세미나 포럼을 실시하여 지역혁신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역내 혁신도시의 선정 등 지역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혁신 마인드의 확산과 자발적 지역혁신 노력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과 생산방식은 물론 생각하는 방식, 업무처리방식 등을 가지고는 도저히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지역 곳곳에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 확산되어 합의기반을 갖게 됐다. 혁신주도층들의 인식변화와 의지가 확립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 곳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산, 경제활동 분야에서 자발적인 혁신활동과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혁신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단위로 확대되고 있고, 제조업과 생산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농축어업분야로, 관광과 여가 활동분야로 그리고 행정과 경영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혁신협의회는 주요 운영성과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학관 연계의 촉진, 행정혁신의 유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사회적 자본의 촉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산학연계 강화

지역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자치단체, NGO 등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학습과

혁신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 산업과 계열화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내의 산학연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자족적 혁신을 일으켜 내는 데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이러한 산업과 대학,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기술혁신을 보다 활성화 시키며, 장애가 되는 제도를 혁신시켜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 혁신협의회에는 산업계와 대학,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의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어, 각 혁신주체의 지식과 정보가 순시 소통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졌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전제조건인 고급 두뇌집단이 풍부하게 참여하여 산업계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행정혁신의 유도

새로운 기술혁신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행정절차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하던 기술혁신에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으로 기술혁신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규제에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은 이러한 기술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또한 기업은 장애를 행정기관에 명확히 밝히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 및 지방의 노력으로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아직도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는 규제에 대한 많은 사례조사와 개선이 톱다운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정말로 바라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이유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이 원하는 행정 혁신이 밝혀지고, 이의 정당성이 혁신협의회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되어, 신속히 행정기관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역 경쟁력, 생산성, 부가가치 증진 등 지역발전의 성과차원의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지역혁신시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인 재정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사업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혁신시책을 지역경제 진흥차원에서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혁신시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책과 사업마다 지역발전차원의 성과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개선과 자원의 중복, 낭비를 최소화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역혁신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의 프로그램은 거의 중앙정부 부처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역은 지원대상의 선정 등 일부분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종합적으로 지역발전성과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혁신협회의 평가를 토대로 중복적인 사업을 찾아내고 지역단위에서 연계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보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혁신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전세계적으로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핵심은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있고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소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즉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는 거래비용 감소와 시설의 공동활용이란, 정태적 효율성과 더불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윤리적 자산과 시민의 참여,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의미하며 공통의 신뢰와 암묵적 규범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 재생산 된다. 클러스터이론에서 보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농밀한 정보의 유통, 기회행동에 대한 처벌, 협력적 행위에 대한 혜택 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콜만(Coleman, 1998)은 자본을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한 후 도구·기계·생산설비 등을 물리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자본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뢰의 네트워크와 암묵적 규범, 폐쇄적인 커뮤니티 정보의 교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노하우, 장소지식, 특화 생산양식, 혁신, 프런티어 정신 등의 암묵적 정보가 개방적 네트워크와 집합적 학습능력에 의해 축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지자체와 대학, 시민, 산업간 상호 합리적인 신뢰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물리적 투자와 자본투자와 더불어 혁신체제 내에서의 원활한 지식흐름 즉 지식공유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를 통해 지식이 교환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역 내의 공급업자, 구매자, 교육기관, 관련 및 지원산업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형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혁신주체간 미팅,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대면접촉을 증가시키고, 신뢰를 확산시키며,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V. 지역혁신협의회의 개선과제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방식과 조직, 전략에 있어서 개선책을 찾아 지역혁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간의 경제주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혁신협의회의 활동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이태리 토스카나주의 피렌체, 소피아양티폴리스의 예에서와 같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역 내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 및 일부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선도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활동이 민간의 다양한 경제주체와는 격리된 채 추진되기 쉽다. 앞으로 협의회의 지역혁신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민간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지금보다는 더 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유사한 분야별 경제주체들이 함께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혁신방안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경제주체간 네트워크가 혁신협의회에 연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혁신협의회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구심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내 기업 및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이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을 첨단 기술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 내 기존 기업, 농축어업활동의 현안문제를 타파하는 데 치중하여 혁신의 성과가 실질 경제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경험적 사례를 되도록 많이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작고 실현가능한 혁신 경험과 성공의 축적 없이 혁신의지와 활동을 확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혁신협의회를 거쳐 논리를 얻고, 행정을 혁신시키고, 지역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당위론적으로 지역 자율에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경제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연계, 협력, 제휴의 네트워크를 맺지는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학연계 또한 활성화 되지 않는다. 지역혁신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혁신주체간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지역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비저너리와 그와 동조하는 2nd Influencer가 존재하며 이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개별경제주체의 요구와 장점을 이어주고, 산-학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지역 내 뿌리내림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혁신협의회 활동은 항상 다양한 민간의 경제주체와의 연계와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첫 번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협의회 조직을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란 그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되면 정보가 전달되게 되기 때문에 기업체간의 네트워크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Influencer의 참여만 이루어지면 되며, 그동안의 혁신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지역내에 이미 파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리더를 중심으로 혁신협의회 조직을 보다 슬림하게 재조정 하고, 혁신협의회 분과별 활동도 전략산업별로 구성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정목적해결을 위한 분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규모는 20~30명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지역범위는 광역자치단체 혹은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범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활동 내에서는 지역범위가 많은 영향을 미치나 실용정부에서 추진 중인 5+2의 광역경제 권내에서의 추진은 권역내 동질성이 이미 존재하므로 구성상에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 광역간 혁신협의회의 구성원 중 일부를 광역경제권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광역지역내, 광역지역간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혁신추진 조직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은 약 1/3의 중앙정부예산과 2/3의 지방정부예산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1억~2억원을 넘지 못하여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무국은 지역발전연구원이나, 전략산업기획단 등에 구성되어 있고 연구를 추진하고 매니징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채용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협의회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단위의 경제 발전과 혁신의 촉진을 위해 전문성과 재정능력을 갖춘 독립적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비록 경제성장과 혁신이 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지와 참여,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는 다양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과 촉진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을 확대하여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또한 독립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심의와 자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혁신사업의 심의와 자문, 평가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향후의 지역혁신협의회는 그 명칭이야 어떻게 변화할 지라도, 그 역할은 지역혁신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방향의 설정에 맞추어져야 한다.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추진되도록 심의와 자문을 하고, 또한 방향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때, 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완성될 것이다.

V. 맺으며

혁신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고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은 참여정부라고 하는 한 정부의 유행어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모델로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어 실용정부가 된 지금에도 변함없이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는 그동안 산학연관 협력강화, 혁신발전5개년 계획 등의 심의 평가, 자문, 지속적인 행정혁신의 유도,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에 기여하여 왔다. 혁신협의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같이 일부 조직 규모 및 기능을 수정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혁신협의회가 혁신체계의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라는 경제성장모델하에서 초기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서의 혁신협의회의 존재는 실용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자생적인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혁신이 최선인가에 대한 공통적 해답이 없어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언제까지고 자생적인 네트워크가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외 성공사례는 우리에게서 참고는 될 수 있으나 해답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각자 지닌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일한 길은 공통의 문제를

지닌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함께 모여 공동학습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으는 도리밖에 없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일차 설립 목적은 그 같은 기회를 만들고 서로 동기를 북돋으면 희망과 확신을 쌓아가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화로서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네트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박 창 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목 차

〈요 약〉	235
I. 경제 현황	242
1. 경제규모	242
2. 산업구조	244
3. 고 용	246
4. 교역구조	248
5. 금 용	254
II. 주요 특징	259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동적 성장 시현	259
2. 국외여건 변화에 민감	264
3. 생산-소비 및 생산-고용의 연계성 미약	267
4. 권역간 불균형 상존	271

Ⅲ. 발전 방향	276
1. 적극적인 기업창업 지원	277
2.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279
3.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281
4. 수출구조의다변화	282
 <붙임 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상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	285
<붙임 2> 충남일부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	286

표 목 차

<표 1-1> 충남의 산업별 입지계수.....	246
<표 1-2>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246
<표 1-3> 취업자 수.....	247
<표 1-4> 실업자 수 및 실업률.....	248
<표 1-5> 충남의 국가·경제권별 수출 비중.....	250
<표 1-6> 충남의 국가·경제권별 수입 비중.....	251
<표 1-7> 충남의 총수출액대비 주요 수출품목 ¹⁾ 비중.....	252
<표 1-8> 충남의 총수입액대비 주요 수입품목 ¹⁾ 비중.....	252
<표 1-9> 충남의 주요 국가·경제권별 무역수지.....	254
<표 1-10> 충남의 금융기관 점포수.....	255
<표 1-11> 충남의 금융기관 여수신.....	256
<표 1-12> 충남의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257
<표 1-13> 충남의 금융기관별 여신점유율.....	257
<표 1-14> GRDP대비 여수신비율.....	258
<표 2-1> 실질 GRDP 성장률(기간중 연평균).....	260
<표 2-2> 충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¹⁾	261
<표 2-3> 충남도청의 외국인투자 유치 MOU 체결현황(2007년중).....	261
<표 2-4> 충남의 국내 기업유치.....	262
<표 2-5> 제조업 성장률(기간중 연평균).....	262

<표 2-6> 충남의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 ¹⁾	263
<표 2-7> GRDP대비 수출 비율 ¹⁾	264
<표 2-8> 제조기업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265
<표 2-9> GRDP대비 민간소비 비중.....	268
<표 2-10>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율 ¹⁾	268
<표 2-11> 부가가치 항목별 비중 ¹⁾	269
<표 2-12> 충남의 경제성장률 및 고용상황.....	269
<표 2-13> 충남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270
<표 2-14> 충남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271
<표 2-15> 충남의 권역별 제조업 ¹⁾ 구성.....	272
<표 2-16> 충남 북부권 및 여타 권역의 제조업체수 ¹⁾	272
<표 2-17> 충남의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273
<표 2-18> 충남의 권역별 경제활동여건.....	273
<표 2-19> 충남의 권역별 금융기관 점포수 ¹⁾	274
<표 2-20> 충남 북부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¹⁾	275
<표 3-1> 국가별 기업활동 여건 순위.....	277
<표 3-2> 우리나라 수출 중 부품소재산업 비중 추이.....	279
<표 3-3> 전국 부품소재 생산액중 충남지역 비중.....	280
<표 3-4> 충남의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281
<표 3-5> 인도 및 러시아 GDP 성장률.....	282
<표 3-6> 총수출액대비 對인도 및 對러시아 수출 비중.....	283
<표 : 붙임 1-1> 충남지역의 4대 개발경영권.....	285
<표 : 붙임 1-2> 충남지역의 개발축.....	285
<표 : 붙임 2-1> 충남지역 지구별·단계별 육성계획.....	286

그림 목 차

<그림 1-1> 충남의 GRDP	243
<그림 1-2> 충남의 1인당 GRDP	244
<그림 1-3> 충남 GRDP의 산업별 구성비	245
<그림 1-4>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2007년)	247
<그림 1-5> 충남의 수출증가율	249
<그림 1-6> 충남의 수입증가율	249
<그림 1-7> 수출액	249
<그림 1-8> 무역수지	253
<그림 2-1> 시도별 실질 GRDP 성장률	259
<그림 2-2> 충남의 순인구유입	260
<그림 2-3> 시도별 제조업 GRDP 성장기여율	263
<그림 2-4> GRDP대비 수출 비율	264
<그림 2-5> 반도체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단가지수 추이	265
<그림 2-6> 중국 GDP 성장률 및 충남지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	266
<그림 2-7> 충남의 GRDP 및 민간소비지출 증감률	267
<그림 3-1> 한국과 주요국간의 수출경합지수 ¹⁾	283

< 요약 >

I. 경제 현황

- 충청남도 면적은 8,600.5km²로 전국토의 8.6%, 인구(2006년)는 200만명으로 전국의 4.0%
- 2006년 중 지역내총생산(GRDP)은 50.8조원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2,634만원으로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산업별 비중(2006년 GRDP 기준)은 제조업 45.5%, 서비스업 32.1%, 건설업 11.0%, 농림어업 7.2% 등의 순
- 취업자 수는 2007년 중 100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23백만 명)의 4% 수준이며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 추세
- 지역 수출(통관기준)은 2000년대 들어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
 -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이들 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2006년말 기준)는 826개(전국의 4.4%)이며, 수신은 35.0조원(2007년말 기준, 전국의 3.1%), 여신은 30.2조원(2.8%)
 - 여수신 총액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감소

II. 주요 특징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동적 성장 시현

- ☐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 충남지역은 빠른 성장세 지속
 - 특히 2001~200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실질 GRDP 기준 연평균 7.7%) 시현
- ☐ 지역경제의 고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기회의 증가에 힘입어 인구는 2003년 이후 순증 추세를 지속
- ☐ 충남지역의 역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경제개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배경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된 데 기인
 -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충남지역의 연평균 제조업 성장률은 1995~2000년중 7.9%(전국 4위)에서 2001~2006년에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11.1%로 상승

2. 국외여건 변화에 민감

- ☐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수출제조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충남지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

○ GRDP대비 수출 비율은 1995~2000년중 평균 50%에서 2001 ~2006년중 60%대 중반으로 상승

○ 지역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

- 특히 지역 주력업종인 전자·영상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2006년 기준)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동 비중이 50%에 근접

□ 충남지역 경제는 이 같은 수출비중의 확대에 힘입어 그 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와 동시에 지역 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좌우될 위험이 증대

○ 충남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LCD 등의 경기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차지

○ 국별로 보면 충남지역 수출의 1/3 가량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지역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크게 위축될 우려

3. 생산-소비 및 생산-고용의 연계성 미약

□ 지역내 생산활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과는 달리 소비활동은 장기간 부진 지속

○ 이 같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간 괴리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의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에 주로 기인

-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하여 부가가치 중 지역민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용자보수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업 등이 취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이 역외 소비로 유출

☐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고용은 답보 상태

○ 이 같은 생산-고용간 연계성 약화는 상대적으로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기인

- 지역 제조업은 2006년중 GRDP의 45.5%를 차지하여 지역경제 내에서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40%, 건설업의 55%에 불과

○ 이러한 가운데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고용인력의 고령화가 심화

4. 권역간 불균형 상존

☐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기업의 이전 및 설립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북부권은 영상음향(천안·아산), 석유화학(서산), 자동차(천안·아산), 철강(당진) 등 주력산업 관련업체가 집중되면서 충남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80%, 종사자수의 70%, 사업체수의 60% 이상을 차지(2006년 현재)

☐ 이 같은 권역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의 격차에 기인

○ 산업단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교육 및 편의시설 등이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정력도 북부권이 여타 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

☐ 그 결과 점포수, 여수선 비중 등 금융부문에도 권역간 격차가 상존

Ⅲ. 발전 방향

□ 충청남도는 2001년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시현

○ 북부권의 유리한 입지조건에 힘입은 활발한 국내외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가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수출 제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그러나 수출지향적 주력업종의 비중 급상승으로 국외여건 변화나 일부 주력부문의 업황에 따라 지역경기의 변동성이 증대될 위험이 대두

- 또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간 괴리, 북부권과 여타 권역간 성장 격차 등 불균형 문제도 발생

□ 지역경제에 내재하는 이 같은 취약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중층화·고도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기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크게 낙후된 지역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 이와 함께 수출구조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고 기 수립된 권역간 균형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

1. 적극적인 기업창업 지원

- ☐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활력 유지의 필수 전제조건인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상대국에 비해 열악한 창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개선,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창업 유인 제공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별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수급을 위한 산·학 연계 노력을 강화
- ☐ 창업 단계 기업을 금융면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2.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수준이 높고 지역의 자원과 기업경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
 -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면서 수출기여도도 높은 부품소재산업 중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등)를 집중 육성
- ☐ 지역의 기술경쟁력이 유망한 분야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 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전 및 충북과 공동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정부의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적극 활용

3.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 ☐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가 필수적
- ☐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특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연구개발업,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광고 등 사업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지역에 관련 서비스산업을 클러스터화 할 경우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수출구조의 다변화

- ☐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일부 국가의 경기변동성 증대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일 필요
 - 내수시장 규모가 큰 고성장 국가인 인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
- ☐ 주요 경쟁상대국과의 수출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신상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추진
 - 지역의 기술역량, 향후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수출상품을 적극 발굴·육성

I. 경제 현황

1. 경제규모

□ 충청남도 면적은 8,600.5km²로 전국토의 8.6%, 인구(2006년)는 200만명으로 전국의 4.0%

□ 2006년 중 지역내총생산(GRDP)은 50.8조원으로 전국의 5.9%

○ 민선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에 비해 GRDP는 3배 가까운 규모로 커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p(4.2%→ 5.9%) 상승

〈그림 1-1〉 충남의 GRDP



주 : 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1인당 GRDP(2006년, 명목기준)는 2,634만원으로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전국평균을 기준(전국=100)으로 한 1인당 소득수준은 1995년 106.8에서 2006년 148.6로 큰 폭 상승

〈그림 1-2〉 충남의 1인당 GRDP



주 : 명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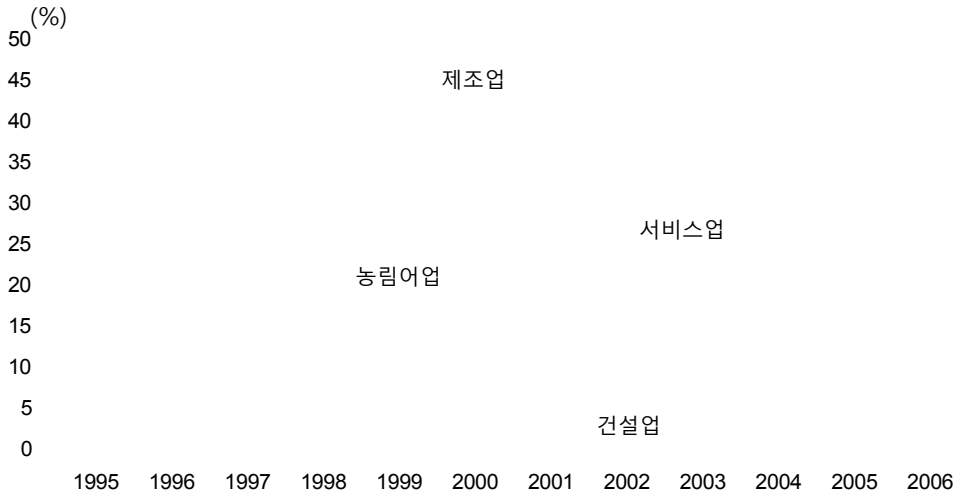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추계인구

2. 산업구조

□ 산업별 비중(2006년 GRDP 기준)은 제조업 45.5%, 서비스업 32.1%, 건설업 11.0%, 농림어업 7.2% 등의 순

○ 제조업은 충남 북부지역으로 국내외 제조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그 비중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1995년 25.8% → 2006년 45.5%)되었으며 제조업 내에서는 영상·음향·통신기기(13.6%), 자동차(6.2%), 화학제품(5.5%) 등이 주력업종으로 부상

〈그림 1-3〉 충남 GRDP의 산업별 구성비



주 : 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입지계수(LQ : Locational Quotient)*를 이용해 보면 충남은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입지계수는 지역의 특정산업이 당해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평균과 비교한 지표이며, 동 계수가 1보다 클수록 당해지역에서 동 산업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 산식 : $LQ_{ij} = (X_{ij} / X_i) / (X_j / X)$

(LQ_{ij} : i지역 j산업의 입지계수, X : 전국 전산업, X_i : i지역 전산업, X_j : 전국 j산업, X_{ij} : i지역 j산업)

- 제조업 입지계수(GRDP 기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이후 계속 1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1을 하회

〈표 1-1〉 충남의 산업별 입지계수

구분	1995	2000	2003	2006
농림어업	2.7	2.7	2.5	2.3
광업	2.3	1.8	2.8	2.0
제조업	0.9	1.3	1.5	1.6
건설업	1.4	1.1	1.1	1.2
전기·가스·수도사업	1.8	2.0	2.4	1.6
서비스업	0.7	0.6	0.6	0.6

주 : 명목 GRDP 기준

3. 고 용

□ 활발한 제조기업 유치로 고용환경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

○ 2007년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102만명으로 전국의 4.2%

- 경제활동참가율은 66.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00년에 비해 3.1%p 상승

〈표 1-2〉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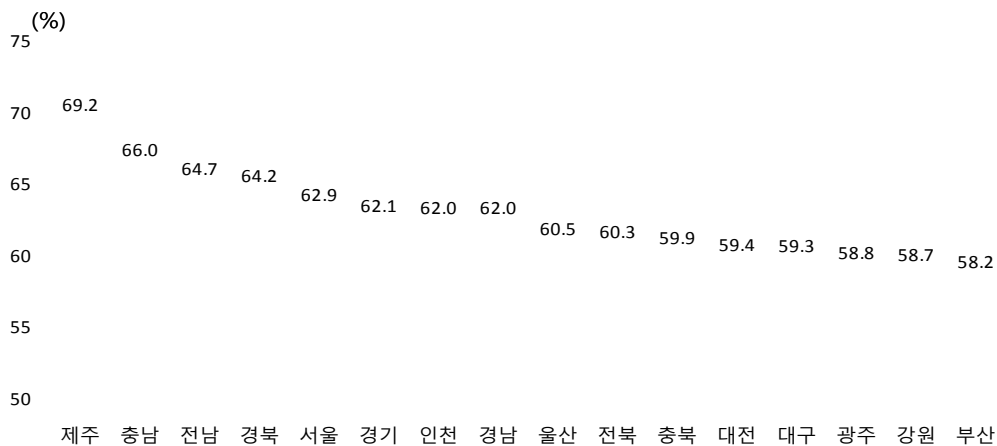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충 남	874	917	933	942	956	991	1,021
	(64.3)	(62.9)	(63.9)	(64.6)	(64.4)	(65.3)	(66.0)
전 국	20,845	22,134	22,921	23,417	23,743	23,978	24,216
	(61.9)	(61.2)	(62.0)	(62.1)	(62.0)	(61.9)	(61.8)

주 : ()내는 경제활동참가율, 1995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4〉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2007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수는 2007년 중 100만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2천 3백만명)의 4% 수준

○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5만명씩 증가

〈표 1-3〉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구분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충 남	863	891	908	921	931	967	998
	(-5)	(17)	(13)	(18)	(11)	(36)	(31)
전 국	20,414	21,156	22,169	22,557	22,856	23,151	23,433
	(566)	(865)	(597)	(418)	(299)	(295)	(282)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자 수는 2만명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유지(2000년 2.9% → 2007년 2.2%)

〈표 1-4〉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분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충 남	11	26	25	21	25	24	23
	(1.3)	(2.9)	(2.7)	(2.3)	(2.6)	(2.4)	(2.2)
	-	<7.2>	<7.2>	<6.5>	<7.6>	<6.2>	<5.6>
전 국	430	979	752	860	887	827	783
	(2.1)	(4.0)	(3.3)	(3.7)	(3.7)	(3.5)	(3.2)
	-	<8.1>	<7.0>	<8.3>	<8.0>	<7.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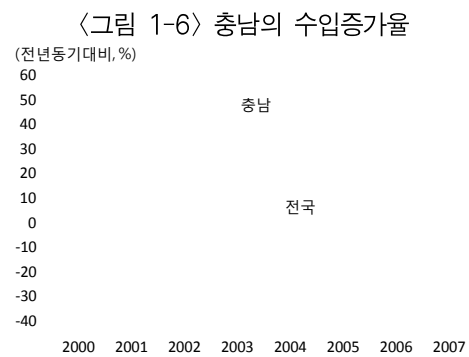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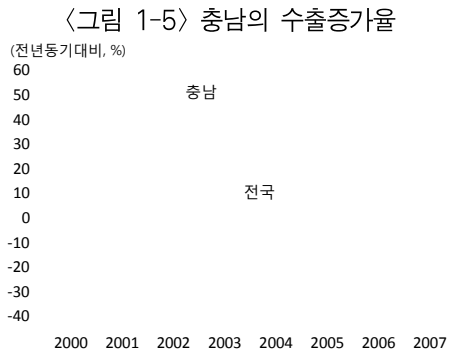
주 : ()내는 전체 실업률, < >내는 15~29세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교역구조

- 충남지역 수출(통관기준)은 2000년대 들어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하며 전국평균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

- 수입도 생산 호조를 반영하여 전국보다 높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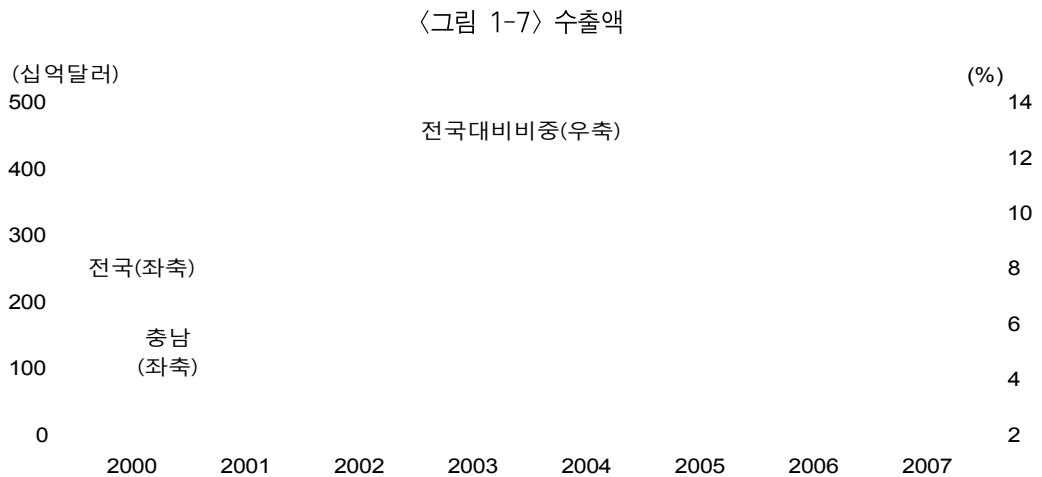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이에 따라 지역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 2003년 10%대에 진입한 후 2007년에는 13%* 수준으로 상승

* 16개 시도 중 경기(17.4%), 울산(1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자료 : 무역협회

□ 교역상대국별로 보면 중국,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이들 3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

- 중국의 비중은 2000년 9.1%에서 2007년 34.0%로 4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동 기간 중 32.8%에서 10.8%로 급감

〈표 1-5〉 충남의 국가·경제권별 수출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중 국	9.1	11.8	19.8	24.7	24.9	34.0
미 국	32.8	27.8	20.3	14.9	13.7	10.8
일 본	14.3	12.9	12.2	13.4	14.9	9.9
소 계	56.2	52.5	52.3	53.0	53.5	54.7
홍 콩	6.6	8.3	12.5	12.8	12.2	8.7
ASEAN	8.6	10.2	8.9	7.4	6.2	6.3
E U	15.3	12.6	13.8	13.1	13.1	13.9
기 타	13.3	16.4	12.5	13.7	15.0	1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무역협회

○ 수입의 경우 일본·중국·미국의 3개국과 OPEC회원국이 각각 35%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6〉 충남의 국가·경제권별 수입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일 본	19.6	20.7	24.4	20.6	17.6	16.1
중 국	6.5	9.8	8.9	11.2	11.9	14.0
미 국	9.3	8.7	7.1	6.6	5.7	6.4
소 계	35.4	39.2	40.4	38.4	35.2	36.5
OPEC ¹⁾	44.0	40.4	33.5	35.4	38.0	34.1
E U	4.8	4.4	6.1	5.3	5.0	5.5
ASEAN ¹⁾	3.4	4.3	4.3	4.1	3.1	3.3
기 타	12.4	11.7	15.7	16.8	18.7	20.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인도네시아는 OPEC에 포함시키고 ASEAN에서 제외

자료 : 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수출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입에서는 광물성 연료(원유)가 주종을 차지

○ 지역의 5대 수출품목(2007년)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이며, 특히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전자 아산공장이 본격 가동된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급상승

〈표 1-7〉 충남의 총수출액대비 주요 수출품목¹⁾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반도체	52.5	47.8	40.8	33.2	33.9	33.9
평판디스플레이	0.0	0.0	0.0	7.4	19.0	22.8
컴퓨터	9.3	11.4	19.2	13.7	9.7	8.5
석유제품	9.7	4.5	2.0	2.9	4.5	3.8
자동차	5.4	9.9	6.3	4.6	3.7	3.2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5대 수입품목(2007년)은 원유, 석유제품, 반도체, 석탄, 컴퓨터

〈표 1-8〉 충남의 총수입액대비 주요 수입품목¹⁾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원유	33.8	27.8	23.8	30.5	34.2	29.3
석유제품	17.7	17.7	15.2	12.2	11.3	12.3
반도체	4.5	6.0	6.3	7.3	6.7	7.0
석탄	5.3	7.0	7.5	7.3	6.0	7.0
컴퓨터	0.8	3.1	1.5	2.2	2.5	3.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지역 무역수지(통관기준)는 2001년 이후 흑자폭이 꾸준히 확대

- 반면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2005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 대한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 비율은 2001년 25.8%에서 2007년 144.4%로 상승

〈그림 1-8〉 무역수지



- 지역별로는 중화권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류 소비 증가 및 유가상승으로 OPEC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

-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호조로 2005년 이후 흑자 지속

〈표 1-9〉 충남의 주요 국가·경제권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중 국	9.0	8.7	44.4	62.7	70.4	125.0
홍 콩	11.0	12.0	35.9	41.7	45.7	40.0
미 국	46.4	34.0	48.5	38.1	40.7	34.8
일 본	4.7	0.2	-1.9	8.1	18.5	4.3
E U	21.3	14.9	30.9	34.4	39.9	51.8
ASEAN	7.3	5.2	12.4	9.7	10.5	9.9
OPEC	-39.9	-34.5	-47.0	-56.8	-78.9	-79.7

자료 : 무역협회

5. 금융

□ 2006년 말 현재 충남지역 금융기관 점포수는 826개로 전국의 4.4%*를 차지

* 인구비중(2006년, 4.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GRDP 비중(2006년 5.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예금은행 점포수는 2006년 말 현재 165개로 전국의 2.4% 수준

○ 비은행기관 점포수는 2006년 말 현재 661개로 전국의 5.7%를 차지

- 신용협동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1-10〉 충남의 금융기관 점포수

(단위 : 개, %)

구분	1995	2000	2003	2006
예 금 은 행	162	143	145	165
	<2.5>	<2.3>	<2.2>	<2.4>
비은행금융기관 ¹⁾	1,043	777	686	661
	<4.3>	<5.3>	<5.6>	<5.7>
(신용협동기구) ²⁾	428	347	313	301
	<6.7>	<7.3>	<7.3>	<7.4>
합 계	1,205	920	831	826
	<3.9>	<4.4>	<4.5>	<4.4>

주 : 1) 종합금융, 상호저축, 신탁,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생명보험회사, 우체국

2) 신탁,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3) < >내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 2007년말 현재 수신은 35.0조원, 여신은 30.2조원

○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 3.1%, 여신 2.8% 수준

〈표 1-11〉 충남의 금융기관 여수신

(단위 : 조원)

구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신	10.7	18.4	24.1	25.9	28.0	32.1	35.0
	<2.4>	<2.7>	<2.8>	<3.0>	<3.1>	<3.1>	<3.1>
예금은행	2.9	6.4	9.7	10.3	11.0	12.8	12.7
비은행금융기관	7.8	12.0	14.4	15.6	17.0	19.2	22.3
(신용협동기구)	4.9	9.2	11.5	12.8	14.1	15.8	16.2
여신	7.9	12.7	18.7	21.1	23.8	27.0	30.2
	<2.3>	<2.8>	<2.7>	<2.9>	<2.9>	<2.9>	<2.8>
예금은행	3.2	6.7	11.5	12.3	13.7	15.9	17.8
비은행금융기관	4.7	6.0	7.3	8.8	10.0	11.0	12.4
(신용협동기구)	3.6	5.5	6.8	8.1	9.2	10.0	11.3

주 : 1) < >내는 전국대비 비중

□ 수신 총액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1%에서 2007년 41.4%로 급신장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크게 감소

○ 비은행금융기관 중 신용협동기구의 시장점유율은 1995년 49.6%에서 2007년 52.7%로 상승하였으나 신탁계정 및 상호저축은행의 비중은 크게 하락

〈표 1-12〉 충남의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금융기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금은행	29.1	37.1	43.1	42.5	41.5	42.3	41.4
비은행금융기관	70.9	62.9	56.9	57.5	58.5	57.7	58.6
신탁계정	12.6	7.3	3.1	2.0	2.0	2.5	2.6
상호저축은행	8.8	2.2	2.3	2.9	3.2	3.2	3.2
신용협동기구	49.6	53.4	51.4	52.7	53.2	52.0	52.7
(신 협)	7.6	6.5	5.1	5.4	5.7	5.5	5.8
(상호금융)	35.8	40.1	39.9	40.4	40.6	39.8	40.4
(새마을금고)	6.2	6.8	6.4	6.9	6.9	6.7	6.6

□ 여신 총액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1.7%에서 2007년에는 59.0%로 급상승

○ 반면 신용협동기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감소

〈표 1-13〉 충남의 금융기관별 여신점유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금융기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금은행	41.7	53.5	61.4	58.5	57.8	59.2	59.0
비은행금융기관	58.3	46.5	38.6	41.5	42.2	40.8	41.0
신탁계정	3.8	1.0	0.1	0.1	0.1	0.3	0.4
상호저축은행	7.7	1.8	2.3	2.9	3.3	3.5	3.2
신용협동기구	46.9	43.7	36.2	38.5	38.8	37.1	37.3
(신 협)	7.5	5.7	4.2	4.3	4.5	4.4	4.7
(상호금융)	33.8	32.5	26.9	29.3	29.6	28.2	28.5
(새마을금고)	5.6	5.4	5.1	4.9	4.8	4.4	4.2

□ 한편 충남지역의 금융연관비율(2006년 GRDP 기준)은 수신 및 여신이 각각 61.6%, 53.1%로 전국평균(각각 142.0%, 107.1%)을 크게 하회

〈표 1-14〉 GRDP대비 여수신비율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신	충 남	62.4	65.7	63.1	60.8	58.9	57.9	61.6
	9개도	78.1	81.2	81.0	79.3	75.1	77.1	80.7
	전 국	140.8	144.7	141.3	133.6	131.0	133.3	142.0
여 신	충 남	44.1	46.1	46.9	48.2	48.8	50.0	53.1
	9개도	55.6	58.8	65.3	69.1	68.5	71.8	78.8
	전 국	88.4	87.1	89.4	94.6	93.6	98.4	107.1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II. 주요 특징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동적 성장 시현

□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 충남지역은 빠른 성장세 지속

○ 1995~2006년 중 충남지역의 연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6.5%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그림 2-1〉 시도별 실질 GRDP 성장률(1995~2006년 중 연평균)



주 : 울산, 경남은 1999년 이후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특히 2001~200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연평균 7.7%) 실현

→ 이에 따라 충남과 전국의 연평균 실질 GRDP 성장률 격차는 1995~2000년 중 1.2%p에서 2001~2006년중 2.9%p로 확대

〈표 2-1〉 실질 GRDP 성장률(기간중 연평균)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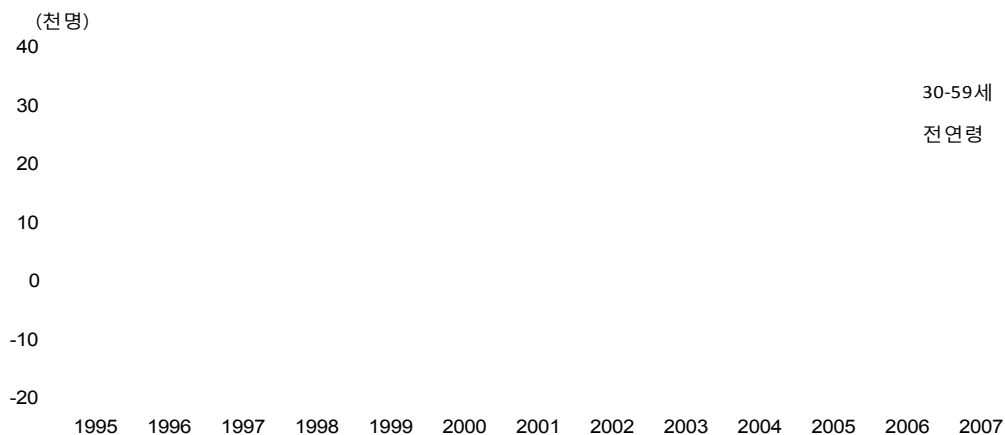
구분	1995~2006	1995~2000	2001~2006
충 남(A)	6.5	5.4	7.7
전 국(B)	4.5	4.2	4.8
A - B	2.0	1.2	2.9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지역경제의 고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기회의 증가에 힘입어 인구는 2003년 이후 순증 추세를 지속

○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인 30~59세 인구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

〈그림 2-2〉 충남의 순인구유입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 충남지역의 역동성이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것은 경제개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배경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된 데 기인

* 수도권 인접성, 교통의 편리성,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에의 접근성 등

○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0년 2.6억달러에서 2006년 13.7억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7년에도 반도체, LCD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

〈표 2-2〉 충남의 외국인투자 유치¹⁾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47	38	41	26	42	70	52	8
유치액(억달러)	2.6	4.9	5.8	7.0	12.0	3.3	13.7	12.4

주 : 1) 신고기준

자료 : 충남도청

〈표 2-3〉 충남도청의 외국인투자 유치 MOU 체결현황(2007년중)

기업명	체결일	생산품	위치	유치액(백만달러)
OOC(오만)	3. 22	LNG 발전소	당진	30
BOC(영국)	3. 28	반도체용 특수가스	아산	10
Matheson 트라이가스(미국)	3. 28	반도체용 특수가스	아산	24
CEPSA(스페인)	7. 9	석유화학	서산	935
Rohm & Haas(미국)	9. 28	LCD 필름	천안	175
Rohm & Haas(미국)	9. 28	LCD 부품	천안	4
UFI(이탈리아)	10. 9	자동차 연료필터	아산	10
Air Liquide(프랑스)	11.13	산업용가스	당진	50

자료 : 충남도청

- 국내 기업유치 건수도 2000년 400건 수준에서 2007년 1,000건 수준으로 증가

〈표 2-4〉 충남의 국내 기업유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394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자료 : 충남도청

-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충남의 연평균 제조업 성장률은 1995~2000년 중 7.9%(전국 4위)에서 2001~2006년에는
지자체중 가장 높은 11.1%로 상승

〈표 2-5〉 제조업 성장률(기간중 연평균)

(단위 : %, %p)

구분	1995~2006	1995~2000	2001~2006
충 남(A)	9.5	7.9	11.1
전 국(B)	6.3	6.0	6.6
A - B	3.2	1.9	4.5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같은 기간 중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도 53.5%에서 63.7%로 상승하여 여타
산업을 압도

〈표 2-6〉 충남의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¹⁾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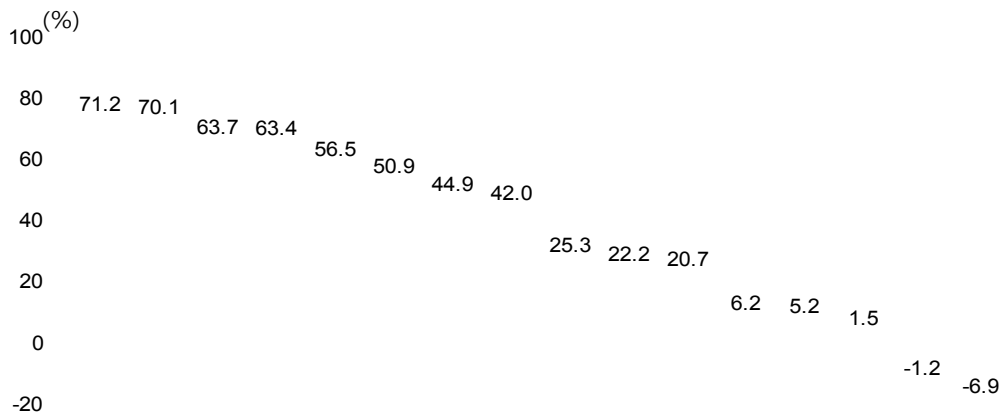
구분	1995~2006	1995~2000	2001~2006
농림어업	2.2	6.0	0.3
광업	0.2	0.2	0.1
제조업	60.3	53.5	63.7
전기·가스·수도사업	7.9	11.0	6.4
건설업	5.7	-1.1	9.2
서비스업	23.7	30.5	20.3

주 : 1) 산업별 기여율=(산업별 GRDP 변동분/전체 GRDP 변동분)×10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2001~2006년 중 충남지역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은 16개 지자체 중 경북(71.2%), 울산(7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그림 2-3〉 시도별 제조업 GRDP 성장기여율¹⁾(2001~2006년중)



주 : 1) (제조업 GRDP 변동분/전체 GRDP 변동분)×10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 국외여건 변화에 민감

□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수출제조 기업이 주력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충남지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

○ GRDP대비 수출 비율은 1995~2000년 중 평균 50%에서 2001~2006년 중 60%대 중반으로 상승

〈표 2-7〉 GRDP대비 수출 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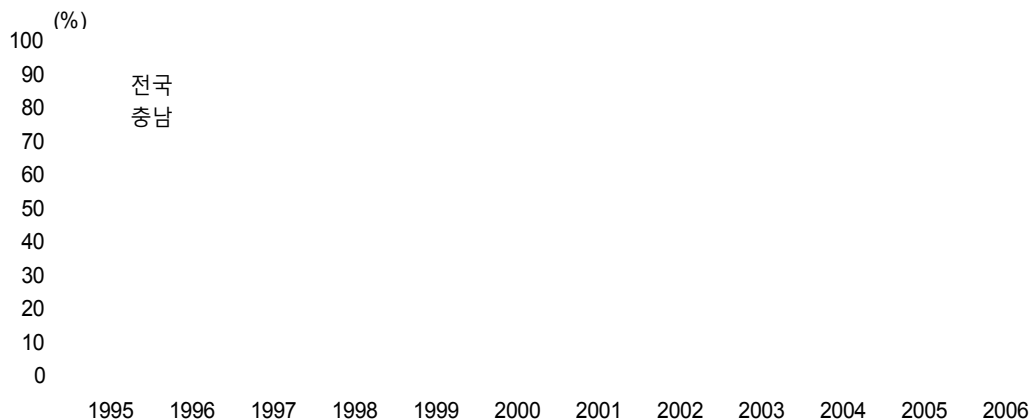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1995~2006	1995~2000	2001~2006
충 남	57.1	49.5	64.7
전 국	31.5	29.5	33.6

주 : 1) 기간중 평균

자료 : 무역협회, 통계청

〈그림 2-4〉 GRDP대비 수출 비율



자료 : 무역협회, 통계청

○ 지역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

- 특히 지역 주력업종인 전자·영상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2006년 기준)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동 비중이 50%에 근접

〈표 2-8〉 제조기업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충 남	26.8	24.8	21.7	31.2	46.5	45.0	44.3
전 국	40.1	38.4	36.6	41.5	45.3	43.4	43.9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 충남지역 경제는 이 같은 수출비중의 확대에 힘입어 그 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와 동시에 지역 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좌우될 위험이 증대

○ 충남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LCD 등 경기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차지

- 이들 주력수출품목은 각국간 설비 신·증설 경쟁, 급속한 기술진보 등으로 국제시장 가격이 기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

〈그림 2-5〉 반도체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단가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별로 보면 충남지역 수출의 1/3 가량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지역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크게 위축될 우려

〈그림 2-6〉 중국 GDP 성장률 및 충남지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



자료 : 무역협회, 중국 국가통계국

3. 생산-소비 및 생산-고용의 연계성 미약

1) 생산-소비의 연계성 미약

□ 지역내 생산활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과는 달리 소비활동은 장기간 부진 지속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1년 이전까지 GR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 GRDP 증가율을 크게 하회

〈그림 2-7〉 충남의 GRDP 및 민간소비지출 증감률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GR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전국 및 9개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락

〈표 2-9〉 GRDP대비 민간소비 비중

(단위 : %, %p)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충 남(A)	38.6	40.7	38.6	34.7	32.4	31.5	31.1
9개도	50.5	52.1	52.5	49.5	46.4	47.6	48.6
전 국(B)	54.7	56.2	56.2	53.9	51.3	52.4	53.2
A - B	-16.1	-15.5	-17.6	-19.2	-18.9	-20.9	-22.1

주 : 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충남지역 민간소비지출의 GRDP 성장기여율도 2001~2006년 중 13.1%로 전국(35.2%) 및 9개도 평균(29.0%)의 절반 이하에 그침

〈표 2-10〉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율¹⁾

(단위 : %)

구분	2001~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충 남	13.1	93.5	22.7	-7.5	1.9	14.7	10.5
9개도	29.0	61.0	54.0	-10.3	2.3	38.0	32.1
전 국	35.2	77.3	55.0	-17.4	-0.8	45.6	39.3

주 : 1) 민간소비지출 성장기여율=(민간소비지출 변동분/GRDP 변동분)×10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이 같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간 괴리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의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에 주로 기인

- 영상·음향·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하여 부가가치중 지역민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

〈표 2-11〉 부가가치 항목별 비중¹⁾

(단위 : %)

구분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기타생산세	총부가가치
충 남	18.1	40.8	40.5	0.6	100.0
전 국	14.1	48.9	36.0	1.0	100.0

주: 1) 2000~2005년(명목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업 등이 취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 소비로 유출되는 것도 충남지역 소비부진 요인의 하나

2) 생산-고용간 연계성 약화

□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고용은 답보 상태

- 1995~2006년 중 GRDP는 연평균 6.5% 성장하였으나 취업자수는 연평균 0.9% 증가에 그침

→ 2006년 취업계수(취업자수/GRDP)는 21.4를 기록하여 1995년(49.8)의 절반 이하로 하락

〈표 2-12〉 충남의 경제성장률 및 고용상황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1995~2006
경제성장률(GRDP)	-1.1	7.9	8.9	9.2	8.7	9.3	6.5
(전 국)	7.7	8.1	7.7	5.0	4.0	5.1	4.5
취업자수 증감률	-0.6	1.9	1.5	2.0	1.2	3.9	0.9
(전 국)	2.9	4.3	2.8	1.9	1.3	1.3	1.3
취업계수(명/10억원)	49.8	30.8	28.0	24.2	22.5	21.4	30.3
(전 국)	49.8	36.6	34.3	32.1	31.3	30.2	36.2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 같은 생산-고용간 연계성 약화는 상대적으로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기인

○ 충남지역 제조업은 2006년 중 GRDP의 45.5%를 차지하여 지역경제내에서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40%, 건설업의 55%에 불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 취업유발계수 ¹⁾	7.9	14.2	19.8	14.1

주 : 1) 충청지역 최종수요 10억원 증가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명)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

□ 이러한 가운데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고용인력의 고령화가 심화

○ 1995~2007년중 상용근로자 비중(30.0%→31.9%, +1.9%p)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11.6%→25.4%, +13.8%p)은 크게 증가

〈표 2-13〉 충남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단위 : %, %p)

구분	1995(A)	2000	2005	2006	2007(B)	B-A
비임금근로자	58.4	51.5	45.8	44.7	42.9	-15.5
임금근로자	41.6	48.5	54.2	55.3	57.2	15.6
상용근로자	30.0	26.5	31.0	30.9	31.9	1.9
임시·일용직	11.6	22.0	23.3	24.5	25.4	13.8
(전 국)	26.5	32.9	31.8	31.7	31.4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같은 기간중 40대 및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각각 4.5%p, 4.3%p 상승한 반면 30대 이하 취업자 비중은 7.8%p 감소

〈표 2-14〉 충남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단위 : %, %p)

구분	1995(A)	2000	2005	2006	2007(B) ¹⁾	B-A
15~29세	20.5	18.7	15.9	16.0	15.5	-5.0
30대	24.7	24.1	23.2	22.2	21.8	-2.8
40대	20.3	22.6	25.5	24.9	24.7	4.5
50대	18.7	16.3	16.6	17.3	17.8	-0.8
60대이상	15.9	18.3	18.9	19.5	20.1	4.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권역간 불균형 상존

* 충청남도는 지리적 여건과 산업·자원 등을 기준으로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보령, 서천, 태안), 내륙권(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 금강권(논산, 금산, 부여)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기업의 이전 및 설립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북부권은 영상음향(천안·아산), 석유화학(서산), 자동차(천안·아산), 철강(당진) 등 주력산업 관련업체가 집중되면서 2006년 현재 충남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80%, 종사자수의 70%, 사업체수의 60% 이상을 차지

〈표 2-15〉 충남의 권역별 제조업¹⁾ 구성

(단위 : %)

구분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북 부 권	80.7	79.8	83.2	70.2	70.8	75.5	56.2	57.2	61.4
서해안권	2.6	3.7	3.5	3.7	4.1	3.5	7.0	7.7	6.9
내 륙 권	10.4	10.0	8.0	16.4	15.9	13.2	20.3	19.2	17.2
금 강 권	6.3	6.5	5.4	9.8	9.2	7.7	16.4	15.9	14.5

주 : 1) 종사자 5인 이상 기준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여타 권역도 기업설립이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북부권의 절반 수준

〈표 2-16〉 충남 북부권 및 여타 권역의 제조업체수¹⁾

구분	2000(A)	2006(B)	B-A
북 부 권	1,627	2,564	937
북부권 이외	1,266	1,615	349
충 남	2,893	4,179	1,286

주 : 1) 종사자 5인 이상 기준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이 같은 권역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의 격차에 기인

○ 산업단지의 경우 북부권에 국가·지방단지를 중심으로 약 60%(지정면적 기준)가 집중

〈표 2-17〉 충남의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 km²)

구분	국가		지방		농공		계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북 부 권	4	20,368	19	28,366	24	4,026	47	52,760
서해안권	2	17,113	2	3,508	10	1,687	14	22,308
내 륙 권	-	-	7	5,271	28	4,069	35	9,340
금 강 권	-	-	2	1,135	13	1,835	15	2,970
계	6	37,481	30	38,280	75	11,617	111	87,378

자료 : 충남도청, 산업단지현황(2007년)

○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및 편의시설도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정력도 북부권이 여타 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

〈표 2-18〉 충남의 권역별 경제활동여건

구분	도로율 ¹⁾	항만시설 ²⁾	대학교육 ³⁾	유통시설 ⁴⁾	재정력지수 ⁵⁾	인구증가율 ⁶⁾
북 부 권	1.14	21,938	385	13	0.55	2.7
서해안권	0.88	23,993	12	0	0.25	-1.6
내 륙 권	0.79	-	208	2	0.21	-0.5
금 강 권	0.71	-	140	3	0.20	-1.7

주 : 1) 도로연장(km)/시·군면적(km²) (2006년)

2) 항만하역능력(천톤, 2006년)

3) 학과수(2007년)

4)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수(2006년)

5) 2003~2007년중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6) 1996~2006년중 연평균 인구증가율

자료 : 충남도청 통계연보(2007),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2006),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그 결과 금융부문에도 권역간 격차가 상존

- 북부권은 금융기관 점포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중은행은 점포의 64%가 북부권에 소재

〈표 2-19〉 충남의 권역별 금융기관 점포수¹⁾

(단위 : 개)

구분	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시중은행	특수은행	종합금융	자산운용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북 부 권	386	61	31	2	4	8	27	27	161	65
서해안권	132	7	8	1	0	1	7	11	61	36
내 륙 권	265	22	18	0	0	3	16	18	123	65
금 강 권	170	7	9	1	0	1	10	11	85	46

주 : 1) 2006년말 기준

- 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중 북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상승 추세
 - 특히 천안지역 여신 비중이 2000년 이후 크게 상승(2000년 말 21.9% → 2007년 말 37.7%)

〈표 2-20〉 충남 북부지역 금융기관 여수신¹⁾

(단위 : 조원, %)

구분		2000		2003		2007	
수 신 ²⁾	북부권	8.4	(47.7)	11.8	(50.0)	16.3	(50.2)
	천 안	4.3	(24.4)	5.9	(25.0)	8.4	(25.8)
	아 산	1.5	(8.5)	2.4	(10.2)	3.3	(10.2)
	서 산	1.5	(8.5)	2.0	(8.5)	2.6	(8.0)
	당 진	1.1	(6.3)	1.5	(6.4)	2.0	(6.2)
	충 남	17.6	(100.0)	23.6	(100.0)	32.5	(100.0)
여 신	북부권	5.9	(46.1)	10.2	(54.5)	18.8	(62.3)
	천 안	2.8	(21.9)	6.3	(33.7)	11.4	(37.7)
	아 산	1.2	(9.4)	1.7	(9.1)	3.3	(10.9)
	서 산	0.9	(7.0)	1.1	(5.9)	1.9	(6.3)
	당 진	1.0	(7.8)	1.2	(6.4)	2.2	(7.3)
	충 남	12.8	(100.0)	18.7	(100.0)	30.2	(100.0)

주 : 1) 말잔기준

2)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판매액 제외

3) () 내는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

Ⅲ. 발전 방향

□ 충청남도는 2001년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시현

○ 북부권의 유리한 입지조건에 힘입은 활발한 국내외 기업 유치로 산업구조가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수출 제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그러나 수출지향적 주력업종의 비중 급상승으로 국외여건 변화나 일부 주력부문의 업황에 따라 지역경기의 변동성이 증대될 위험이 대두

- 또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간 괴리, 북부권과 여타 권역간 성장 격차 등 불균형 문제도 발생

□ 지역경제에 내재하는 이 같은 취약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중층화·고도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기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크게 낙후된 지역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 이와 함께 수출구조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고 기 수립된* 권역간 균형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

* <붙임 1>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상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 참조

1. 적극적인 기업창업 지원

-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활력 유지의 필수 전제조건인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상대국에 비해 열악한* 창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World Bank가 178개국의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 고용에 요구되는 절차나 규제가 타국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전체적인 기업활동 여건은 178개국 중 30번째, 창업 여건은 110번째, 고용 여건은 131번째인 것으로 조사)

〈표 3-1〉 국가별 기업활동 여건 순위

구분	전체 ¹⁾	(창업)	(고용)	(납세)	(무역)	(계약이행)	(폐업)
싱가포르	1	9	1	2	1	4	2
뉴질랜드	2	3	13	8	16	13	16
미국	3	4	1	76	15	8	18
한국	30	110	131	106	13	10	11

주 : 1) 창업, 고용, 납세 등 10개 조사항목을 평균한 값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 2007.10월)

- 일부 산업의 경우 진입 및 투자 시기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하여 창업허가 과정(process) 간소화*를 적극 추진

* (예) 캐나다의 경우 온라인 전자서류제출센터를 통해 연방 및 지방법인 설립 신청을 접수하면 1일후 처리되며 연방 국세 및 관세청에 등록하면 2일후 납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개선,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창업 유인 제공

* (예) 첨단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단지, 도시형 산업단지, 첨단산업·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임대형 산업단지 등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입지확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2개월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승인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3년이 소요(계획의 수립 및 신청,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환경·교통 평가, 실시 계획 승인 등)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별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수급을 위한 산·학 연계 노력을 강화*

* 현대제철의 경우 2006년 당진공장 인근의 신성대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에 제철산업과를 신설, 교육·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노력을 병행

□ 창업 단계 기업을 금융면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 이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첨단분야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벤처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

- 상업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수준이 높고 지역의 자원과 기업경영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예) 농축산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분야로서 인접한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의 장비, 인력 활용이 가능한 부문

-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면서 수출기여도도 높은 부품소재산업 중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등*)를 집중 육성

〈표 3-2〉 우리나라 수출 중 부품소재산업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5	2001	2003	2005	2006	2007
부품소재(A)	42,654	61,975	82,010	123,793	148,712	168,186
전체수출(B)	125,058	150,439	193,817	284,419	325,465	371,489
비중(A/B,%)	34.1	41.2	42.3	43.5	45.7	45.3

자료 : 부품소재통계정보(2007)

* 〈표 3-3〉 전국 부품소재 생산액중 충남지역 비중

(단위 : %)

평균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10.2	18.4	14.4	25.5

주 : 2005년 기준

- 기술경쟁력이 유망한 분야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OECD는 2003년중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2.2%)을 상회하고 있으나 투자효율이 낮고 인력이 취약한 데다 정보통신 기술 및 자동차 등 일부 부문에 투자규모의 60%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 BT, NT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에 거액의 초기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위험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 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전 및 충북과 공동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정부의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적극 활용

* <붙임 2> 충남 일부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대상지역 선정 참조

3.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2006년 서비스업 입지계수(GRDP 기준)는 0.6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를 감안할 때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가 필수적

〈표 3-4〉 충남의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분	1995~2000	2001~2007
농림어업	-74.0	-66.1
광업	-3.0	0.5
제조업	18.0	34.7
건설업	-2.0	6.8
서비스업	84.0	131.3
전산업	23.0	107.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특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연구개발업,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광고 등 사업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교육, 의료보건, 문화서비스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OECD 기준)

-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지역에 관련 서비스산업을 클러스터화 할 경우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김현정,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2006.5)

4. 수출구조의 다변화

-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일부 국가의 경기변동성 증대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일 필요

- 내수시장 규모가 큰 고성장 국가인 인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

〈표 3-5〉 인도 및 러시아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1/4	2/4	3/4
인 도1)	8.5	7.5	9.0	9.1	9.3	8.9
러 시 아	7.2	6.4	7.4	7.9	7.8	7.6

주 : 1)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4.1일 ~ 익년 3.31일) 기준

자료 : Bloomberg

- 향후 이들 국가는 중산층의 급성장으로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IT,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

〈표 3-6〉 총수출액대비 對인도 및 對러시아 수출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3	2006	2007
총 남	인 도	0.4	0.3	0.3	0.4
	러시아	0.1	0.1	0.5	0.6
전 국	인 도	0.8	1.5	1.7	1.8
	러시아	0.5	0.9	1.6	2.2

자료 : 무역협회

□ 주요 경쟁상대국과의 수출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신상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추진

〈그림 3-1〉 한국과 주요국간의 수출경합지수¹⁾



주 : 1) 두 국가간 동일한 수출 품목의 국제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국가의 수출경합도가 높음을 의미

자료 : IMF, "Republic of Korea :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07/345, 2007.10

○ 지역의 기술역량, 향후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수출상품*을 적극 발굴·육성

- * 산업자원부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내에 있거나 향후 3년 이내에 들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고 금융,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2007년 말 현재 반도체, LCD, 인삼 등 583개 품목, 657개 기업)
- * 중소기업청은 전자전기제품 12개(무선수신기, 인쇄회로), 기계류 10개(자동차부품), 섬유류 7개, 철강금속 1개, 생활용품 1개 등 총 31개 품목을 중소기업수출 글로벌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기획, 기술개발, 생산자금 및 해외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기로 결정(2007.11)

<붙임 1>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상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

〈표 : 붙임 1-1〉 충남지역의 4대 개발경영권

권역별	대상지역	발전방향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 관광의 메카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 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

☐ 균형발전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거점간 연계망(개발축)을 구축

〈표 : 붙임 1-2〉 충남지역의 개발축

구분	축별	개발방향
북부축	태안~천안	· 내륙 및 임해형 신산업 복합지대
중부축	행정도시~공주~보령	· 서해·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남부축	서천~금산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 국제교역·교류 거점 및 해양관광지대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 중추행정·첨단산업·내륙교통·물류지대

<붙임 2>

충남 일부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대상지역 선정

□ 2007. 12.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기·충남의 5개 지구(68.1 km^2)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 기존 경제자유구역 : 인천(03.10월), 광양만권(04.3월), 부산·진해권(04.3월)

** 사전환경성 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친 후 공식 확정될 예정


○ 전체 면적 중 충남(아산, 서산, 당진 일원)이 61.5%, 경기(평택, 화성 일원)가 38.5%를 각각 차지

□ 이를 통해 충남 및 경기 일원을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여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동북아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2008~2025년 중 총사업비 6조 9,996억원* 투자)

* 사업비 재원은 국비 475억원(0.7%), 지방비 4,139억원(5.9%) 및 민자 6조 5,382억원(93.4%)으로 조성 예정

〈표 : 붙임 2-1〉 충남지역 지구별·단계별 육성계획

지구	1단계 (2008~2013년)	2단계 (2014~2019년)	3단계 (2020~2025년)
송악·석문(당진) (25.3 km^2)	· 자동차부품단지 · IT부품단지	· 자동차부품단지 · 상업·업무지구	· 자동차부품단지
인 주(아산) (13.0 km^2)	· 자동차부품단지 · 관광시설	· 택지개발	· IT부품단지
지 곡(서산) (3.5 km^2)		· 자동차부품단지 · 상업·업무지구	· 자동차부품단지



제 4차 연구회

1.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평가

청 재 호

2.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조 복 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평가

정 재 호
(목 원 대 학 교)

목 차

I. 서 론	295
II. 부동산정책	297
1. 부동산정책 개념 및 기능	297
2. 부동산정책의 유형	298
3. 부동산정책의 기초	300
4. 참여정부의 정책	302
5. 이명박정부의 정책	305
III.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반응	309
1. 부동산정책지수	309
2. 분석자료	310
IV.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실증분석(충격반응분석)	313
1. 모형설정	313
2. 분석결과	315

V.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319
1. 참여정부	319
2. 이명박 정부의 평가	322
3. 이명박 정부의 향후 과제	323
VI. 결론	324
참고문헌	326

표 목 차

<표 2-1> 주택정책의 유형.....	300
<표 2-2> 부동산 정책 기조.....	301
<표 2-3> 주택건설 추이.....	303
<표 2-4>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304
<표 2-5>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306
<표 2-6> 정책비교.....	308
<표 4-1> ADF 단위근 검정.....	313
<표 5-1>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320

그림 목 차

<그림 3-1> 부동산정책 더미.....	310
<그림 3-2> 부동산정책지수와 주택매매 가격지수.....	311
<그림 3-3> 부동산정책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311
<그림 3-4> 부동산정책지수와 토지매매가격지수.....	312
<그림 4-1>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매매시장의 반응.....	316
<그림 4-2>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전세시장의 반응.....	317
<그림 4-3> 부동산정책에 대한 토지매매시장의 반응.....	318
<그림 5-1> 공공과 민간부문 주택건설 현황.....	320
<그림 5-2> 미분양 아파트 추이.....	321

I. 서 론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과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었다. 김대중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서는 10.29대책(2003), 8.29대책(2005), 3.30대책(2006), 11.15대책(2006), 1.11대책(2007) 등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정부는 전반적인 반시장주의 기조를 내세워 강력한 정부의 수요 억제정책을 펴왔다. 투기적 거래를 막는 전매금지 규제와 각종 세금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금융대출규제를 통한 시중 유동성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참여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수요관리차원의 대책에 주로 의존하였다.

한편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진행으로 인한 토지보상으로 인한 지방의 풍부한 유동 자금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기는 악화되고 수도권은 오히려 과열되는 양극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고자 내세웠던 정책 수단은 오히려 지방 경기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방의 건설부동산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일괄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에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지방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규제정책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유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3.20대책, 8.21대책, 9.19대책, 11.3대책 등 각종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수요 위축과 공급과잉에서 촉발된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¹⁴⁾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건설업체를 살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실물경제와 금융기관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새로운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부동산규제완화는 부동산투기를 유도하고 부동산가격거품 형성과 붕괴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의 의의를 살펴보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이전과 참여정부이후로 기간별 구분과 강남, 대전, 전국지역으로 나누어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부동산 정책의 충격이 주택시장(매매와 전세)과 토지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정책에 충격이 왔을 때 부동산가격에 정(+)의 효과 또는 부(-)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충격 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부동산 억제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는지도 분석하고자 하며, 현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4) 2008.9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16.1만호로 10.3만호였던 외환위기 때를 상회하고 있다.

II.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 개념 및 기능

부동산정책이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 또는 행동 방안이며,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기능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경제적인 기능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능은 첫째, 부동산 활동 규제 기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 장치는 해당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중개업자나 감정평가사 등의 부동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 규제한다. 둘째,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의 보조정책이 있으며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셋째, 정부의 과세 기능을 들 수 있다. 과세 기능을 통하여 부동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 혹은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과다소유 등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세하기도 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서민을 위한 개발 등의 부동산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은 부동산관리를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청사와 복지와 관련한 시설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발표시점 이후 즉각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의 발표된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책이 발표시점과 개입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나 시장의 원리를 감안하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필요하다.

2. 부동산정책의 유형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억제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활성화정책이다. 투기억제정책으로는 거래 규제 및 조세강화, 이익의 환수, 세무조사 등이 수단이며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에는 각종 규제의 완화, 주택 구입자금 지원, 세제지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 확대 등이 있다.

1) 투기억제(안정, 규제) 정책

주택경기는 정부의 주택에 대한 정책 및 규제에 의해 좌우된다. 주택거래 규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취득이나 소유의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제한과 이와는 달리 거래당사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며 주로 세제상으로 중과세하여 취득이나 처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관련 세제는 주택 그 자체의 건축에 해당하는 것과 주택의 분양, 보유, 구입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급등과 주택투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중과세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주택관련 조세는 그 과세대상, 목적,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보유과세, 거래·이전, 자본이득과세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또한 투기를 억제하고 세원을 포착하는 검인계약서제도,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있고, 그 밖에 등기의무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등 부동산실명제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경기활성화(부양, 지원) 정책

대부분 주택문제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된 주택도 계층 간, 지역 간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못한다에서 기인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가능하게 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정부개입은 두 가지 측면, 즉 주택 수요적 측면과 주택 공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택수요측면의 정부지원과 보조방안으로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수요측면의 지원방식은 가구의 주택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주택공급측면의 정부지원과 보조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신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업자 및 주택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지원으로 주택공급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제도적인 지원으로 주택공급물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수요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택가격의 안정, 가수요 및 투기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관련조세는 주택소비와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세정책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택소비 촉진 조세정책은 자가확대 주택정책과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주택공급확대 측면의 조세정책은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료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1〉 주택정책의 유형

정책구분			정책수단
투기억제정책 (안정, 규제)	수요억제	거래규제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 청약자격 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거래신고제
		조세강화 및 금융규제	- 양도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 주택담보비율 강화
	공개념제도		- 개발이익 환수제 - 채권입찰제 및 가격 제한
	기 타		- 부동산중개업 단속 - 투기단속, 투기관련자 제재 -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경기활성화정책 (부양, 지원)	수요촉진	거래활성화	- 청약자격 완화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자금지원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조세감면	-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 양도소득세 관련 규제 완화
	공급확대	공급규제완화	- 주택공급규제 완화 -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신규개발계획	- 신도시 개발계획

3. 부동산정책의 기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근거가 된 Henry George의 「빈곤과 진보(Poverty and Progressive, 1897)」의 기본적 사상을 따라 정책을 진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지스트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고 투기로 인한 자본이득은 지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가격을 왜곡시키며 이러한 가격왜곡을 교정해야 시장이 작동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계층간 갈등과 분쟁은 낭비적소모이며 불평등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합과 평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유권을 반대하며 기존 소유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순이익(지대)을 회수하는 토지단일세, 토지가치환수제를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조지스트패러다임과는 양도세부과에 대한 조세방식에는 일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 이명박정부는 기존 참여정부의 반시장주의(조지스트 패러다임)부동산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시장자유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존중해야 되며 부동산가격상승이 수요증가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해야하며 정부의 가격규제는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경기침체와 더불어 시장주의자 입장을 내세우며 기존의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표 2-2〉 부동산 정책 기초

구분	반시장주의-조지스트패러다임	시장주의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형평성:효율은 형평을 바탕으로함 ○ 빈곤의 원인(풍요속의 빈곤)->진보의 법칙 (정신적능력) ○ 갈등과분쟁-낭비적소모-불평등과 비례 ○ 결합과평등-진보의법칙*자유주의, 사유재산권, 시장원리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원리(자본주의) ○ 개인자유주의 ○ 효율성>형평성
현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자본이득-지가상승의 악순환과 경기변동-거시경제적차원-가격왜곡-교정만이 해결책 ○ 토지상승후 경제불황-IMF직전 3년간 오름 ○ 신용창출->토지투기->지가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합리성 - 미시경제적차원 ○ 투기-상품투기(가격조정가능)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정부(최소)
방법상 (대안)의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사유화 반대-사유재산권인정 ○ 토지이용으로 인한 순이익(지대)몰수 ○ 토지단일세(오직 토지세만으로 충당) ○ 양도소득세(전가), 거래세, 취득세(거래위축) 반대 ○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부담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논리 ○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 ○ 경쟁의 원리 ○ 경제적 인센티브
토지에 대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사유화 부정하나 기존 토지사유는 인정 ○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 토지사유화->소유독점->특정계층집중->고착화->지배, 피지배계층분리->분쟁으로 능력소모->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축성<->부증성 ○ 규제-불로소득 ○ 불로소득 존재 부정 ○ 지역간불균형과 수도권 비대화는 큰 문제가 아님 ○ 토지는 특별한 재화가 아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치환수제, 지대조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사유제

4. 참여정부의 정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콜금리 목표치가 같은 해 5월, 7월에 각각 0.25% 인하되었으며, 2004년 8월, 11월에도 각각 0.25%씩 인하하였다. 이러한 금리완화기조를 배경으로 시중 유동성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며 불안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참여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가격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주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책을 집행했다. 직접적 개입성격의 주택정책은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세강화, 재건축요건의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간접적 개입으로는 시중자금의 유동성 조절, 주택담보대출 요건강화가 대표적 개입 사례이다. 그 이외에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나 주거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금리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참여정부 전반기의 가격안정화대책은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 신도시개발 등을 제시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강화 및 규제에 의존하였다. 금융적 수단으로 투기지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LTV 규제는 은행권에만 한정되고 비은행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비록 2005년 10월, 12월에 콜금리 목표가 각각 0.25%씩 인상된 적이 있었으나 2006년 하반기의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해외 단기유동성이 빠르게 유입되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리를 높이지 못하고 대신 대출규제 강화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다.¹⁵⁾

10.29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확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하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8.31대책은 10.29대책 방안을 집행하는 단계였다. 이후 3.30대책, 1.31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내놓았다.

15) 이종권,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시장 전망',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p.114.

이렇듯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중 대부분은 투기적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수요억제책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공급억제책을 병행하여 거래자체를 억누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즉, 주택시장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의 기능을 사실상 막음으로써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 주로였다. 전국의 주택건설공급이 줄어든 2004년~2006년간의 서울 및 수도권에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낮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억제는 수요억제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표 2-3〉 주택건설 추이

(단위 : 호)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9
전 국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195,885
수도권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172,058	302,551	100,053
서울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39,694	62,842	

출처 : 국토해양부

〈표 2-4〉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년도	대 책	주 요 내 용
2003년	5.23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수도권전역, 충청권일부 ▪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 LTV인하(60%→50%)
	9.5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10.29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확대 :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 ▪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50%→40%)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업승인대상 ▪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추진 (2005년부터)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기지역 2주택 이상자 양도세 탄력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율 60%로 인상 ▪ 준비중인 2단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개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계획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검토 -토지거래 허가대상 강화
2005년	2.17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 재건축안정대책(개발이익환수, 안정진단강화,초고층 불허)
	5.4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수준으로 보유세 강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완화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1가구 2주택자로 확대
	8.31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세 강화 : 2주택자 50%, 3주택자 60%, 나대지 60% ▪ 종부세 강화(개인별→ 가구별, 6억원이상 주택)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개발부담금 부활 ▪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2006년)
2006년	3.30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 도입 ▪ 택지조성비감, 택지공급가격인하를 통한 분양가 합리화 ▪ 용지보상 합리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 6억초과 40%이내
	11.15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2007년 분당급 신도시 추가개발, 용적률(175%→191%) ▪ 투기지역 LTV 강화 ▪ DTI를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시행 ▪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 25%인하
2007년	1.11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민간택지로 확대 ▪ 청약가점제 도입 ▪ 담보대출 규제 : 1인 1건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확대
	1.31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역할 강화

자료: 두성규·박용석 “:주택·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p.6.를 참고 재정리.

5. 이명박정부의 정책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의 8.31대책과는 전혀 다른 기초를 띠고 있다. 참여정부의 8.31대책이 집값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세금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자율화,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시장논리를 적용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2008년 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 글로벌 금융불안,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불안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와 물가상승 우려 및 내수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상반기에는 기존의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수요관리 대책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우려한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관리 등 수요위축요인이 더욱 부각되었다.

〈표 2-5〉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년도	대 책	주 요 내 용
2008년	3.20대책	▪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15년이상보유시 최대 45%→20년이상보유시 최대 80%
	5.17대책	▪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 한해 2009.6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6.11지방 미분양해소 대책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70% ▪ 취득, 등록세 분양가의 2.2%→1.1% ▪ 일시적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1년이내→2년이내 처분시
	6.30대책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신규분양단지 30%특별공급
	8.21부동산 대책	▪ 재건축 규제 완화 : 사업기간 단축(3년→1.6년)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 분양가 상한제 수정 ▪ 아파트 후분양제 변경 ▪ 신도시개발 2곳 지정: 인천검단신도시, 오산세교신도시 ▪ 건설경기 보완 ▪ 주택금융 확대
	9.1세제개편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거주요건 강화, 고가주택기준 조정: 6억원→9억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조정: 9~36% → 6~33%
	9.19 주택종합공급대책	▪ 그린벨트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공급 ▪ 사전예약제 도입 ▪ 지분형 임대아파트 도입
	9.23 종부세개편방안	▪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조정(6억원에서 9억원) ▪ 종부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방안	▪ 수도권내 지정목적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해제 ▪ 1가구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1년→2년)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금리 하향 안정화 등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 미분양주택 환매조 건부 매입,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등
	11.3경제 종합대책	▪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재건축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완화, 임대 의무비율폐지 ▪ 지방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 1가구1주택자 실수요목적 지방소재1주택취득시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 ▪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 백지화 ▪ 건설업체 지원 방안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주택공급확대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미분양 해소 지연으로 인한 신규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지역의 전면해제와 더불어 금융규제도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규제 중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었고, 수도권에 대한 엄격한 전매제한 규정도 크게 완화되었다. 명목상으로 분양가상한제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발 금융쇼크 여파로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의 수요억제방안이 규제완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발표되었다<표 2-6>.

8.21대책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후분양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신도시 건설, 지방미분양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1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19주택종합공급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로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공급, 사전예약제 도입, 지분형 임대아파트 도입 등이다. 9.23종부세개편방안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종부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21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수도권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 해제, 1가구 1주택자가 신규주택취득시 비과세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사보유 토지 매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완화, 1가구 1주택자 거주요건 현행 유지, 지방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중과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6〉 정책비교

참여정부	구분	이명박정부
2003.10.29대책:9억원초과주택에 첫도입 2005.8.31대책:6억원초과주택으로 확대, 가구별합산도입	종합 부동산세	9.1대책:9억원초과주택으로 과세대상축소, 서울인하,인별합산추진검토 11.13(현재판결):세대별합산부과 위헌, 1주택장기보유자과세 헌법불합치
2005.5.4대책 :1가구2주택자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5.8.31대책:1가구2주택자중과세 (50%)	양도 소득세	6.11대책:지방미분양주택 구입시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세완화 9.1대책;고가주택 양도세 과세기준 9억원초과로 축소 10.21대책:일시적1가구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2년으로 연장
2003.9.5대책:재건축 중소형 60%의무화 2003.10.29대책: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임대주택)도입 2006.3.30대책: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재건축 규제	8.21대책:조합원지위 양도허용, 후분양 폐지, 안전진단절차완화 11.3대책: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임대의무비율 폐지
2006.3.30대책: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DTI) 40%규제 2006.11.15대책: DTI 적용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2007.1.11대책:투기지역 대출1인1건	주택담보 대출규제	6.11대책:지방미분양주택담보비율 70%로 상향조정 10.21대책:투기지역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2년으로 연장, 수도권 투기지 역(총부채상환비율적용) 해제추진
2003.5.23대책:분양권 전매금지 투기 과열지구 수도권전역,충청권일부 확대 2003.10.29대책:지방광역시로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10.21대책: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추진 11.3대책:서울강남3구 제외한 투기과열 지구 해제

주: 한겨레 2008.10.23 자료

III.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반응¹⁶⁾

1. 부동산정책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변수를 대리변수(proxy)가 아닌 부동산정책에 더미(dummy)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부동산정책지수(REI)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부동산정책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여 더미를 부여하였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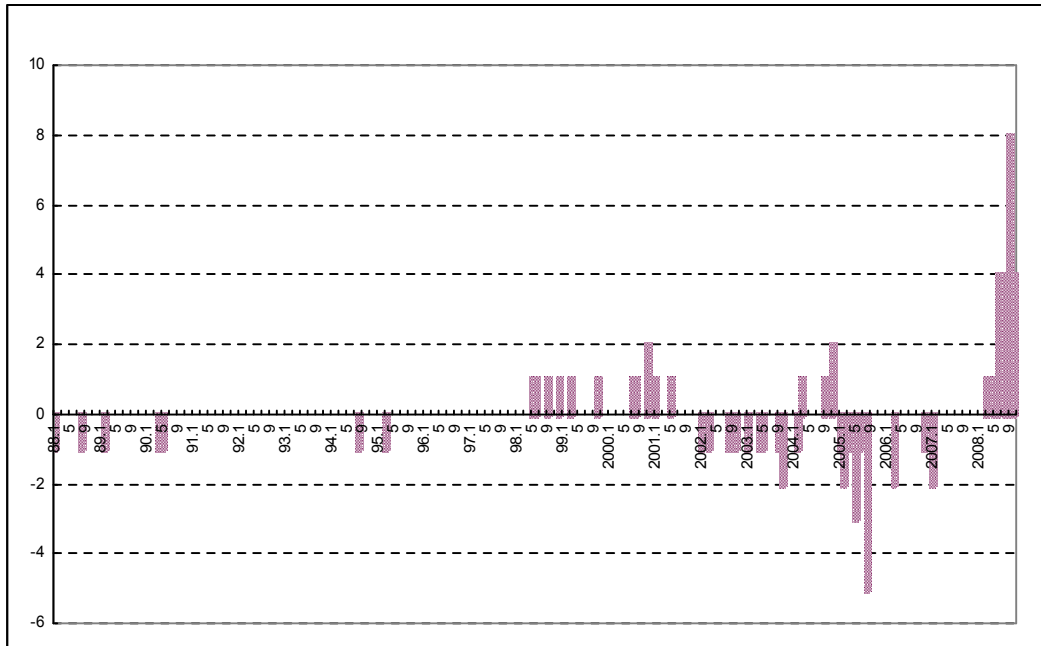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06년 11.15대책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시행은 수요억제정책 ‘-1’을 부여하고, 2008년 5.17대책의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를 통한 수요확대정책이므로 ‘+1’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더미를 월별로 부여하여 정리하면 <그림 1>의 그래프 형태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참여정부 출범시기인 2003년도 들어서 억제정책 위주로 진행되었고 2008년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수요촉진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더미를 이용하여 1988년 1월, 기준 월에 100을 부여하여 개발한 부동산정책지수는 <그림 2>에 부동산시장변수와 함께 그래프에서 보여준다.

16) 본 연구는 정재호,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 반응’ 부동산학보 29집, 한국부동산학회, 2007, pp. 99~110.를 바탕으로 최근 2008년10월까지 데이터를 연장한 것이다.

17) Chung, Jae and Shawn Ni, ‘An Empirical Analysis on Government Capital Controls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Korea’, Applied Economics Letters, Routledge, 2002, 참고

〈그림 3-1〉 부동산정책 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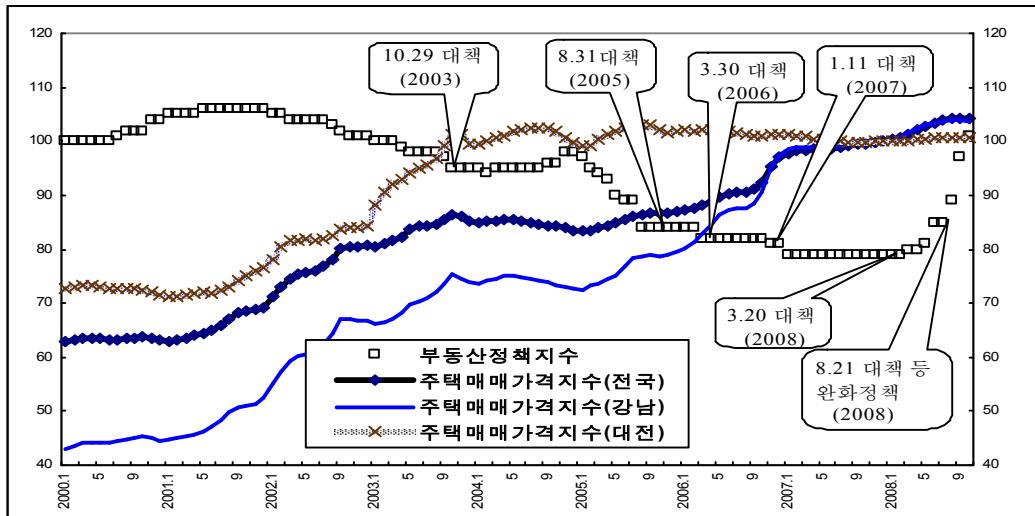


2.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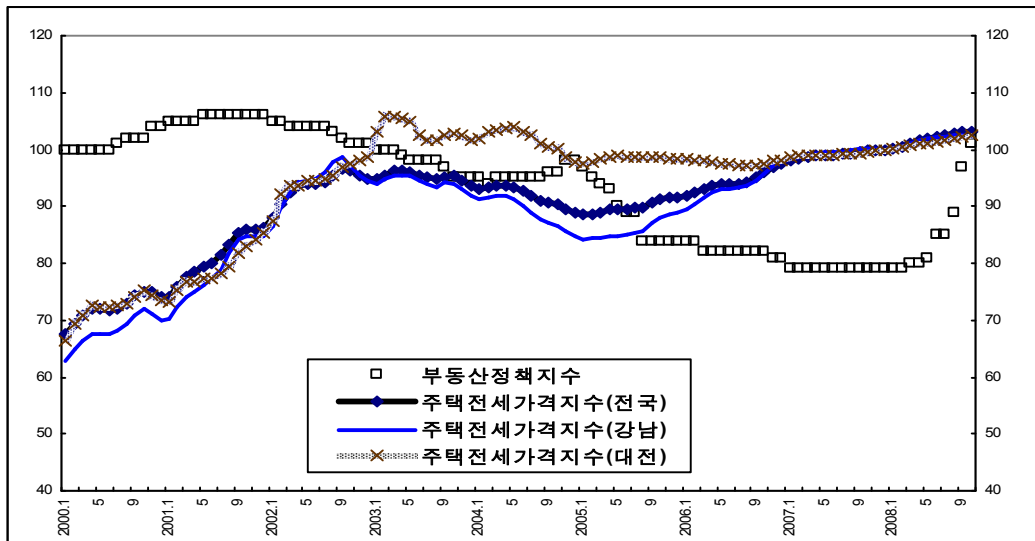
1988년 1월~2008년 10월 기간의 월별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이전(1988.1~2002.12)과 참여정부이후(2003.1~2008.10)로 나누고,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매매시장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이 지역별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서울강남(이하 강남), 대전지역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택시장 변수인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국민은행 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지매매가격은 토지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토지매매가격지수는 2004년까지 분기별 데이터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 월별데이터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STATA의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장하였다.

<그림 3-2>는 부동산정책지수와 전국, 강남, 대전의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함께 그려 놓았으며, <그림 3-3>은 부동산정책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를 <그림 3-4>는 부동산정책지수와 토지매매가격지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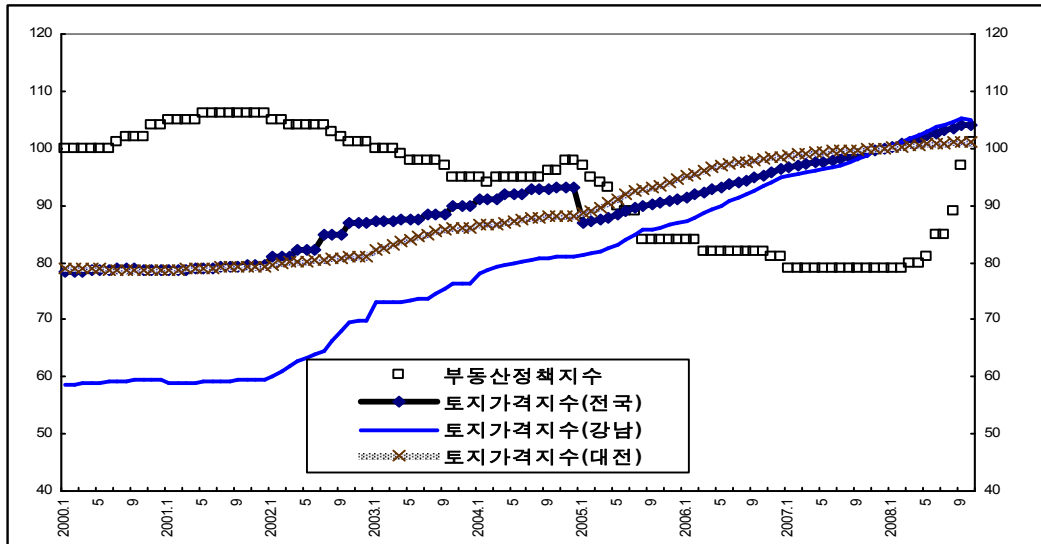
〈그림 3-2〉 부동산정책지수와 주택매매 가격지수



〈그림 3-3〉 부동산정책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그림 3-4〉 부동산정책지수와 토지매매가격지수



IV.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실증분석 (충격반응분석)

1. 모형설정

1) 단위근 검정

분석대상 자료인 시계열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 Fuller)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였다.

〈표 4-1〉 ADF 단위근 검정

변수	수준변수	로그(log) 변환 변수	로그(log) 변환1차 차분변수
부동산정책	-2.8670**	-2.9657**	-2.6010*
전국주택매매	-0.5776	-1.0314	-3.9097***
강남주택매매	1.0886	-0.5947	-4.3303***
대전주택매매	-0.7593	-1.0052	-8.9630***
전국주택전세	-0.9471	-1.4479	-4.5141***
강남주택전세	-1.1792	-1.5671	-4.5241***
대전주택전세	-1.0235	-1.7141	-6.855***
전국토지매매	-2.8302*	-3.4797**	-4.5491***
강남토지매매	-1.4884	-1.3300	-3.7040**
대전토지매매	-3.0448**	-3.2857**	-2.8553*

주: ADF검정의 유의수준: * 10%, ** 5%, *** 1%

<표 4-1>은 각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를 보여주며, 로그 1차 차분변수들 가운데 10% 유의수준인 부동산정책지수와 대전토지매매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가 1% 유의수준 하에서 단위근을 갖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모든 시계열이 안정되어 있는 로그 1차 차분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충격반응분석

충격반응분석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한 변수에 영향을 파급시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충격반응함수는 특정한 변수에 1표준편차의 충격을 줌으로써 다른 변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부동산정책지수,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토지매매가격 등 4가지 변수를 가지고 VAR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정책변수에 충격이 왔을 때 다른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도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p차항 VAR(p) 모형은 아래와 같다.

$$\Delta X_t = A_0 + \sum_{i=1}^p A_i \Delta X_{t-i} + \varepsilon_t \quad (1)$$

여기에서 X_t 는 부동산정책,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토지매매가격 등으로 구성된 $n \times 1$ 벡터이고 Δ 는 차분된 변수를 나타낸다. A_0 는 상수항 벡터이고 A_i 는 $n \times n$ 행렬이고 ε_t 는 $n \times 1$ 오차항 벡터이다. 본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4 변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Delta X: \Delta REP, \Delta HP, \Delta RP, \Delta LP$$

단, ΔREP 는 로그 1차차분 부동산정책변수, ΔHP 는 로그 1차차분 주택매매가격변수, ΔRP 는 로그 1차차분 주택전세가격변수, ΔLP 는 로그 1차차분 토지매매가격변수이다.

또한 4변수 VAR 모형의 시차수는 Schwartz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정보기준에 의해 2개월 시차를 설정하였다. VAR 모형의 변수 순서는 외부로부터 정해지는 독립성이 제일 강한 부동산정책변수인 ΔREP 를 제일 앞에 두고, 다음으로 주택시장변수인 ΔHP , ΔRP 순서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ΔLP 인 토지매매가격을 설정하였다.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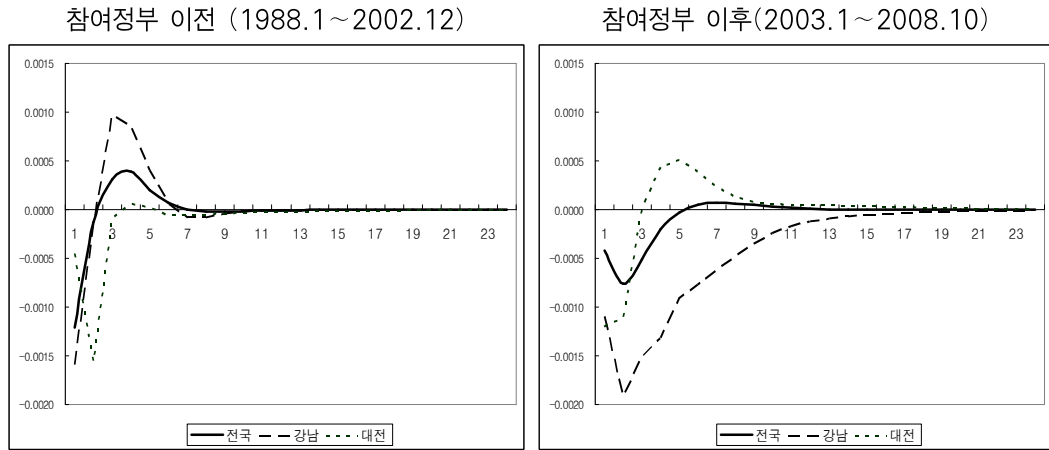
1) 부동산정책과 주택매매시장

<그림 4-1>의 왼쪽 그림은 VAR모형을 이용한 참여정부 이전인 1988.1~2002.12 기간 동안 부동산정책이 동태적으로 강남, 대전, 전국지역의 주택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충격반응함수에 의하면 서울강남과 전국의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 발표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후 3개월~4개월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후 효과가 줄어들고 7개월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미하나마 대전지역의 주택시장은 강남과 전국보다 1개월 늦게 반응을 하지만 곧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 12월까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매매시장의 반응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정책방향대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매매시장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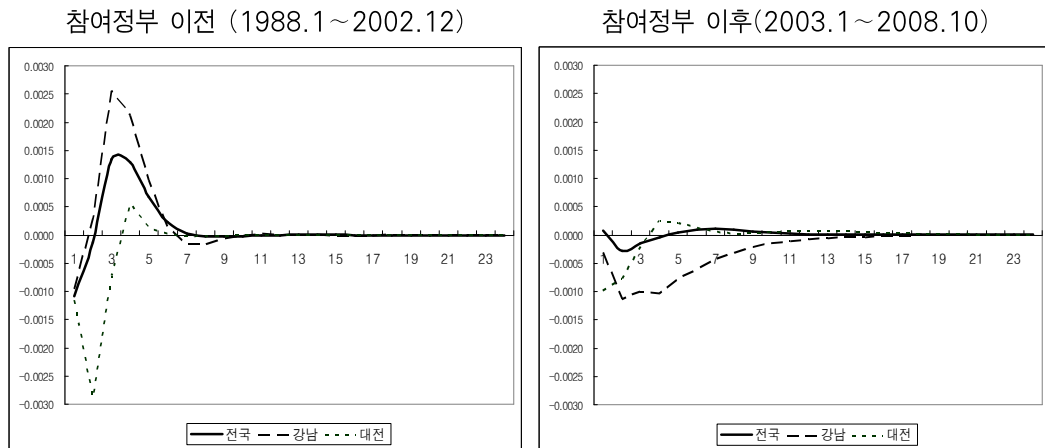


반면, 참여정부기간인 2003.1~2008.10의 정책에 대한 주택매매시장의 반응은 <그림 4-1>의 오른쪽 그림처럼 상당기간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주택매매시장은 2개월 이후에 정부정책에 아주 빠른 반응하여 9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있다. 전국은 4개월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대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강남은 상당기간 정책방향 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거의 12개월 이상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목표인 강남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당기간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인 대전지역은 부동산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부동산정책과 주택전세시장

<그림 4-2>의 왼쪽 그림은 참여정부 이전 주택전세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전세시장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다. 주택전세시장의 반응에 대한 기간이나 패턴은 주택매매시장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 기간에는 주택매매시장보다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림 3-4>에서 보았듯이 주택전세지수가 매매 지수에 비해 상승폭이 커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2〉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전세시장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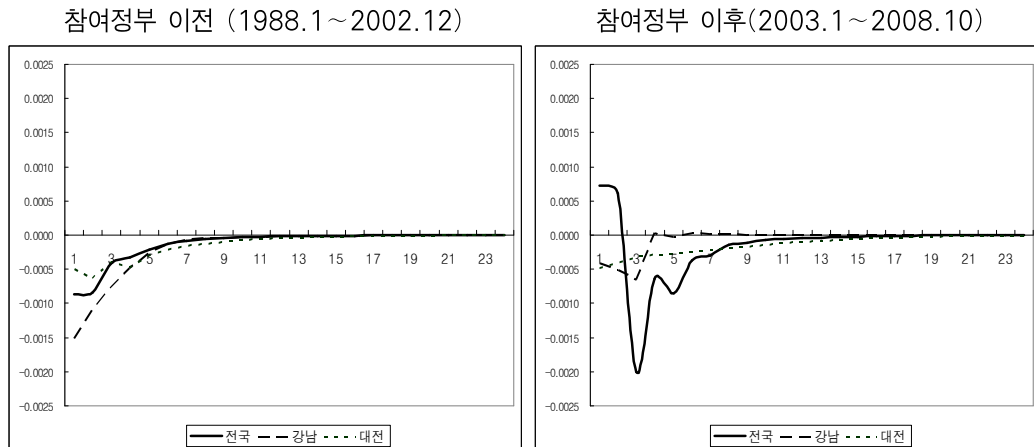
강남과 전국의 주택전세시장에 미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매매시장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그림 4-2>의 오른쪽 그림이 보이는 참여정부이후의 기간에는 반응의 정도가 주택매매시장보다 크게 적게 나타나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요동이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대전지역의 주택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부동산정책과 토지매매시장

<그림 4-3> 왼쪽에 있는 그림은 참여정부이전(1988.1~2002.12)의 토지매매시장의 반응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토지시장의 반응패턴은 강남, 대전, 전국이 유사한데, 초기에는 정책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며 점점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은 일정기간 이후 정책반향대로 움직이는 반면, 토지는 부동산 억제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토지보다는 주택 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있으며, 토지가격은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그림 4-3>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참여정부(2003.1~2008.10)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지 매매시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방향대로 반응하던 전국은 1개월 이후 반대로 움직이며 강남, 대전의 토지시장은 미약하게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 부동산정책에 대한 토지매매시장의 반응



V.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1. 참여정부

첫째, 국내외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2003년 10.29대책으로 2005년 초반까지 상승세 안정되었다가 2005년 4.0%, 2006년 11.6% 상승률 나타나는 등 불안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15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하였다. 2007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왔지만 참여정부기간 중 주택가격 상승 폭이 높아 가격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되어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수요억제정책이 해당지역보다는 오히려 지방부동산시장에 작용하여 지역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다. 본 연구의 충격반응 분석에 의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참여정부 이후에는 서울강남은 반대로 반응하는 반면, 대전은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말 대비 2006년 말 서울강남 대형 아파트는 45~50%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9%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표 5-1>.

〈표 5-1〉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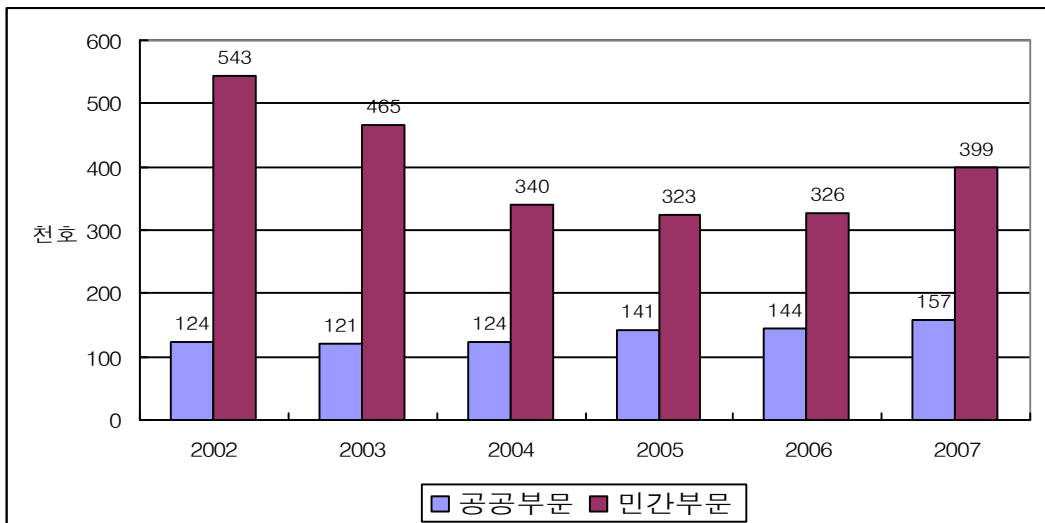
지역별	서울 강남	서울전체	수도권	서울강북	광역시
	45.0	33.2	31.9	20.5	8.9
유형별	아파트	연립	단독		
	31.2	11.2	3.3		
규모별	대형	중형	소형		
	51.4	31.9	24.3		

주: 2002년말 대비 2006년 말 상승률(%), 권주안, '참여정부 주택정책 평가 및 문제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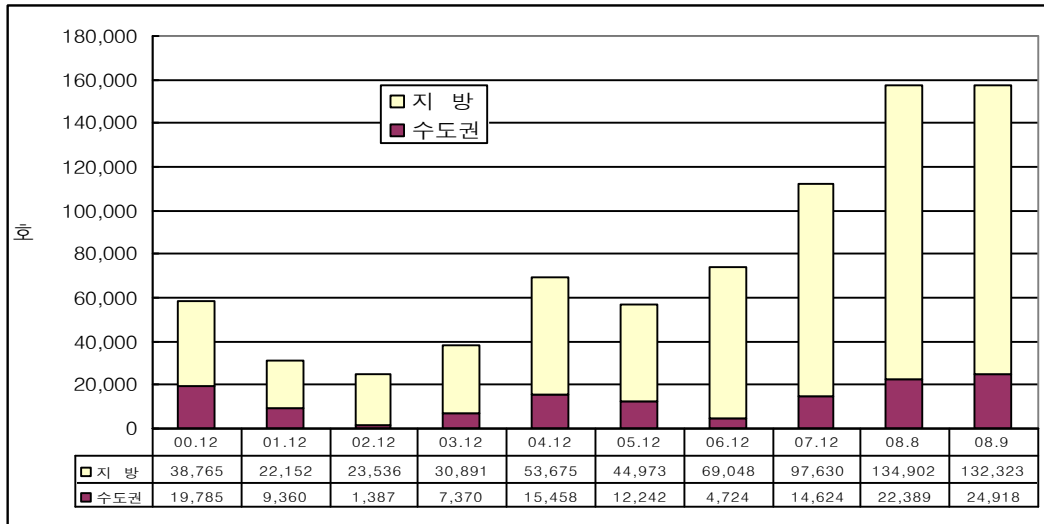
셋째,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환수, 후분양제추진 등 시장개혁과제와 국가균형발전추진에는 긍정적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저항과 국가균형발전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토지보상액이 시중 유동성확대와 수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넷째,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하였으며 민간부분의 감소폭이 커졌다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민간부분 확대로 미분양아파트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13.8만 가구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6.1만호이다.

〈그림 5-1〉 공공과 민간부문 주택건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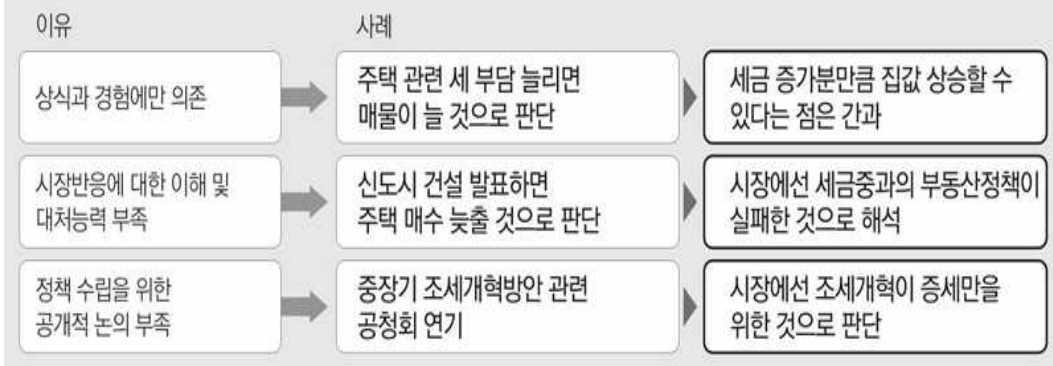
〈그림 5-2〉 미분양 아파트 추이



다섯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이유를 펠프스 이론¹⁸⁾에 입각한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간과하고 수요억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세금을 증과하면 시장에 팔려고 나온 주택이 많을 것이니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갔다.

18) 한국금융연구원, '펠프스의 연구성과가 경제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2006.10.
동아경제(뉴스) 2006.10.24자 보도자료 참고

경제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이유



주: 동아경제(뉴스) 2006.10.24자 보도자료

2. 이명박 정부의 평가

첫째, 참여정부의 수요억제에 반하는 시장지상주의를 지향하는 현 이명박정부는 무분별하게 기존 제도를 완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불안 여파가 만약 국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져 국내 금융위기로 전위된다면 국내 경기 침체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부양책의 일환이다. 결국 GDP의 15%정도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활성화로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집중하고 있으며, 서민복지나 중소기업 지원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간, 소득 계층간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기능에 대한 철저한 반대적인 사고에 입각하는 경향이 있다.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로 고가의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과 부유층을 위한다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뉴타운과 재건축위주의 공급지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공급과잉과 한편으로 참여정부의 수요규제를 완화하는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 부동산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분석에 의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10번 정도의 부동산완화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니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가져온다. 정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틀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향후 과제

첫째, 중장기적 부동산정책정립이 필요하다. 극단적이고 조급한 시장지향주의적 부동산 규제완화는 향후 경기회복기에 부동산가격급증을 야기하고 이를 막기 위한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IMF외환위기 극복이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험이 얘기해준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명화, 보유세강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무용성논리로 폐지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규제 장치는 향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규제 정책을 무조건 완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제도는 유지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가격의 점진적 하락 즉 연착륙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주식과 펀드에서 자산가치하락이 따르는 시점에 부동산가격 하락도 동일한 투자자산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과도한 건설투자나 건설업 지원보다는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정책 수립 시에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규제완화는 지방경기와 부동산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많은 부동산정책들이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가격 급상을 막기 위해 나왔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됨에 따라 서울 특히 강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지방의 주택시장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주택시장이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I. 결 론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참여정부와 현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참여정부이전(1988.1~2002.12)과 참여정부이후(2003.1~2008.10)로, 서울강남, 대전, 전국지역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였다.

참여정부이전 기간 동안 주택매매와 전세시장은 2~3개월 이후에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토지매매시장은 초기에는 정책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며 점점 효과가 작아졌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서울강남이 대전 보다 부동산정책에 순응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정부이후에는 주택시장의 반응은 강하게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서울강남과 전국은 가격이 오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다만 대전은 2개월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강남과 전국지역에 부동산억제정책이 부동산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이것은, 일관적인 부동산억제정책이 강남보다는 대전 부동산시장이 침체요인이 되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시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부터 미국 주택가격의 급락으로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위축과 더불어 가격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참여정부의 부동산규제제도를 거의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원칙 하에서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규제를 거의 완화하는 극단적인 정책은 향후 부작용을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해소를 위해 부동산정책 적용을 지역별, 소득별로 차별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변수를 대리변수가 아닌 정책자체를 지수화한 변수를 사용하여 충격 반응함수를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서울강남과 대전 및 전국지역 구분과 정책수체에 따른 기간구분에 의한 분석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정책변수의 정책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여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반응은 짧은 기간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권주안, ‘참여정부 주택정책 평가 및 문제점’, 2008.

김수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김종호, ‘주택정책이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동아경제(뉴스) 보도자료, 2006.10.24.

두성규·박용석 ‘주택·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변창흠,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 2008.

이종권,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시장 전망’,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정재호,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 반응’, 부동산학보 29집 , 한국부동산학회, 2007.

한겨레 보도자료, 2008.10.23

한국금융연구원, ‘펠프스의 연구성과가 경제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2006.

<외국문헌>

Chung, Jae and Shawn Ni, ‘An Empirical Analysis on Government Capital Controls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Korea’, Applied Economics Letters, Boutledge, 2002.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조복현
(한밭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333
2.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활동	334
3. 미국의 금융위기와 위기의 세계화 : 자본시장 발전의 자기붕괴	341
4.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347

표 목 차

<표 1> 주요국의 금융시장 변화	335
<표 2> 미국 뮤추얼 펀드의 총자산 몫	338
<표 3> 모기지 발행액과 모기지의 증권화	343
<표 4> 종류별 모기지 발행 및 증권화	344

그림 목 차

<그림 1> 미국의 증권화 자산규모 변화추이	336
<그림 2> 유럽의 증권화 자산규모 추이	337
<그림 3> 선진국의 국제 자산구성의 변화 (자산과 부채의 합계/GDP합계).....	339
<그림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 및 투자 구조.....	342

1. 머리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시작으로 전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전 세계 다수의 금융기관 파산,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 옴

이 금융위기는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가장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갖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위기의 핵심이 은행의 대출채권 부실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수익증권 부실에 있다는 점, 위기가 일국 또는 소수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금융위기는 자본시장 발달과 금융세계화를 기초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내재적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시장근본주의와 금융지배, 금융세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질서로서, 실제 운용메커니즘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시장 발달과 자본시장에 의한 경제활동의 지배와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 경제 전체에 초래하게 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으나,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전개는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 그 자체로서 내재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음

- * 이 글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 분석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함. 기존의 이론은 정보비대칭성만을 문제로 제기했으나, 여기서는 금융거래의 이시기적(inter-temporal)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변화의 불확실성을 강조함. 정보비대칭성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낳는다면, 불확실성은 유동성 추구라는 금융의 행태를 낳음. 그동안 도덕적 해이는 비난의 대상이었으나, 유동성 추구는 새로운 금융혁신으로 칭송의 대상이었음. 그러나 여기서는 유동성 추구가 금융의 단기화와 투기화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경기침체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케인스 이래 널리 받아들여져 왔음.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는 경기부양의 효과 또는 재정정책인가 통화정책인가의 정책 수단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왔음. 그러나 여기서는 정책의 내용이 정책의 총체적 효과는 물론 정책의 계층간 효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함. 이러한 정책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논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론적 논의가 없는 듯 함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가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내재적 결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내재적 결함의 전개가 어떻게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그리고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활동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시장근본주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활동, 금융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발전시켰음. 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국내적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유로시장의 발전과 함께 진행된 자본자유화로 인해 발전된 금융세계화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개입과 관리를 부정하고, 시장주도와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발전하는 부문은 금융부문 중에서도 특히 자본시장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임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세계화는 금융활동의 유동성과 수익성 추구라는 금융의 본성을 더욱 강화시켰음.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투자 기회와 투자수익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금융거래에 과잉팽창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1) 자본시장의 발전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자본시장의 규제완화와 금융혁신, 기관투자자의 발전은 금융부문에서의 세 가지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 i) 은행의 대한 자본시장의 상대적 발달 즉,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활동 전개, ii) 대출과 채권의 증권화, iii)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 등이 그것임

(1) 금융활동의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

○ 주식시장의 발전 : 주요 선진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무려 10.6배나 증가했음

○ 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의 금융활동 이동 : 1981년부터 2001년간 예금은행의 예금과 주식가치 증가를 GDP대비로 비교해 보면,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 은행 중심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예금에 비해 주식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주요국의 금융시장 변화

(단위 : %)

구분		1981	1991	2001
미국	은행예금/GDP	64.2	67.4	67.0
	주식가치/GDP	46.3	60.1	166.9
영국	은행예금/GDP	29.6	87.6	105.7
	주식가치/GDP	38.3	89.0	166.9
독일	은행예금/GDP	55.6	53.7	91.2
	주식가치/GDP	20.0	20.7	62.0
일본	은행예금/GDP	136.0	177.4	212.2
	주식가치/GDP	33.9	87.8	66.8

자료: World Bank, "A New Database on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updated 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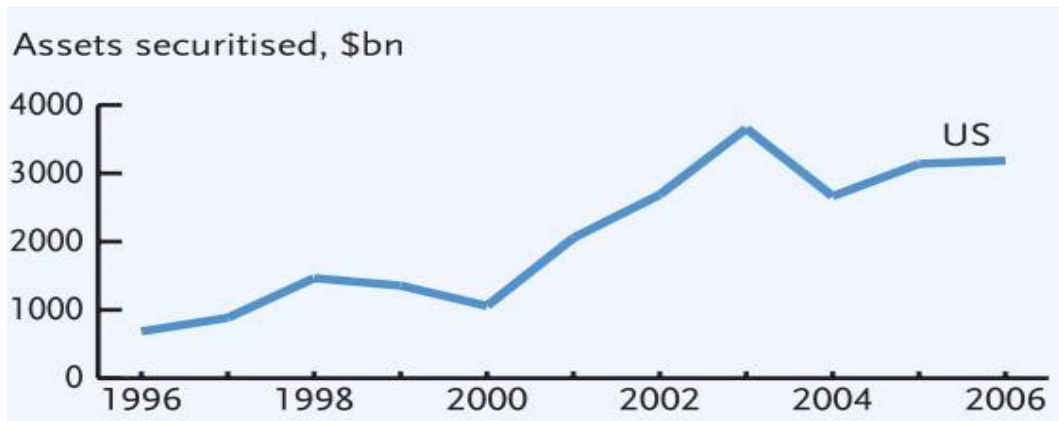
- 이러한 주식시장의 발달과 금융거래의 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은 자본 시장에서의 거래상품과 거래당사자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음. 거래상품의 발전은 주식과 채권의 유통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금융상품들을 발전시켰는데 한편으로는 유동화 증권이 그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물과 옵션이 그것임. 또한 거래당사자의 발전은 개인의 직접투자에서 기관투자자와 같은 자산운용업자에 의한 간접투자가 크게 발달하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급성장하면서 그들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도 크게 증대되었음

(2) 증권화 : 채권채무관계의 시장상품화

- 198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발전은 대차관계와 같은 금융거래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유동화시키는 증권화를 크게 증대시켰음. 이 증권화(MBS와 ABS의 발행액 기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음

〈그림 1〉 미국의 증권화 자산규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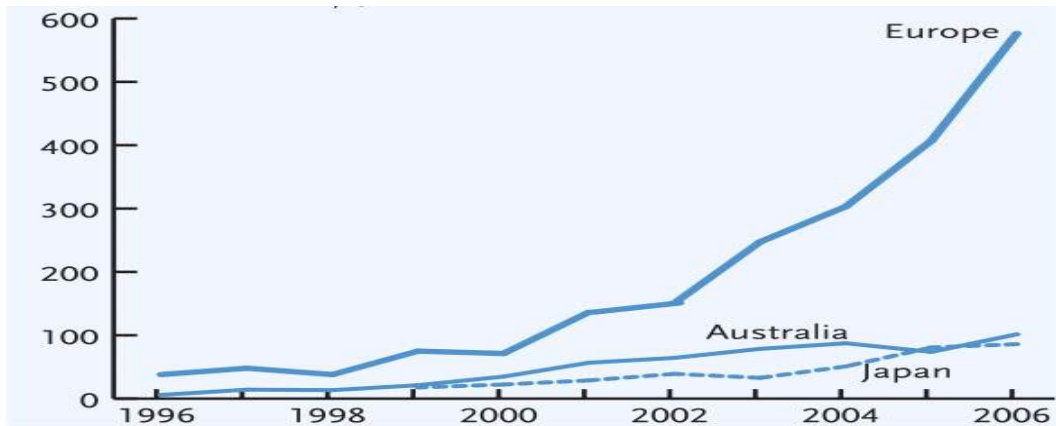
(단위 : 910억 달러)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London (2007)

〈그림 2〉 유럽의 증권화 자산규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London (2007)

- 증권화는 비시장거래 채무를 시장거래 증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자본시장 채무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자본시장의 거래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짐

(3) 기관투자자의 발달

- 또한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큰 변화는 개인들을 대신해 기관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주요 거래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OECD 전체국가의 기관투자자의 자산규모는 1980년-2000년간 3.2조 달러에서 36.6조 달러로 11.4배나 증가하였음
- 이들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행태를 보면, 1995년과 2005년의 10년 사이에 대출이나 예금을 줄인 대신 주식운용을 늘려나가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회사, 연금, 뮤추얼펀드 모두 그동안 주식의 운용을 크게 늘린 대신 대출과 채권운용은 크게 줄었음

〈표 2〉 미국 뮤추얼 펀드의 총자산 뮈

(단위 : %)

년도	주식	국채	회사채	지방채	유동자산	기타
1990	38.2	22.6	8.0	20.7	8.5	2.0
1995	59.0	12.6	9.3	11.9	6.9	0.3
2000	76.4	6.0	6.8	5.3	5.4	0.1
2005	73.6	8.9	8.0	4.8	4.4	0.2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08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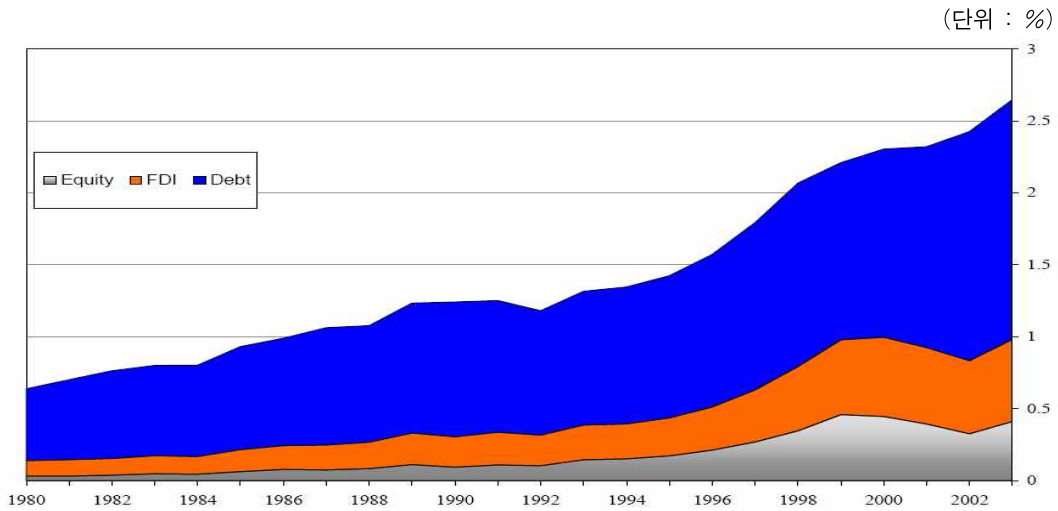
- 기관투자자의 증대와 이들의 투자패턴의 변화는 최근에는 다시 유동화증권으로의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이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유동성과 수익성을 더 크게 추구하기 때문임. 개인투자자에 비해 이들은 보다 빠르고 큰 수익을 원하는데 이것은 기관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서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임

2) 금융세계화

한편,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본통제 규제를 해제하고 국경간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IMF 2005)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왔음. 선진국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금융세계화를 보면 대외자산과 부채의 절대액 규모가 1980년대 이후 큰 증가를 보였음

지난 20년간의 자본이동의 내용을 각 자산의 구성 변화로 보면 포트폴리오 주식자산이 GDP 대비 비율로 6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가장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였음. 다음은 해외직접 투자로 GDP 대비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에 3배정도 증가했으며,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2.5배 정도로 증가했음

〈그림 3〉 선진국의 국제 자산구성의 변화 (자산과 부채의 합계/GDP합계)



자료 : Lane and Milesi-Ferretti (2005)

3) 자본시장 발전 및 금융세계화와 금융적 취약성의 증대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세계화의 심화는 금융부문 발전의 내용과 그것의 경제적 의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음. 금융활동의 본성인 유동성과 수익성 증대는 물론*, 금융활동에 대한 정부개입과 감독을 제거하거나 시장친화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었음**. 이와 같은 유동성과 수익성 추구는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회피와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정부개입이나 감독 없이 시장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러한 금융발전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금융활동의 과잉팽창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해 결국 금융취약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만들

*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세계화는 금융활동에 있어서 유동성과 수익성 추구라는 금융의 본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했음. 금융활동은 잘 알려져 있는 정보비대칭성이라는 특성 외에도 미래상환의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음. 이 불확실성은 금융거래가 본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시관 경과 속에서 약정되고 청산된다는 특성으로부터 나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권자 또는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강화시킬 수단과 기법을 발전시키도록 만드는데, 자본시장에서의 2차시장 제도 발전이나 대출채권의 유동화 기법은 바로 이러한 유동성 추구의 결과임.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유동성 큰 주식이나 증권화 상품 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이러한 유동화 추구의 결과임

**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세계화는 금융활동에 있어서 정부개입과 감독을 제거하고 대신 금융활동에서의 자유와 시장자율을 강조하게 함. 1980년대 이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부문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했었음. 대내적으로 주식발행과 유통을 억제하는 자본시장 발전 억압정책, 신용배분에 대한 국가개입 정책,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정책을 취했었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 그리고 금융혁신은 이러한 국가개입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켰음

왜냐하면, 금융거래는 본질적으로 금융약정이 종결될 때까지는 비유동적인 것이며, 따라서 위험도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임. 자본시장의 발전은 이러한 비유동성과 위험의 거래를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유동화와 위험 감소를 통해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또 위험을 더 증가시키게 됨. 즉, 자본시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팽창은 사회 전체적인 금융거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비유동적이고 위험이 큰 금융거래마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전체적인 비유동성과 위험의 증가는 결국 금융자산 축적을 취약하게 만들. 금융자산의 거래는 이제 더 큰 상환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전체적인 금융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임. 결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세계화는 그 스스로 금융취약성이라는 한계에 부딪치는 내재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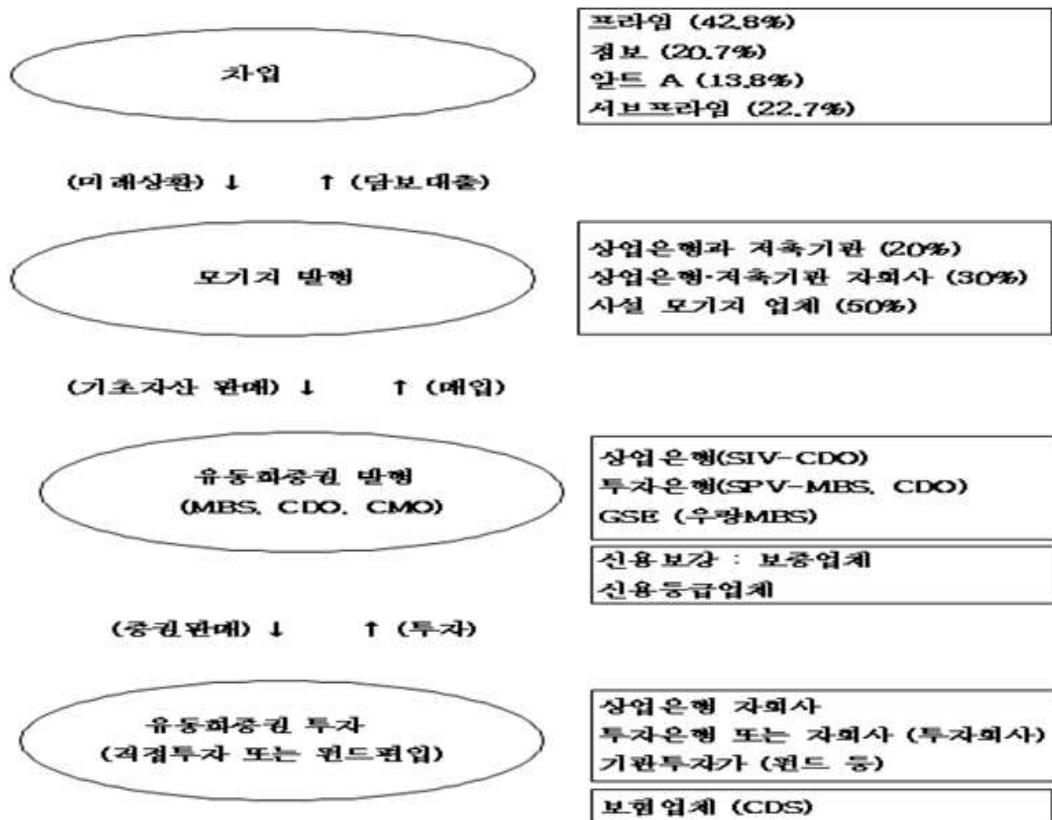
3. 미국의 금융위기와 위기의 세계화 : 자본시장 발전의 자기붕괴

(1) 금융위기의 전개

-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모기지 업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형성과 붕괴,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증권화한 주택저당증권(MBS)과 담보부채증권(CDO)에 투자했던 펀드의 손실과 펀드 운용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파산, 펀드에 투자했던 각 금융기관과 개인의 손실, 금융시장의 기능마비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지급보증 및 자본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모기지업체의 1, 2인 컨트리와이드와 뉴센트리파이낸셜의 파산, 투자은행 3, 4, 5위 업체인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틴스의 파산 또는 매각, 보험업계 1위인 AIG의 매각 등과 같은 금융기관 파산 또는 매각 사태를 겪음. 이외에도 시티그룹은 407억\$, Bank of America의 149억\$ 손실과 같은 대규모의 금융기관 손실을 겪음
-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손실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영국의 노던 록, 독일의 한 지방은행(Sachsen Landesbank)의 파산을 초래했고,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었음(HBS 380억\$, HSBC 156억\$, RBC 120억\$, 도이취뱅크 75억\$ 등)

- 각국의 금융기관 파산 또는 손실은 금융시장 전체의 마비를 불러일으킴. 금융시장의 마비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급락, 신용시장에서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리 상승 또는 차입곤란 등의 형태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주가는 다우지수가 2007년 10월 14,094이던 것이 최근 (2008년 10월 10일) 7,882까지 하락하기도 함. 기업어음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도 매우 어려워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해주는 사태까지 발생함. 또한 미국 연방은행은 연방기금금리를 2006년 6월의 5.25%에서 2008. 10월 1%로 무려 4.25% 포인트나 내림.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는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통화 및 투자 구조



자료 : 필자 직접 작성

(2) 금융위기의 원인 : 자본시장의 자기붕괴

-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의 금융위기들과는 달리 단순히 금융기관 (모기지 업체 등*)의 대출채권 부실화의 증가에 있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자산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이 증권의 펀드편입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발행은 모기지업체(50%),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회사(30%), 은행과 저축은행(20%)들에 의해 이루어짐. 특히 모기지업체는 사실 대형 투자은행의 자회사인 경우도 많음.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텐스는 모기지업체를 다수 인수하여 모기지업에 진출했는데 이는 유동화증권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증권화는 2001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발행액의 50.4%에서 2006년에는 80.5%에 달하게 됨

〈표 3〉 모기지 발행액과 모기지의 증권화

(단위 : 10억 달러, %)

년도	총모기지발행	서브프라임 발행액	서브프라임 발행액 비중	서브프라임 MBS 발행액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화율
2001	2,215	190	8.6	95	50.4
2002	2,885	231	8.0	121	52.7
2003	3,945	335	8.5	202	60.5
2004	2,920	540	18.5	401	74.3
2005	3,120	625	20.0	507	81.2
2006	2,980	600	20.1	483	80.5

자료: Inside Mortgage Finance, Mortgage Market Statistical Annual (Joint Economic Committee, October 2007에서 인용)

-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증권화와 이 증권의 펀드 편입은 최근 투자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더욱 더 공격적인 양태를 띠게 됨. MBS는 처음에는 패니매와 프레드리매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금융업체(GSE)에 의해 주로 발행되었는데, 최근에는 대형 투자은행들에 의해 발행이 증대됨. MBS의 발행이 2001년에는 GSE에 의해 81.9%, 월가 투자은행에 의해 18.1%이던 것이 2006년에는 GSE가 46.7%, 투자은행이 53.3%로 증가함. 또한 월가에서 발행한 MBS 중 서브프라임 MBS와 Alt-A MBS는 2006년 71%에 달함

〈표 4〉 종류별 모기지 발행 및 증권화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서브프라임			Alt-A			점보			에이전시(GSEs)		
	대출	증권	증권 화율	대출	증권	증권 화율	대출	증권	증권 화율	대출	증권	증권 화율
01	190	87.1	46	60	11.4	19	430	142.2	33	1,433	1087	76
02	231	122.7	53	68	53.5	79	576	171.5	30	1,898	1442	76
03	335	195.0	58	85	74.1	87	655	237.5	36	2690	2130	79
04	540	362.6	67	200	158.6	79	515	233.4	45	1345	1018	76
05	625	465.0	74	380	332.3	87	570	280.7	49	1180	964	82
06	600	448.6	75	400	365.7	91	480	219.0	46	1040	904	87

자료 : Inside Mortgage Finance, The 2007 Mortgage Market Statistical Annual (Ascraft and Schuermann (2008)에서
재인용)

- 이러한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모두 기관투자자들임)들의 MBS 발행과 이들의 펀드 편입을 통한 수익증대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기초로 하는 것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발전은 모든 채권의 증권화와 증권의 포트폴리오 구성(펀드구성)을 통한 유동성의 증대와 수익성의 증대를 향한 것이었음

- 본래 유동화증권(MBS, CDO)이나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물활동과 관련을 갖는 채권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채권채무 증서임. 채권채무증서는 기본적으로 비유동적임. 왜냐하면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약정기간 동안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모든 채무증서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이러한 비유동성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함.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곧 금융의 증권화,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발임. 주택저당증권(MBS)은 바로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형태임.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발은 다시 또 새로운 신용보증이나 신용보험파생상품과 같은 새로운 업무와 상품을 개발하게 함.* 이것을 금융가들은 금융혁신이라고 자찬함

* 비유동적인 자산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만기도 줄이고 위험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신용보증업체들이 개입하게 됨. 또 MBS나 CDO의 상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파생상품이 새롭게 출현하기도 함

- 그러나 비유동적인 자산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비유동적인 기초자산을 유동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더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이 유동화증권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만드는 것(펀드화)도 위험분산을 통해 개별적인 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못함
- 만약 기초자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게 되면, 오히려 유동화증권과 이 유동화증권의 펀드편입은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게 됨. 기초자산의 부실화는 곧바로 유동화증권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만들고, 또 이 유동화증권의 부실화는 다시 이를 편입한 펀드를 부실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임. 최근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기초자산의 부실이 유동화증권과 펀드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대된 것임

-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기관투자자들의 발달과 함께,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과 수익성 추구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달이 과도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발행을 낳게 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과 붕괴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결국은 자본시장의 자산유동화 증권과 펀드의 부실을 초래해 기관투자자들과 투자은행의 파산을 낳게 한 것임. (이번 금융위기에서 상업은행들도 함께 큰 손실을 겪은 것은 상업은행들이 모기지사업과 유동화증권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임. 즉, 상업은행들이 자본시장 업무에 진출하면서 얻게 된 손실인 것임)

(3) 미국 금융위기의 세계화

- 1980년대의 금융세계화는 각국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을 세계무대로 향하게 함.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모든 투자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자본시장에 서로 투자하게 됨
- 이러한 금융세계화 속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바로 세계적인 성격을 띠게 됨. 미국의 자산유동화 증권이나 펀드에 투자했던 각국의 투자기관들은 일차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앞에서 보았던 영국이나 독일의 금융기관 파산이나 여러 유럽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손실은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임
- 또한 미국 투자자들의 전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는 또 다시 투자대상국의 자본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즉 미국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각국의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서의 외국 투자자들의 주식매도는 쉽게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침. 또 그에 따라 환율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하락과 환율급등은 바로 이러한 간접효과의 결과임
- 더욱이 이러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요동과 신용경색은 대외개방이 크고 해외차입이 큰 나라의 대외채무상환 스케줄을 곤란하게 만들. 정상적인 외화차입의 만기갹신 거부와 추가 차입의 곤란은 결국 그 나라의 외화유동성 부족과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됨. 최근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파키스탄 등이 외환위기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세계화의 결과임

4.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1) 세계 금융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주가는 극심한 변동 속에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요동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외화 유동성과 원화 유동성 모두에서 상환과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기능의 부진은 물론 금융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극심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큼

(2) 우리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 최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혼란과 위협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건설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기준금리의 파격적 인하 등과 같은 긴급 금융대책을 내놓았으며, 또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 및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음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외적으로 외화채무 상환 곤란을 겪고, 대내적으로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을 겪어 우리나라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 금융대책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 재정정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금융 취약성의 원인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 이상의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가능성마저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히 위험관리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및 의존을 심화시켜온 결과 더욱 심각하게 된 것임. 즉,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은 세계 자본시장의 무모한 발전과 금융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자본시장 발전 정책과 무분별한 대외 개방이 초래한 결과임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결국은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임. 물론, 당장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의 긴급 금융대책이 일부 불가피하며,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정책도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도 해외의 금융위기 전개 상황에 따라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음. 더욱이 개인채무 증가를 부추겨 금융취약성을 더 강화시키게 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나 투기적 거래만을 부추길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음
- 경기부양 정책도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보전해 줄 세제개편이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정책만 추진된다면 정책효과는 감소되고 오히려 경기부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3) 장기대책: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 단기적인 사후 대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대내 금융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대외 외환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 활동도 이러한 생산활동을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금융활동의 생산적 기능 충실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시장근본주의에 기초하면 안됨. 왜냐하면 생산과 금융활동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내재하는 바, 시장기능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음. 오히려 잘 조직된 경제질서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를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들

- 금융위기를 막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울 구체적인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첫째, 금융시스템이 자본 시장 중심에서 은행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둘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발행시장 기능은 발전시키되, 주식시장의 2차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발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가해야 함. 그 제약이란, 자본이득세, 거래세 등의 세제를 통한 2차 시장 거래의 완화 외에도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파생금융상품과 유동화증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강화 등을 의미하며, 셋째 은행의 경우도 대출의 단기화와 부동산 주식투자자와 같은 재산권 투자에 대한 지나친 대출(이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의 거품과 붕괴를 낳게 함)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즉,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운용건전성 감독’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현재는 자본건전성 규제만 행해지고 있음)



지역경제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운영현황 및 성과 |

1. 연구회 개요

지역경제연구회는 1999년 대전·충남지역의 산업·경제관련 학계와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초 구성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충남지역 혁신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전문가, 충남지역혁신협의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남발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경제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재결성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 년에 약 6차례씩 지역경제현안을 중심으로 연구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과 2006년 7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전문가연구회(Colloquium)로 선정되어 운영되기도 했다.

2005년 이후 2008년 12월 현재까지 총 16회의 자체 세미나 및 연구논의를 통해 26개 연구주제를 발표하여 지역의 경제현황 및 향후 지역경제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여 지역경제연구회는 대전충남 지역 내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간연구회라 할 수가 있다.

2005년부터 지역경제연구회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물은 '지역경제연구 2005, 지역경제연구 2006, 지역경제연구 2007'에 수록되어 있다.

2. 지역경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연구회는 2008년 현재 학계 17명, 충남발전연구원 2명, 기업인 3명, 시민단체 1명, 한국은행 5명 등 총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1명, 이사 3명의 회장단 아래 자율적으로 세미나 계획이 추진되어 개최되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은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가 맡고 있으며,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 한국은행 안병권 팀장,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주 박사 등 3명의 회원이 이사로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경제연구회는 매년 격월로 6회 세미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표주제는 제한이 없으나 연구회 성격상 주로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된 주제 발표 및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연구회 개최에 있어, 장소 제공 및 개최 준비 등의 실무는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와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담당하여 효율적인 진행을 맡고 있다.

3. 지역경제연구회 회원 명단

성명	소속	직위/학위	비고
엄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홍성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김흥기	한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학박사	이사
신동호	한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도시학박사	
강신성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영학박사	
박 경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회장
정재호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경제학박사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임상일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김범환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경제학박사	
강현수	충부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도시학박사	
김봉한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학박사	
박준병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단장/경영학박사	
구분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회장/공학박사	
백종태	CIJ(주)	대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도시학박사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	이사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경제부장	
송원철	아날로그칩스	대표이사	
박종찬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교수/경영학박사	
임주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송규성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오동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팀장	
안병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팀장	이사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과장	

4. 지역경제연구회 연구 성과

1) 2005년 연구 성과

구분	발표주제	발제자
1차 연구회 2005. 7. 14	· 제1주제 : 혁신클러스터의 캐즘발생과 극복	강영주(충남발전연구원)
	· 제2주제 :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대안	박 경(목원대학교)
2차 연구회 2005. 9. 15	· 제1주제 :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 제2주제 : 바이오 & 클러스터	구본탁(대덕밸리벤처연합회)
3차 연구회 2005. 11. 16	· 주제 : 대전지역 산업구조 분석과 산업 발전방향	임호열(한국은행)

2) 2006년 연구 성과

구분	발표주제	발제자
1차 연구회 2006. 1. 19	· 제1주제 -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정준호(국민경제자문회의)
	· 제2주제 - 8.31 부동산정책의 배경과 그 평가	김용창(세종사이버대학교)
2차 연구회 2006. 3. 23	· 주제 - FTA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재영(충남발전연구원)
3차 연구회 2006. 5. 23	· 제1주제 -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 경(목원대학교)
	· 제2주제 -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김홍기(한남대학교) 손주환(안정공업(주))
4차 연구회 2006. 7. 26	· 주제 - 한미 FTA 현안과 충남지역 경제의 영향	정세은(충남대학교)
5차 연구회 2006. 12. 6	· 제1주제 - 지역경영전략 측면에서 고찰한 일본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우리나라의 지역특화사업	염명배(충남대학교)
	· 제2주제 - 광역지자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초광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	강영주(충남발전연구원)

3) 2007년 연구 성과

구분	발표주제	발제자
1차 연구회 2007.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남 영상미디어센터 3개 기업체 	현장 방문
2차 연구회 2007.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미 FTA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1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와 충남지역 경제 · 제2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의 문제점과 충남의 대응과제 	김홍기(한남대학교) 김봉한(공주대학교) 정세은(충남대학교) 박 경(목원대학교)
3차 연구회 2007.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경기후퇴국면을 대상으로 	강영주(충남발전연구원)
4차 연구회 2007.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금융연구회 세미나로 대체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보상자금 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박창귀(한국은행)
5차 연구회 2007.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 종합관리 방안 	김기희(대전발전연구원)

4) 2008년 연구 성과

구분	발표주제	발제자
1차 연구회 2008. 2. 21	· 제1주제 - 충남지역 FDI 현황과 정책과제	김봉한(공주대학교)
	· 제2주제 - 충청지역의 산업연관분석	박창귀(한국은행)
2차 연구회 2008. 4. 24	· 제1주제 - 지역주택가격의 파급효과분석 : GVAR모형의 활용	김봉한(공주대학교)
	· 제2주제 - 최근 일본지역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박 경(목원대학교)
3차 연구회 2008. 7. 24	· 제1주제 - 참여정부 지역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영주(충남발전연구원)
	· 제2주제 -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박창귀(한국은행)
4차 연구회 2008. 9. 24	※ 한국은행 세미나로 대체 · 제1주제 - 광역경제권정책 하에서의 대전·충남지역 발전전략	박종찬(고려대학교)
	· 제2주제 - 대전·충남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금융의 역할	류덕위(한밭대학교)
5차 연구회 2008. 12. 4	· 제1주제 -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평가	정재호(목원대학교)
	· 제2주제 -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조복현(한밭대학교)

2008 지역경제연구 자료집

발행인 · 김용웅 / 편집인 · 신동호 / 편집간사 · 백운성

발행처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314-140)

연락처(임미라, 김윤아) · 041-840-1236, 1237 / 팩스 · 041-840-1229

<http://www.cnris.or.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